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기능 및 역량강화 방안

2024. 10.

영남대학교 균형발전연구소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2장 저출생 위기 환경 및 현황 분석	7
제1절 국가적 차원의 환경 분석	7
1. 정책적 측면의 환경 분석	7
2. 경제적 측면의 환경 분석	11
제2절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추진 현황	29
1.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및 필승전략의 대응체계	29
2. 완전돌봄	31
3. 일·생활균형제도	43
4.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관련 요약 및 시사점	45
제3장 국내외 저출생 대응 기관운영 및 정책사례 심층조사	48
제1절 국내 저출생 대응 기관운영 조사 분석	48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8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51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54

4. 경북연구원	59
5. 경북행복재단	60
6.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사례 시사점	63
제2절 주요 선진국 저출생 대응 정책사례 조사 분석	67
1. 프랑스	67
2. 스웨덴	84
3. 일본	92
4. 해외 저출산 대응 관련 사례 분석 시사점	101

제4장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저출생 극복 기능 진단 106

제1절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및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	106
1.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현행 조직운영체계	106
2.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 재설계를 위한 실증조사 및 분석	113
제2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최적화 방안	135
1. 조직 구성 최적화 방안	135
2. 인력 배치 최적화 방안	138
제3절 기능재정립에 따른 기관 명칭 조정(안)	139

제5장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 및 인력 재설계(안) 142

제1절 가칭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의 조직운영 방향	142
1. 조직운영 방향	142
제2절 가칭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의 조직 재설계	145

1. AS-IS 조직	145
제3절 조직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155
1.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155
2. 단기 성과평가 후 조직재정립	156
3. 경상북도 돌봄서비스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15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 교육, 사회 보장 등 사회 쉰 영역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더더욱 지방의 경우는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
- 국가 Agenda인 ‘저출생 완화·반등·극복’에 선제·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지원할 지역 전문 연구기관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저출생 문제는 생산인구의 지역 유출, 일자리·양육·주거 등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여 혼인 기피현상과 인구 자연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국가적 차원의 정책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저출생 문제의 다차원적 접근 부재로 인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은 미진한 상태임
 - 지금까지 경상북도 여성, 가족 등의 정책연구 및 집행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개발원의 기능·역량 강화를 토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차원적이고 구조화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경상북도는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24.5.13.)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24.6.19.) 등을 수립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고 있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1997년 설립된 이래, 경상북도의 여성 및 가족 관련 이슈와 동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경상북도 여성·가족 정책 구현 등에 있어서 면밀한 지원 및 협력 역할 등을 수행해오고 있음
 -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연구, 사업, 기획, 시설관리 등 기능 중심의 대부서 단위 직제로 재편하여 여성·가족·돌봄·다문화·일자리 관련 정책 연구 그리고 사업추진 등에 대한 현안을 발굴하고 당면 문제해결을 위하여 정책화 및 사업화 차원에서 효율적 기관운영 및 관리 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이전 ‘여성’ 과 ‘개발원’ 차원의 정책연구 및 집행 연계기능 수행에서 돌봄, 가족, 지역 소멸 등의 문제를 포괄·담당하는 기관 재정립을 바탕으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관련 효과적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싱크탱크 및 관리 협력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운영체계 및 기능 수행 등에 대한 필연적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과 연관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변화 진단을 통해 적정 조직 및 인력 재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음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경상북도 저출생 관련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및 조직 재설계(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조직운영 및 관리 영역 전반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 구체적으로 ① 대내·외 환경 분석, ② 국내·외 사례 심층 분석, ③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진단, ④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수행 기능 및 인력 적정화를 위한 내·외부 의견수렴 및 전문가 FGI조사, ④ 기능 재정립에 따른 조직운영 방향 그리고 지속적인 조직 발전을 위한 제안 등의 순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표 1-2 | 연구의 범위

구분	내용
지역적 범위	경상북도
대상적 범위	경상북도 본청 및 경상북도 시군 연구관련 부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시간적 범위	2024년
내용적 범위	저출생 극복을 위한 환경 및 정책 동향 국내외 관련 사례 심층 분석 연구 관련 이해관계자(업무담당 공무원,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시설운영 실무자, 학계 및 외부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조사 분석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저출생 극복 연계 기능수행 진단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 재편 및 인력 재설계(안)

- 첫째, 저출생 극복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 진단 및 분석
- 중앙정부 그리고 경상북도의 여성·가족 정책 그리고 저출산 정책 등에 대한 동향 분석과 더불어 경상북도 여성·가족·저출산 여건 변화 추이 등을 진단함. 나아가서 이와 관련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대응해야할 정책 환경 및 이슈 등에 대하여 예측 진단 및 분석 등을 도모함

- 둘째, 국내·외 관련 사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벤치마킹 심층 분석
 - 단순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저출산 개념에서 주민의 삶의 질 전반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확장하여 근원적이고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국내·외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 연계 심층 분석을 수행함

- 셋째,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수행기능 진단
 - 정책보고서, 내부자료, 각종 통계 데이터 등에 기초한 문헌 및 자료 등을 분석함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구성원, 돌봄기관 관계자, 돌봄기관 이용자, 관련 시·군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해 현행 돌봄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추진체계 재정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과 등을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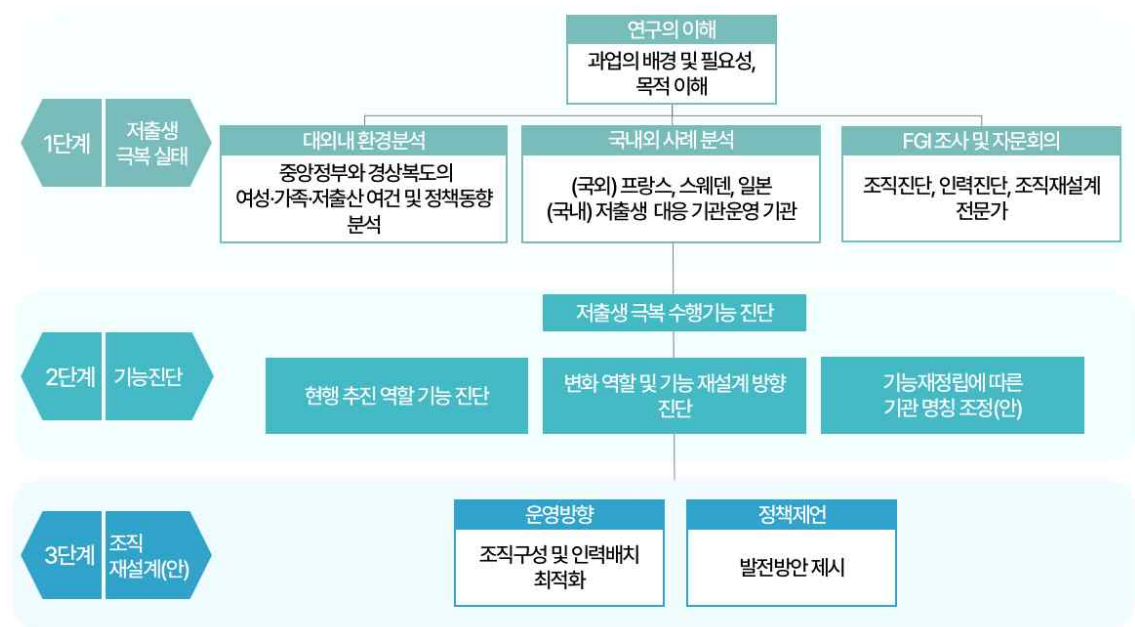
- 넷째,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변화 조직 및 인력 재설계(안) 제시
 - 가칭 “저출생 극복 실행기관”의 관련 수행기능 및 적정 인력 진단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조직 및 인력관리 관련 교수, 연구원 등)를 대상으로 FGI를 수행함
 - 연구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제안과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 마지막으로 조직 환경변화에 따른 현재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기관 명칭 변경(조정)을 제시하고자 함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흐름도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으며, 더

불어 본 연구 결과에 따른 기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 수행결과에 따라서 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 도정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본청 및 시·군 그리고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과 기능수행의 명확화 이외에도 실무 기관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한 한층 더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특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현행 수행기능 및 역할과 더불어 저출생 극복과 연관된 원활하고도 효과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돌봄 부서 이외에도 시너지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관련 조직 및 인력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현재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불가피한 조직 확대 및 기능 재편 등에 따라서 본 연구의 상세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부서 및 인력 적정화를 위한 조직 운영 및 관리의 최적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여성·가족·돌봄·저출생 극복 관련 경상북도의 선제적이고도 다각적인 정책 및 실행 내실화 노력 등의 추진 성과를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경상북도 브랜드 이미지 파워를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림 1] 연구흐름도

제2장 저출생 위기 환경 및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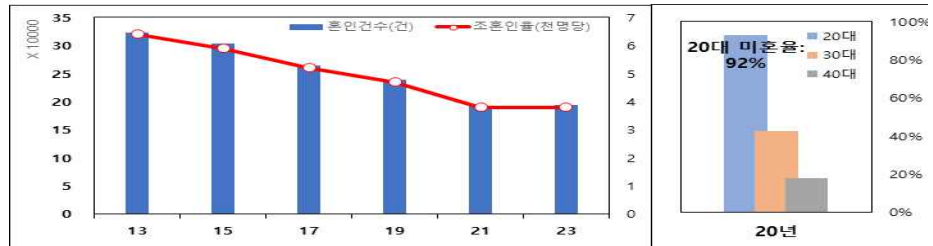
제1절 국가적 차원의 환경 분석

1. 정책적 측면의 환경 분석

1) 정부의 정책 전환 및 공감대 형성 실패

- 유례없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구조로 사회 전 영역에서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 정책 효과성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미진한 실정임(관계부처합동, 2024)
- 초저출생 극복의 국가적 차원의 공론화를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율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특히 20대의 혼인률은 8%에 불과하여 사실상 혼인 소멸이 진행 중임
 - 혼인기피 현상의 심화로 인하여 출산율은 더욱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혼인을 한다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음

〈그림 2〉 혼인율 추이 및 연령대별 미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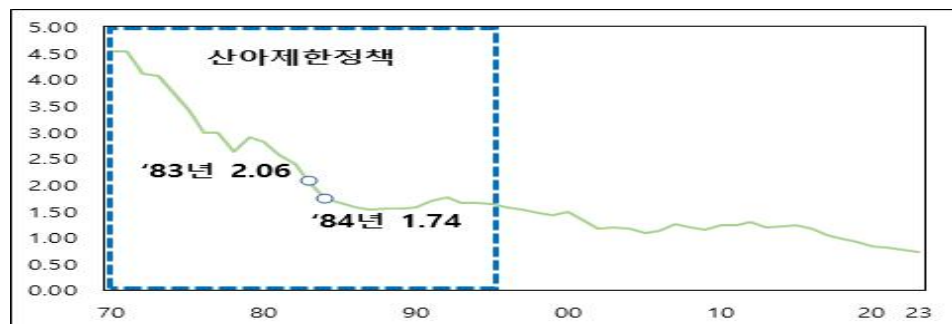


자료: 관계부처합동(2024)

- 혼인기피 현상과 무자녀부부가 급증으로 인해 출산율은 더욱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

○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인구정책 수립계획이 긴요하였으나 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침.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 중요성에 대한 단적인 예로는 산아제한 정책을 들 수 있음

- 1984년 이후 부터 대체출산율¹⁾이 1.0명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아제한정책은 계속 시행되었으며 결국 1996년에서야 공식 폐지됨(관계부처합동, 2024)



〈그림 3〉 정책 전환 골든타임 실패: 산아제한정책

자료: 관계부처합동(2024: 5)

1) 한 국가가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출산율을 의미함. 대체출산율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밑돌면 인구감소(人口減少)가 발생하게 됨. 일반적으로 대체출산율이 2.1명 미만 일 경우, 저출산 국가로 분류함. 우리나라는 1983년도에 이미 2.06명으로 2.1명 미만을 기록함

- 이러한 결과는 장래인구추이에 대한 파급효과성 분석 및 선제적 대응실패로 적시에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결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정부의 외국제도 관련 근시안적 대응 또한 저출생 관련 정책 실효성 확보를 막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한국의 저출생문제 발생 원인의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단순 외양(外樣)적 벤치마킹은 정책적 효과성 확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실패를 초래함(관계부처합동,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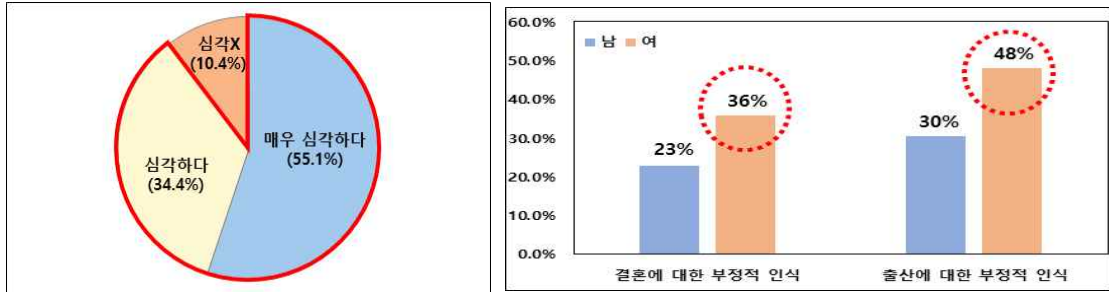
○ 현재 정부 저출생 극복 정책은 도시인구집중, 일가정양립을 위한 돌봄서비스 및 육아휴직 기간, 가족 관련 정부 지원정책, 주택문제 등의 문제를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관계부처합동, 2024). 즉, 저출생이 발생 되는 사회 구조적 원인 진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 됨

2) 저출생 구조적 원인과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4년 3월 29일 ~ 4월 3일까지 전국 25~49세 남녀 약 2천명을 대상으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시행함

-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은 남녀 모두 90%로 공감하고 있으나 결혼·출산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저출생 상황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 관계부처합동(2024: 10)

○ 응답자 61%는 결혼 의향이 있으나 경제적 사유로 결혼을 기피하고 있으며 결혼 의향이 없는 23%의 경우 남성은 경제적 부담, 여성은 역할 부담이 원인으로 작용함(관계부처합동, 2024)

- 따라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선행조건으로 남성의 경우 경제적 조건 개선, 여성은 일가정양립을 통한 경제활동 연속성이 중요함

○ 기혼 후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약 77.6 %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가정 및 시설 돌봄서비스 활용을 희망하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24). 특히 학교 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부모들의 다양한 돌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돌봄서비스가 질적·양적 개선 및 확대되어야 함(관계부처합동, 2024)

〈표 6〉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

단위: %

설문응답내용	전체	만 25~29세		만 30~39세	
		남	여	남	여
주거비용 마련	67.6	78.7	60.6	84.1	61.4
만족할만한 일자리	75.8	86.4	67.9	86.5	69.1
결혼비용 지원	65.0	79.9	58.3	77.3	58.1
결혼후에도 일에 열중 가능	76.5	82.4	79.4	82.8	75.9

자료: 관계부처합동(2024: 11)

○ 돌봄서비스 운용 효율성 및 이용자 접근도 제고를 위하여 지역단위로 one-stop 돌봄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인력·예산 등을 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국가적 차원, 지자체 차원 등 시급한 실정임(관계부처합동, 2024)

○ 종합하면 그 동안 정부가 시행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그리고 홍보 캠페인 등의 효과성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 따라서 저출생 연계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추진의 방향성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2. 경제적 측면의 환경 분석

1) 생산인구 감소

○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필연적으로 인구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며, 이는 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짐(박진우 외, 2021)

- 인구는 노동력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는 수요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인구의 양적·질적 성장은 결과적으로 경제성장과 불가분의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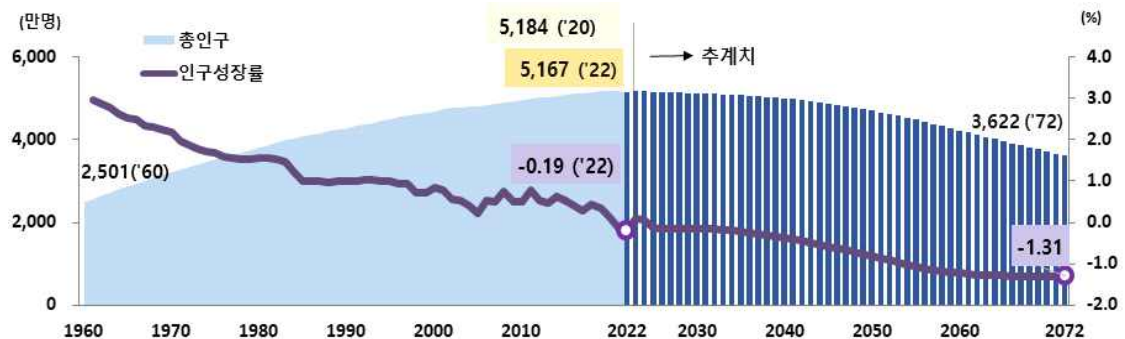
- 실제로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할 경우, 연평균 GDP는 0.3%, **총요소생산성**²⁾(total factor productivity 또는 multifactor productivity)은 0.07%, 노동

2)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또는 multifactor productivity)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노동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 등을 반영한 생산효율성 수치임. 생산과정 전체 효율성을 측정하려면 단일요소가 아닌 전체적인 투입요소를 측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총요소생산성을 말함. 이는 총요소 투입 당 산출량을 나타내며 기술과 노사관계, 경영체제 등의 요소가 반영돼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기술혁신을 뜻함. 총요소생산성성장률(TFP) = (경제성장률)-{α(노동투입성장률)+β(자본투입성장률)}

은 0.22%, 투자는 0.96% 감소하는 등 거시경제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박진우 외, 2021)

- 통계청 조사 결과 2022년 기준 총인구는 5,167만 명에서 2024년 5,175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30년 5,131만 명, 2072년 3,622만 명(1977년 수준)을 전망하고 있음(통계청, 2022)

<그림 6> 1960 ~ 2072년 총인구 및 변화 추계치



자료: 통계청(2022: 3)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는 국가 경쟁력 약화, 국내총생산 감소, 성장둔화, 소비감소 등의 문제점으로 요약할 수 있음. 생산인구 감소는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사회문제를 동반하게 됨(박준우·여찬구, 2021)
 - 연금고갈과 세대갈등,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존폐위기, 병력자원의 감소,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부동산 가격 급락, 인력난으로 인한 산업간 통폐합과 구조 조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박준우·여찬구, 2021)
- 생산연령인구는 2022년 3,674만 명에서 2030년 3,417만 명으로 감소,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2022년의 45.1%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음(전민엽, 2023)

-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2020년대는 연평균 32만명 감소, 2030년대는 연평균 50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정영철, 2024)

- 생산연령인구 중 15~24세 비중은 2022년 14.7%(539만명)에서 2072년 13.0%(215만 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통계청, 2024). 즉,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소년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로 유입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임(전민엽,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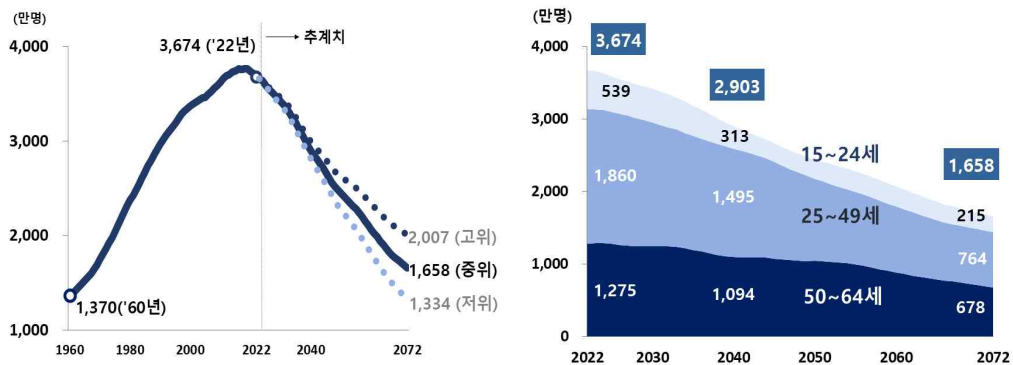
<표 7> 2022~2027년 생산연령인구 변화 추계치

시나리오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30	2040	2050	2060	2072
중위추계	총인구		5,167	5,171	5,175	5,168	5,131	5,006	4,711	4,230	3,622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71.1	70.7	70.2	69.5	66.6	58.0	51.9	48.9	45.8
	15-64세 인구	계	3,674	3,657	3,633	3,591	3,417	2,903	2,445	2,069	1,658
		15-24	539	525	511	493	467	313	268	276	215
		25-49	1,860	1,846	1,830	1,817	1,708	1,495	1,134	910	764
		50-64	1,275	1,285	1,292	1,282	1,242	1,094	1,043	882	678
	구성비	15-24	14.7	14.4	14.1	13.7	13.7	10.8	11.0	13.3	13.0
		25-49	50.6	50.5	50.4	50.6	50.0	51.5	46.4	44.0	46.1
		50-64	34.7	35.1	35.6	35.7	36.4	37.7	42.7	42.6	40.9
고위추계	총인구		5,167	5,172	5,185	5,188	5,215	5,244	5,095	4,740	4,282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71.1	70.7	70.2	69.5	66.3	57.1	51.5	49.3	46.9
	15-64세 인구	계	3,674	3,657	3,640	3,604	3,457	2,993	2,623	2,338	2,007
		15-24	539	525	513	495	471	322	327	352	283
		25-49	1,860	1,846	1,834	1,824	1,733	1,552	1,209	1,039	975
		50-64	1,275	1,285	1,293	1,285	1,252	1,119	1,086	947	749
	구성비	15-24	14.7	14.4	14.1	13.7	13.6	10.8	12.5	15.0	14.1
		25-49	50.6	50.5	50.4	50.6	50.1	51.8	46.1	44.4	48.6
		50-64	34.7	35.1	35.5	35.6	36.2	37.4	41.4	40.5	37.3
저위추계	총인구		5,167	5,171	5,166	5,150	5,051	4,774	4,333	3,742	3,017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71.1	70.7	70.2	69.5	66.8	58.9	52.5	48.4	44.2
	15-64세 인구	계	3,674	3,657	3,626	3,578	3,376	2,814	2,276	1,813	1,334
		15-24	539	525	510	490	462	306	217	202	155
		25-49	1,860	1,846	1,826	1,810	1,682	1,439	1,061	793	570
		50-64	1,275	1,285	1,290	1,279	1,231	1,069	998	817	609
	구성비	15-24	14.7	14.4	14.1	13.7	13.7	10.9	9.5	11.2	11.6
		25-49	50.6	50.5	50.4	50.6	49.8	51.2	46.6	43.8	42.7
		50-64	34.7	35.1	35.6	35.7	36.5	38.0	43.9	45.1	45.6

자료: 통계청(2022: 11)

- 생산연령인구 중 25~49세의 비중은 2022년 50.6%(1,860만 명)에서 2072년 46.1%(764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2023)
-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첨단산업 등 산업별 인력수급 부족이 심화되어 국가 경쟁력에 저성장 지속되어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표 8〉 생산연령인구 및 구조 변화 추계치



자료: 통계청(2022: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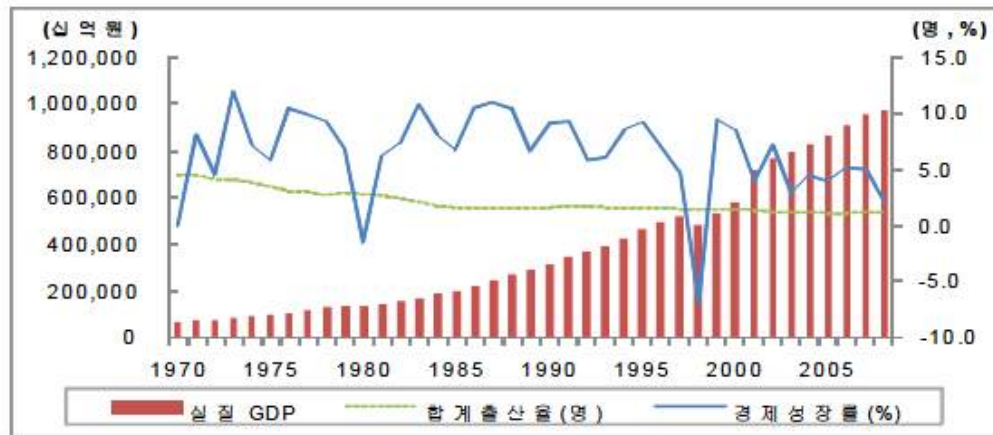
- 종합하자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문제는 국가 경쟁력 약화, 국내총생산 감소, 성장둔화, 소비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함(통계청, 2023)
 - 사회적으로는 연금고갈과 세대갈등,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존폐위기, 병력자원의 감소, 지방도시의 인구소멸, 부동산 가격 급락, 인력난으로 인한 산업간 통폐합과 구조 조정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관계부처합동, 2024)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당장 직면해 있는 현실적 과제이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다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실정임(박준우, 여찬구, 2021)

2) 여성 고용과 경제활동을, 주거비용

- 국가의 경제적 위기 상황과는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됨. 1997년 IMF후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점이 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임
 - 경제 위기상황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면

서 자녀 양육비용을 비롯한 전반적인 지출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조남훈 외, 2008)

<그림 9> 우리나라 GDP와 출산율 및 경제성장률



자료: 관계부처합동(2024)

○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가 주택비용임. 주택비용 부담문제는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하였다도 임신 지연 내지 소자녀 선호를 추동하는 사회경제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을 보면 2000년 1월을 100으로 잡을 때 2009년 말 전국 아파트 가격은 197.5로 증가한데 반해,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은 2000년 1분기 100에서 2009년 4분기 현재 169.4로 우리나라는 주택비용 상승을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는 추세임(매일경제, 2024.06.14.)³⁾

○ 우리나라 20~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정성이 크고 남성과 큰 격차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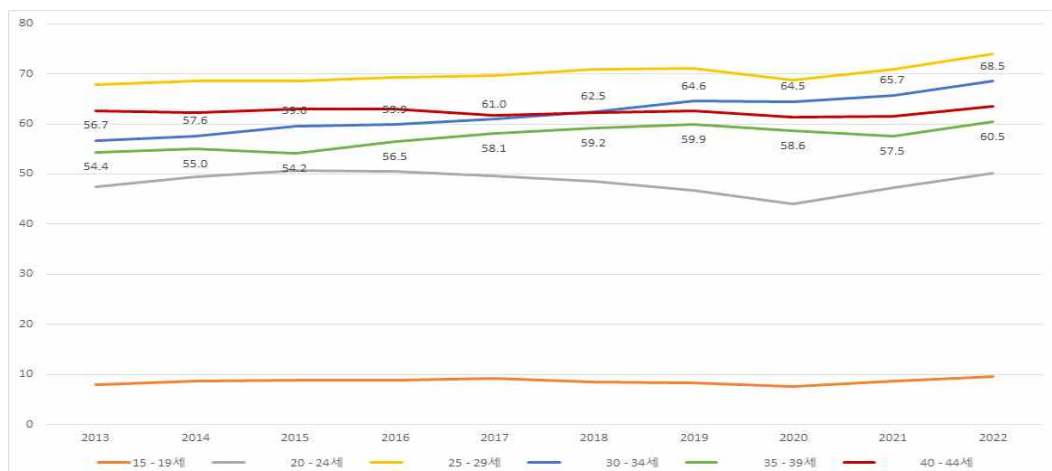
3) 이는 도시 근로자가 평균소득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린다는 의미를 가지며, 청년세대의 경우 30세 전후에 취업하였을 경우에 소득을 전부 저축한다는 전제하에 거의 50세가 되어야 겨우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할 정도가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함

- 과거에 비해 20~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증가했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은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입직·퇴직·이직 등이 활발하며 저임금 시장 진입 비중이 커서 실업률 또한 높은 편임(김이선·이상직 외, 2019)

○ 출산 연령이 상승하면서 30대 초반에 출산을 하는 여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30대 초반 여성 고용률 또한 증가하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24)

- 이는 30대 비혼 여성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여성 취업자와 비취업자간의 혼인율 및 출산율이 다를 것이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그림 10〉 여성 연령별 고용률 추이(2013년~2022년)



자료: 통계청(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성/근로형태별 임금근로자 규모 및 비중」

○ 청년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20대 후반 남성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자 비율은 98.3%이지만 같은 조건의 여성 취업자비율은 41.1%에 불과하다고 보고함(고용정보원, 2023)

- 자녀가 없는 남녀의 취업자 비율은 모두 62% 수준으로 비슷함. 즉, 자녀가 있는 비취업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눈에 띄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여성 고용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됨(고용정보원, 2023).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 여성의 고용률은 2016년 44.8%였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3년 52.3%로 나타남(전윤정, 2023)
 -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률은 높은데, 자녀연령이 7~12세보다 13~17세 일 때 고용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전윤정, 2023)
 - 반면 남성의 고용률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90%에 육박하고 있어 매우 큰 격차를 보임(전윤정, 2023)

- 종합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과거에 비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전윤정, 2023)
 -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하락하며, 자녀수는 1명일 때 가장 고용률이 높고 자녀의 연령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고용률 또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고용정보원, 2023)
 - 고용정보원(2023)은 성 평등한 노동시장 정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전윤정, 2023). 즉, 여성 고용률 제고, 여성의 출산 이후 일자리 복귀 보장, 성별직종 분리 완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해소, 경력 단절의 문제해결, 일자리의 질 개선 등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과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함(전윤정, 2023)

- 따라서 여성의 고용률 보장을 위해서는 어린 자녀들의 보육과 돌봄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점검하고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관계부처합동, 2024; 고용정보원, 2023)
 - 여성 중심의 육아휴직 사용, 낮은 일가정양립제도 수혜율, 초기 아동양육에 집중되어 있는 아동수당, 일회성의 출산장려금, 각종 가족친화정책 등 일회성이고도 구체적인 목표나 효과가 불분명한 단기적인 지원책은 지양하고 현

실적이고도 타당성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함(전윤정, 2023)

3) 사회문화적 측면의 환경 분석

1) 일·생활균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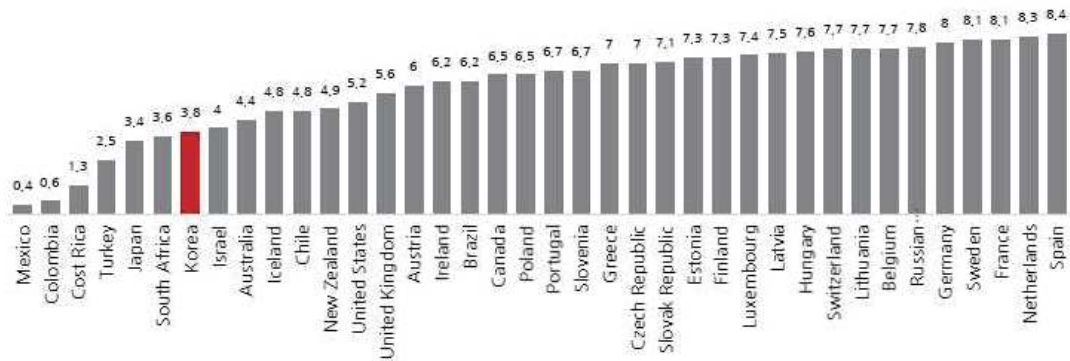
- 저출산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는 사회 전반에 조성된 사회문화적 영향 요인도 크게 작용함. 즉, 현재 일·생활균형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정착화의 현실적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임(김승권, 2004; 손홍숙, 2004)
- 일-생활 균형에 대한 논의 초기 단계에서는 생활이라는 범위가 가족으로 대표되었음. 일-가정 양립 등의 가족 문제에 대해 집중한 개념으로 사용되었음(변수정, 2022)⁴⁾. 현재는 가족을 포함한 생활 영역으로 확대되어 ‘일-생활 조화’, ‘워라벨’ 등 다양하게 일컬어지고 있음
- 최근 동향은 일·생활균형 논의가 주류적인 상황에서 일과 생활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탈피하고 서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관점의 ‘일·생활 통합’(Work Life Integration)이 강조되고 있음(김근주 외, 2021)⁵⁾

4) 변수정, 오신휘, 조성호, 김은정, & 이해정. (202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 김근주, 방준식, 이은주, 강주리.(2021). 일생활 균형제도의 법체계 현황과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OECD는 매년 ‘How’ s Life’ 를 통해 국가별 ‘더 나은 삶 지수’ (Better Life index)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조사에서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OECD, 2020)

- OECD의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 지표는 휴식 시간(time off), 장시간 무임금 노동시간(long unpaid working hours), 근로 시간의 성별 차이(gender gap in total hours worked), 시간 사용 만족(satisfaction with time use) 등을 포함함



자료: 김근주 외(2021), OECD 홈페이지(<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topics/work-life-balance/>)

[그림 11] OECD 국가별 일·생활 균형 지수

○ OECD 41개국 중 한국의 일·생활 균형 수준은 4.1점으로 콜롬비아, 멕시코, 터기에 이어 41개국 중 35번째로 가장 낮음(OECD, 2021)

- 주 50시간 이상의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 비율이 한국은 19.7%로 0.1%인 러시아(1위)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으로 41개국 중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37위였음(김근주 외, 2021)
- 여가 및 개인 생활에 보내는 시간은 14.8시간으로 41개국 중 25위로 1위인 이탈리아는 16.5시간이었음(김근주 외, 2021)

- 따라서 일·생활 균형은 저출산 문제 극복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임(박중서, 2017)
 - 근로자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기의 모성보호와 경력 단절을 방지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자녀 양육기의 가족생활 보장이 필수임

- 대표적인 일·생활 균형 정책으로 유연근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동료근로자 지원,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제공 등이 있음(고용노동부, 2023)

- 결혼 및 육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합동, 2024)
 - 응답자 대부분은 주거·일자리 등의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 균형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함(데일리안, 2024.05.2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생활 균형제도 미활용 사유에 대해서는 경력상 불이익이 89.1%, 1순위, 2순위는 사내눈치 등의 조직 문화 87.4%로 나타나 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합동, 2024)
 -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고 안심하고 아이를 보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함



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그림 12] 일·생활 균형을 통한 고용-돌봄 선순환 체계

- 통계청(2022)의 신혼부부통계에서도 육아시간 확보를 위한 직장 내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음. 이는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표 9> 일·생활균형제도 미활용 사유

일가정 양립제도 미활용 사유	비율(%)
인사상 불이익 염려	89.1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87.4
육아휴직기간의 소득감소	84.6
육아휴직 등으로 동료 등에게 폐를 끼칠까봐	80.9
커리어 개발 등 일을 계속 하고 싶어서	79.1
신청했으나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서	66.0

자료: 관계부처합동(2024)

○ 맞벌이 부모의 경우 일·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육아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유연근무제 형태를 자녀의 연령대별로 조사한 결과 자녀가 12개월 미만일 경우 72.7%가 육아휴직 선호하며 자녀가 초등학교학년일 경우 88.2%가 유연근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관계부처합동, 2024)

〈표 10〉 자녀 연령대별 선호제도

출생~12개월	72.7	5.3	22.6
12~24개월	34.9	28.7	36.5
24~36개월	11.3	32.3	56.5
만3~5세	3.1	29.8	67.1
초등저학년	5.6	18.9	75.5
초등고학년	0.8	10.1	88.2

■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유연근무

자료: 관계부처합동(2024)

○ 유자녀 취업자 응답자 대상 양육 시기(자녀 월령)별 이용하기 원하는 육아지원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평균 기준, 자녀 생후 3개월까지는 출산휴가 사용이 가장 높음(김지현 외, 2024)⁶⁾

○ 4~18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사용이 가장 높으며, 19~3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율이 가장 높으며, 만3세~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시차출퇴근 및 선택근무제의 이용 의향 비율이 높은 전반적인 추세를 보임(김지현 외, 2024)

- 성별 간 선호 비율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남
- 특히, 만5세에 8.1%까지 감소된 육아휴직 비율이,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15.1%로 증가하고, 만5세에 13.7%였던 원격근무제 이용 의향이 19.3%로 증

6) 김지현, 배윤진, 김문정. (2024).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가함(김지현 외, 2024)

2) 일·생활균형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전달체계 구축

- 다수의 근로자 및 기업들에게 각종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일·생활균형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강권오 외, 2023)⁷⁾
 - 현재 일·생활균형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서비스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 구축을 시도하고 있음(강권오 외, 2023)
- 이러한 변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주민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일 생활 균형의 서비스 영역이 직장생활, 가족생활, 육아환경 뿐만 아니라 여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강권오 외, 2023)
 - 즉,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수요, 또한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강권오 외, 2023)

7) 강권오, 고지영, 남윤섭. (2023), 제주지역 일·생활균형 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방안

〈표 11〉 타 지자체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현황(2024. 10. 7. 기준)

운영 형태	지역	명칭	운영기관	인력 구성	설치 연도
센터	서울	서울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서울시여성가족재단	6명 (총괄 1명, 팀원 5명)	2014
	부산	부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4명 (센터장 1명, 전담인력 3명)	2018
	대구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대구광역시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5명 (센터장 1명, 팀장 2명, 주임 2명)	2015
	광주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광주광역시일·가정양 립지원본부 (시 사업소)	3명 (센터장 1명, 노무사 1명, 팀원 1명)	2000
	전남	전남일·생활균형지원센터	전남여성가족재단	3명 (센터장 1명, 팀원 2명)	2020
	제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5명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2016
	울산	울산일·생활균형지원센터	(재)울산광역시복지 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인력구성중	
사업	경북	가족친화인증기업육성사업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사업TF팀	5명 (연구원 2명(겸직), 팀원 3명)	2020
	전북	일·생활균형지원사업	전북여성가족재단 취업지원팀	4명 (부장 1명, 주무관 1명, 전담인력 2명)	2023

자료: 경상북도 내부자료(2024), 직접인용

- 현재 일·생활균형제도 문화 정착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제주, 울산을 포함한 7개 지역에서는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운영 중임(강권오 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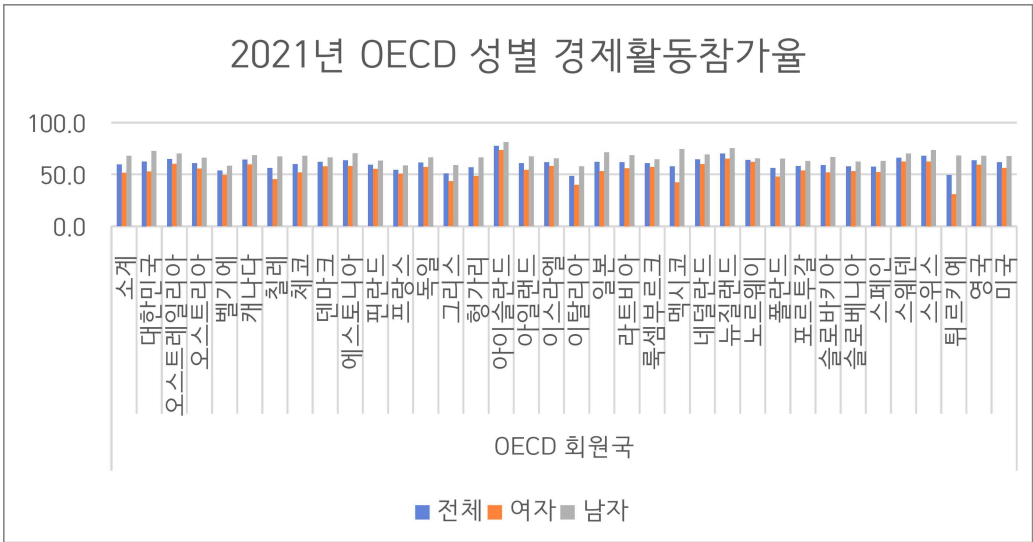
- 최근 일·생활균형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신설하거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음(강권오 외, 2023)
-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등 다수의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신설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관련 업무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일·생활균형 지원센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강권오 외, 2023)

4) 글로벌 시각 측면의 환경 분석

1) OECD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소득 불평등

- OECD 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이 여성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지역 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성별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 간 실업률 성별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EBN산업경제, 2022.04.14.)
- OECD 국가 전 지역에서 남성 경제활동인구가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24개 국가 중 8번째로 지역 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격차가 나타남(EBN산업경제, 2022.04.14.)
-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는 리투아니아(2%포인트)였으며, 핀란드(3.2%포인트), 이스라엘(3.3%포인트), 스웨덴(4.1%포인트) 등으로 나타남(김태환 외, 2021)
-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한국보다 큰 나라는 이탈리아(18.2%포인트), 칠레(20.6%포인트), 코스타리카(23.8%포인트), 콜롬비아(24.9%포인트), 멕시코(32.4%포인트), 튀르키예(39.6%포인트)로 나타남(김태환 외, 2021)
- OECD가 발표한 2021년 '성별 및 연령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만

15~64세 기준)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9.9%로, OECD 국가 평균인 64.8%에 미치지 못함(김태환 외,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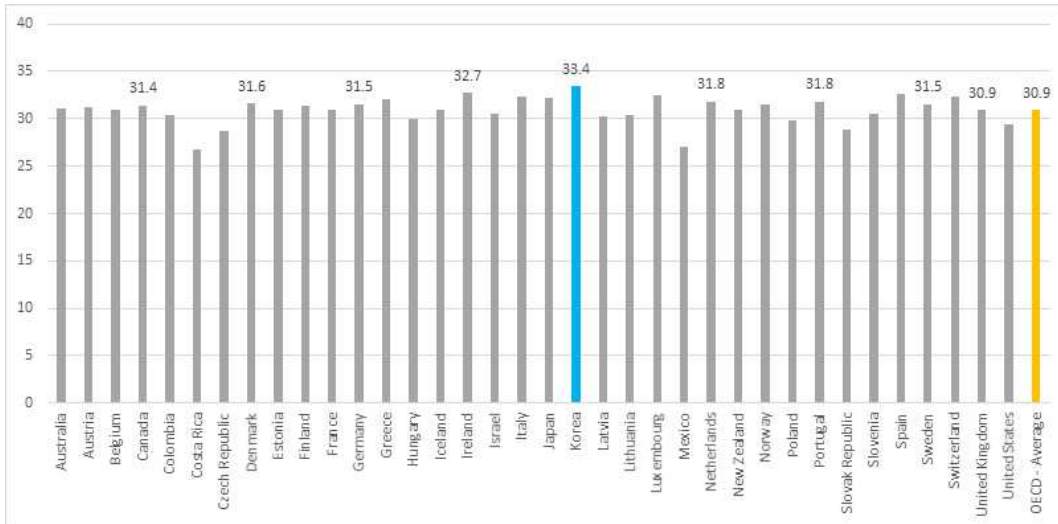
[그림 13] OECD 회원국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향후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지역 간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김태환 외, 2021)

2) OECD 국가 출산 동향

-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연령은 OECD국가들 중 가장 높은 33.4세임. OECD평균 30.9세 보다 2.5세가량 높고, 대부분의 국가가 30~31세 사이에 출산연령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높은 수준임(KBS뉴스, 2024. 06. 21)

〈그림 14〉 2021년 OECD국가 여성의 출산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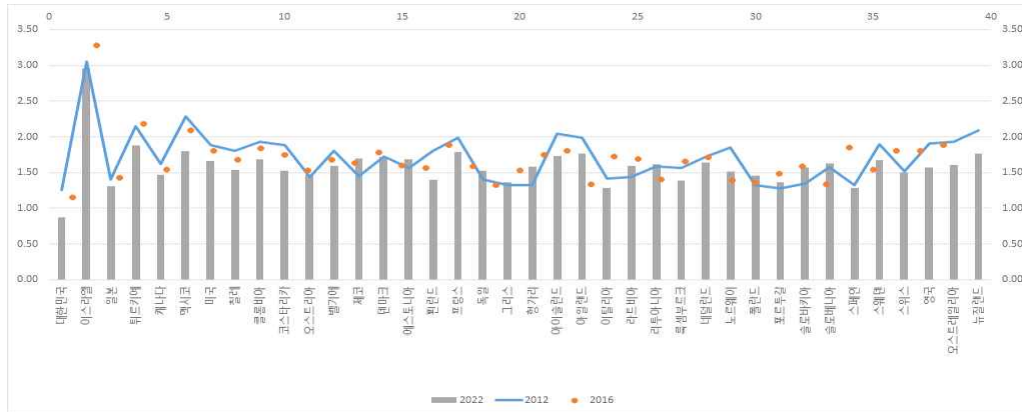


자료: OECD통계(2021). 「Family Database 「The structure of families」

○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면 2012년, 2016년, 2022년까지 많은 국가들의 합계출산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전윤정, 2023)

-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튀르키예 1.88, 멕시코 1.8, 프랑스 1.79이며 2021년 기준 아이슬란드 1.82, 덴마크 1.72, 스웨덴 1.67, 뉴질랜드 1.64 등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일본 1.3, 이탈리아 1.25, 스페인 1.19 수준으로 낮은 국가에 속함(전윤정, 2023)

〈그림 15〉 OECD국가 합계출산율(2012년, 2016년, 2022년)



에서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가족지원과 함께 안정적이고 다양한 육아 환경 구축으로 전환함(관계부처합동, 2024)

- 돌봄서비스에 대한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개발이 이뤄짐(김형구, 2023). 부모의 이용 편의성을 위해 근거리 원칙의 소규모 시설을 설립하고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 시행하고 있음(김형구, 2023)
- 정부 주도의 집단보육을 시행하여 자녀의 연령에 맞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김형구, 2023). 프랑스는 현재 6세까지 접할 수 있는 정부 주도 기관 보육시설을 11가지 유형으로 설립하여 운영 후 2021년 EU 내 인구증가율 1위로 반등하는 성과를 보임(김형구, 2023)

○ 일본은 단순 현금성 지원의 정책실패를 경험 후 어린이가정청을 설립하고 저출산 대책을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추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과 일가정양립제도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 중에 있음(관계부처합동, 2024)

-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추세와 고령화 진입 속도가 일본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 실정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실행방안(예: 돌봄서비스 확대 및 탄력적 운영 내실화)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제2절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추진 현황

1. 경상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및 필승전략의 대응체계

○ 경상북도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북대표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저출생 극복과 관련하여 1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

을 투입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구현하고자 함(경상북도보도자료, 2024. 05. 14)

〈그림 16〉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 필승 전략 추진 체계



자료: 뉴스핌(2024.05.1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40513001299>, 검색일: 2024. 09. 13.)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필승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환경 개선과 문화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할 계획을 수립함(경상북도보도자료, 2024. 05. 14)
-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지방 주도의 전순환 정책 과제를 제시함. 개인의 행복 증진 단계에서 공동체 행복 증진 단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

주선, 행복출산,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의 6개 중점과제를 설정한 바가 있음

2. 완전돌봄

- 경상북도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공적 돌봄 제도 정착 및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여성정책개발원(2024)의 경상북도 보육 실태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경제활동 시간에 보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즉, 경제활동 시간 동안 아이 돌봄의 책임이 여성에 더 높게 주어지 이는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제약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또한 경상북도 22개 시군 모두 높은 비율로 어린이집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경북도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활용의 편의성 확보 등과 연동하여 각 시군 상황에 맞는 돌봄 및 보육 지원의 고려가 필요함

<표 13> 경상북도 남녀 경제활동시간 이이돌봄 방식 현황(2024년 기준)

(단위: %)

시군	성별	본인또는배우자	부모님 이나 친인척	어린이집	유치원
포항시	남자	15.9	2	52.2	29.9
	여자	0	0	54.5	37.5
경주시	남자	21.8	6.8	49.7	21.8
	여자	10.6	9.1	71.2	9.1
김천시	남자	23.1	0	44.3	32.6
	여자	0	0	61.9	38.1
안동시	남자	24.5	0	46.3	29.2
	여자	15.2	0	60.7	24.1
구미시	남자	17.4	0.8	42	39.4
	여자	20.8	3.9	40.8	34.4
영주시	남자	14.6	2.2	42.7	40.5
	여자	51.1	0	24.5	24.5
영천시	남자	30.8	0	45.9	23.3
	여자	0	0	48.6	51.4
상주시	남자	12.8	2.6	48.7	35.9
	여자	16.8	16.8	50	16.5
문경시	남자	17.7	3.1	65.8	10.2
	여자	50	0	0	50

(단위: %)

시·군	성별	본인또는배우자	부모님 이나 친인척	어린이집	유치원
경산시	남자	21.9	1.2	44.4	32.6
	여자	31.4	0	37.1	31.4
의성군	남자	0	15	57.5	27.5
	여자	0	0	0	0
청송군	남자	30.1	0	53	16.9
	여자	50.5	0	16.5	33
영양군	남자	8.2	0	57.4	34.4
	여자	0	0	0	0
영덕군	남자	16	12.1	71.9	0
	여자	0	0	38.4	61.6
청도군	남자	15.7	4.4	41.9	38
	여자	50	0	50	0
고령군	남자	24.6	0	67	8.4
	여자	25	0	0	25
성주군	남자	21.2	0	54.5	24.3
	여자	0	0	100	0
칠곡군	남자	24.1	0	51.4	24.5
	여자	0	0	81.6	18.4
예천군	남자	25.2	0	55.7	19.1
	여자	0	0	66.7	33.3
봉화군	남자	27.7	0	61.9	10.4
	여자	0	0	100	0
울진군	남자	21.3	1.7	65	12
	여자	0	0	100	0
울릉군	남자	32.4	0	51.4	16.2
	여자	0	0	0	100

자료: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통계사이트(<http://gs.forwoman.or.kr>, 검색일: 2024. 09. 13)

-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상북도는 온종일 완전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시범 조성하여 운영 중임. 기존 운영 중인 돌봄시설의 기능 강화 및 신규 설치를 통해 기능 강화를 추진 중임
 - 지역 여건에 따라 특색 있게 조성하여 도시형, 농촌형, 산단 특화형 등으로 구분함. 경북에서 시범 운영 후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기존 돌봄 기관 등과의 상생을 위하여 보완형, 현장 수요중심 신규 설치형으로 two track으로 추진함
 - 이를 통해 6대 돌봄 특화 서비스인 순환형 돌봄버스를 통하여 안심 귀가길

제공, 돌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학교돌봄센터와 같은 안전 이동 서비스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돌봄서비스 추진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 경상북도 지역사회 내 돌봄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활성화, 돌봄 네트워크 강화 내용을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준비 중임

<그림 17> 경상북도 마을돌봄서비스 추진체계



○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족 내 돌봄 기능 약화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자녀 양육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형성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 운

영됨

-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아이들 성장과 발달을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함(여성정책개발원, 2024)
- 경상북도 공동육아나눔터는 2023년 기준 총 36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여성정책개발원, 2024)

〈표 14〉 경북형 완전돌봄 K-보듬 지정 시설현황

시군명	시설유형	시설명	비고
포항시 (7개소)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집 신규(아파트1층) 신규(아파트1층)	포항시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햇빛고을마을돌봄터 파란지역아동센터 시립힐스테이트포항어린이집 포항시북구청어린이집 미정 미정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안동시 (7개소)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집 신규(아파트1층) 신규(아파트1층)	안동시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미정(옥동) 안기꿈터지역아동센터 안동하나어린이집 하늘채어린이집 미정 미정	10월 설치예정
구미시 (14개소)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신규(아파트 1층) 신규(아파트 1층)	구미시 공동육아나눔터 꿈도담터 구미24시 마을돌봄터 구평영무마을돌봄터 봉곡편한마을돌봄터 옥계우미린마을돌봄터 산동24시 마을돌봄터 새마을24시 마을돌봄터 문성24시 마을돌봄터 샘터지역아동센터 시립금오어린이집 시립예향어린이집 시립원호센터컬파크 어린이집 미정(원호리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미정(원호리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시군명	시설유형	시설명	비고
경산시 (7개소)	공동육아나눔터	경산시 하양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산시 계양돌봄터	
	지역아동센터	진량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시립중산하늘채어린이집	
	어린이집	시립사동1단지어린이집	
	신규(아파트1층)	하양 우미린 에코포레돌봄터	
	신규(아파트1층)	시립 하양 에코어린이집(에코포레)	
예천군 (7개소)	공동육아나눔터	예천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아이킨움 마을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우방센텀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국공립 호반2차 어린이집	
	어린이집	성락어린이집	
	신규(아파트1층)	동일스위트 마을돌봄터	
	신규(아파트1층)	미정(동일스위트)	
총계: 42개소			

자료: 경북도내부자료(2024), 연구자재구성

-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사업임(서정아, 2022)
- 경상북도의 다함께돌봄센터는 2024년 기준 총 71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표 15> 2024년 경상북도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

시군구	센터명
71개소	
포항시(7)	포은마을돌봄터
	양덕아이꿈섬마을돌봄터
	꿈을 따는 마을돌봄터
	송도 행복 마을돌봄터
	햇빛고을마을돌봄터
	우현풍림마을돌봄터
	포항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구룡포 꾸러기 마을돌봄터)
경주시(8)	도담도담마을돌봄터
	강동무지개마을돌봄터
	꿈꾸는마을돌봄터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아이신나마을돌봄터)
	경주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숲이랑마을돌봄터)
	성건행복마을돌봄터

시군구	센터명
김천시(2)	황성동사랑마을돌봄터
	안강 행복 마을돌봄터
	꿈자람마을돌봄터
	황산마을돌봄터
안동시(5)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용상제일마을돌봄터)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모여라마울돌봄터)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누리마을돌봄터)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마을돌봄터)
	안동시 다함께돌봄센터(꿈자람마을돌봄터)
구미시(11)	산동24시 마을돌봄터
	구미24시 마을돌봄터
	옥계에덴 마을돌봄터
	옥계우미린 마을돌봄터
	봉곡e편한 마을돌봄터
	옥계중흥 마을돌봄터
	도개마을돌봄터
	공단파라디아마을돌봄터
	옥계세영마을돌봄터
	구평영무마을돌봄터
	도량마을돌봄터
영주시(3)	영주시 룰루랄라마을돌봄터
	영주시남산선비마을돌봄터
	영주시 희망나무 마을돌봄터
영천시(4)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금빛 마을돌봄터)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별빛 마을돌봄터)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라운 마을돌봄터)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문외센트럴 마을돌봄터)
상주시 (1)	상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문경시 (1)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경산시(4)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एको포레마을돌봄터)
	경산시다함께돌봄센터3호점 꽃재마을돌봄터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계양돌봄터)
	경산시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의성군(4)	의성군다함께돌봄센터 (단복키움마을돌봄터)
	의성군다함께돌봄센터(봉양마을돌봄터)
	의성군다함께돌봄센터(의성키움마을돌봄터)
	의성군다함께돌봄센터(안계보듬마을돌봄터)
청송군(1)	부남다함께돌봄센터
영양군(1)	영양군 다함께돌봄센터
영덕군(2)	영덕군 다함께돌봄센터 영덕마을돌봄터
	강구 마을돌봄터
청도군(3)	드림마을돌봄터
	도담도담마을돌봄터(청도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나래마을돌봄터(청도군다함께돌봄센터1호점)
고령군(2)	대가야읍 다함께돌봄센터
	고령군 다함께 돌봄센터(다산면 마을돌봄터)
성주군(1)	성주군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칠곡군(2)	칠곡군 다함께돌봄센터 석적마을돌봄터

시군구	센터명
	칠곡군 다함께돌봄센터 북삼마을돌봄터
예천군(6)	아이사랑 마을돌봄터
	아이키움 마을돌봄터
	호반2차마을돌봄터
	우방센트럴 마을돌봄터
	동일스위트 마을돌봄터
	우방센텀 마을돌봄터
봉화군(1)	물야별솔마을돌봄터
울진군(2)	후포면 다함께돌봄센터
	울진군 다함께돌봄센터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s://dadol.or.kr>), 연구자 재구성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의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시설임
-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며 이용 시간은 센터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학교 방과 후 ~ 부모 귀가 시간까지 운영됨
- 경상북도의 지역아동센터는 2023년 기준 총 272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표 16> 2023년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현황

시군명		대상자별	시설유형
합계 경상북도			272개소
1	포항시	아동	64
2	경주시	아동	28
3	김천시	아동	12
4	안동시	아동	11
5	구미시	아동	47
6	영주시	아동	10
7	영천시	아동	7
8	상주시	아동	8
9	문경시	아동	9
10	경산시	아동	22
11	의성군	아동	7
12	청송군	아동	3
13	영양군	아동	3
14	영덕군	아동	4
15	청도군	아동	2
16	고령군	아동	5
17	성주군	아동	4

18	칠곡군	아동	12
19	예천군	아동	7
20	봉화군	아동	2
21	울진군	아동	1
22	울릉군	아동	1

자료: 경상북도 도청홈페이지(<https://search.gb.go.kr>. 검색일: 2024. 09. 13), 연구자 재구성

- 기존 초등 방과후와 돌봄은 오랫동안 공간·인력·비용·이용 방식 등이 서로 다른 별개로 분리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됨(교육부, 2024)
 - 공간 등이 달라 같은 시간에 방과후교실과 돌봄 중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음에도, 둘 다 신청하는 중복 비효율 발생(교육부, 2024)

〈표 17〉 초등학교 방과후교실과 돌봄 비교

구분	방과후교실	돌봄
공간	일반교실, 특별실 등	돌봄교실
인력	교원, 외부강사	돌봄전담사, 외부강사
비용	수익자 부담	무료
이용방식	프로그램별(1~2시간) 신청·이용	단일신청, 오후 내 이용(주로1~5시)

자료: 교육부(2024)

- 이에 경상북도는 늘봄학교 지원을 통해 분리된 방과후수업과 돌봄체제를 늘봄학교로 통합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추진함
 - 2023년 41개가 개교하였으며 24년 경북도 내 476개교 중 1학기 180개교를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아침 늘봄은 07:30~09:30, 오후 늘봄은 13:00~17:00, 저녁늘봄 17:00 ~20:00까지 운영함. 등하교 시간 순찰 강화 및 안전 인력지원, 아이 안심길 플랫폼 등을 추진함
- 학교에서는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도 교육청과 전방위 협업하는 ‘경북형늘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늘봄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중에 있음(경상북도 내부자료, 2024)
 - 특히 도내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퇴근돌봄’도 선도적으로 도입함(경상북도 내부자료, 2024)

-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아픈아이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돌봄’을 더욱 강화해 ‘쫄쫄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마련함(경상북도 내부자료, 2024)

<그림 18> 경북형 새돌봄 추진체계



자료: 경상북도(2024) 내부자료, 직접인용

- 중기적으론 기존 돌봄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합해 돌봄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안전돌봄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단 등에 거점형돌봄센터 및 All in

One Total 교육센터설치, 영아교육과 신설 등 돌봄기반을 규모화하고 공공성도 높여 나갈 방침(경상북도 내부자료, 2024)

- 경북도는 농촌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보육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운영 지원으로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경상북도, 2024)
 - 2024년 1월 ~12월까지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과 위탁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1,015백만원(국비 534, 도비 144, 시군비 337백만원)을 투입함
- ‘농촌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 ‘찾아가는 돌봄교실’은 놀이차량으로 농촌지역을 방문하여 장난감 및 도서 대여, 육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추진을 계획 중임(경상북도 내부자료, 2024)

<표 18> 경북 온종일 완전돌봄사업 세부내용

① 경북형 학교 늘봄	▶ (시행) 지자체 최초 도-교육청 협업 모델 - 아침~오후~저녁 돌봄까지 협업 운영 ▶ (공간) (우선) 교실, 특별실 등 활용 → (향후)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 ▶ (인력) 안전 인력(소방, 경찰 등), 봉사단체 등 지역공동체 적극 활용 ▶ (특화) 시 기반 순환셔틀버스, 돌봄 통합 정보시스템, 친환경 간식 등 - 늘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공간, 인력, 프로그램, 간식, 이동 지원 등 전 분야 협업
② 조기 퇴근 돌봄	▶ (업무협약) 육아기 단축근무 동참 - 경북상공회의소, 경북경영자총협의회, 가족친화 경영실천 민관협의체 등 도내 기업체 ▶ (지원대책) 기업-근로자 함께 지원 - 기업: 중소기업 운전 자금 이자 지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근로자: 임금 지원(정부 지원금 미지급분 구간 보전 검토 등)
③ 심야 돌봄	▶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 - 연간 2,500여명 양성, 양육 공백 발생가정 지원 - 지역대학 협업 (가칭) 영아교육과 신설, 돌봄 인력 양성 등

	▶ 24시 어린이집, 아픈아이 긴급돌봄 - 도내 3개소 → 전 시군 확대 ▶ 119 아이 행복 돌봄터 - 소방서내 연중 운영, 도내 21개소 → 전 시군 확대 ▶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 119안전센터의 야간·휴일 취약 시간대 응급처치·병원이송 서비스 ▶ 영아교육과 신설 등(지역대학 협업)
--	---

출처: 경상북도 내부자료(2024)

- 2024년 7월에 시작하여 포항, 안동, 구미, 경산, 예천을 시범 시군으로 선정하여 총 38개소 43개 시설을 개소함(경상북도, 2024)
 - 공동육아나눔터 5개, 다함께돌봄센터 12개, 지역아동센터 4개, 어린이집 12개, 신규 설치형 5개를 설치하여 약 1,235명의 아동을 평일 9시~24시, 주말은 9시~18시까지 운영함
 - 총사업비 8,952백만 원을 경북도에서 4,548백만 원 그리고 시군에서 4,404백만 원을 지원함

- 기존의 지정된 돌봄시설 운영 시간을 24시까지로 연장하여 운영함. 또한 신규 설치형의 경우 아파트 1층 등을 매입하여 영유아~초등생까지 한 장소에서 온종일 공동체 돌봄이 가능하도록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를 동시에 설치 운영함

〈표 19〉 경상북도 돌봄공동체 우리동네 돌봄마을 조성 사업(시범 운영)

(단위: 백만 원)

구분		사업비			총 38개소						비고 (도:시군)
		계	도	시군		포항	안동	구미	경산	예천	
합계		8,952	4,548	4,404	계	6	7	13	7	5	5:5
기존 돌봄시설 활용형	공동육아나눔터	380	190	190	5	1	1	1	1	1	5:5
	다함께돌봄센터	720	360	360	12	1	1	7	1	2	5:5
	지역아동센터	240	120	120	4	1	1	1	1	-	5:5
	어린이집	852	498	354	12	2	3	2	3	1	5:5
신규시설 매입	신규설치형	6,760	3,380	3,380	5	1	1	1	1	1	5:5

출처: 경상북도 내부자료(2024)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의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시설임(이혜영, 2011)
- 보호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 상 아직은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아동, ②차상위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부모 가정 아동, ③기타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등이 우선이 됨(이혜영, 2011)
- 이용 시간은 센터별로 상이 하나 학교 방과 후~부모 귀가 시간까지 운영됨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과 가정 사정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가 원칙임(이혜영, 2011)

〈표 20〉 2023년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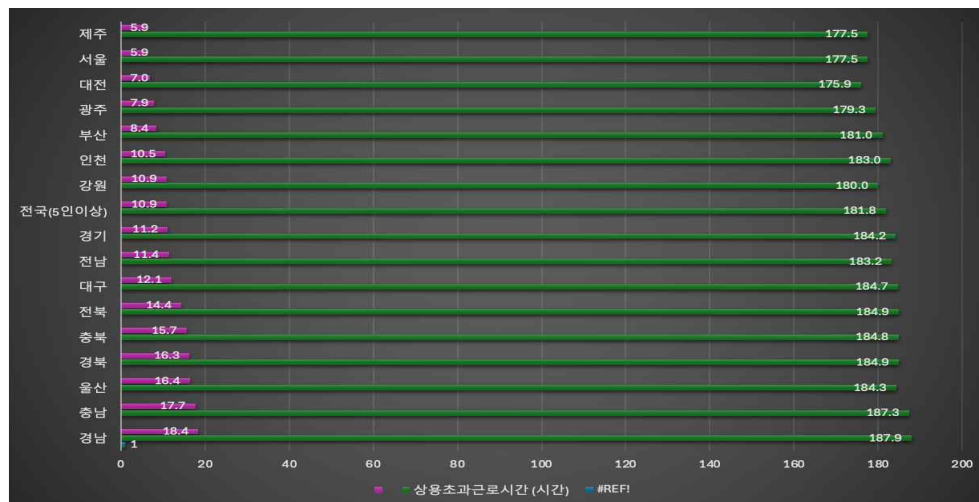
시군명		대상자별	시설유형
경상북도 합계			272개소
1	포항시	아동	64
2	경주시	아동	28
3	김천시	아동	12
4	안동시	아동	11
5	구미시	아동	47
6	영주시	아동	10
7	영천시	아동	7
8	상주시	아동	8
9	문경시	아동	9
10	경산시	아동	22
11	의성군	아동	7
12	청송군	아동	3
13	영양군	아동	3
14	영덕군	아동	4
15	청도군	아동	2
16	고령군	아동	5
17	성주군	아동	4
18	칠곡군	아동	12
19	예천군	아동	7
20	봉화군	아동	2
21	울진군	아동	1
22	울릉군	아동	1

자료: 경상북도 도청홈페이지(<https://search.gb.go.kr>. 검색일: 2024. 09.13)

- 경상북도는 돌봄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음
- 경상북도 지역사회 내 돌봄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활성화, 돌봄 네트워크 강화 내용을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음

3. 일·생활균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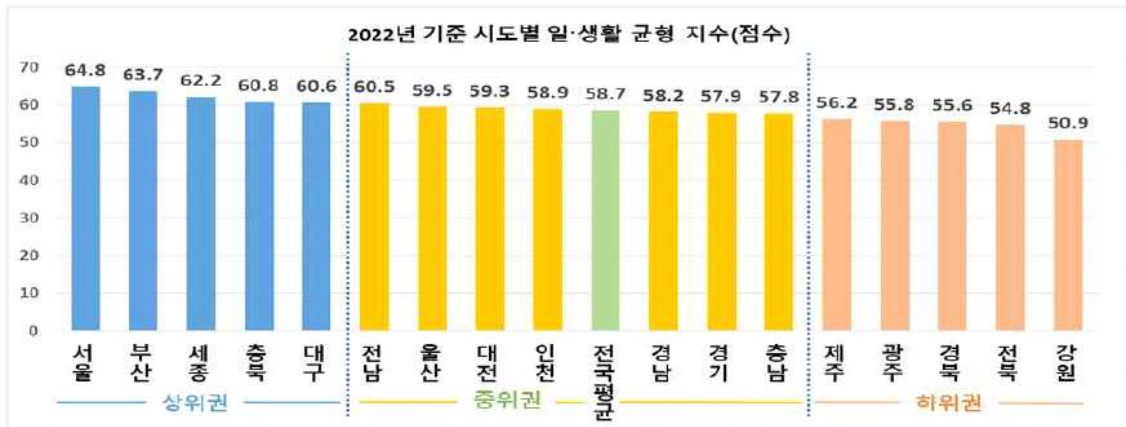
-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을 찾는 것이 국제적인 이슈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력 감소의 주요 해결방안으로 주목 받고 있음
- 하지만,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 평균(1천 764시간)보다 305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노동시간이 높은 국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평균근로시간이 가장 낮은 독일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2019),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MON049&conn_path=I2, 검색일: 2024.10.04.),

[그림 21] 2019년 지역별 근로시간 및 초과 근로시간

- 경북지역 산업체 근로여건은(근로시간, 휴가기간, 근로환경 등)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하며 경북지역 근로자 한달 총 184.9시간으로 이는 전국 4위 수준이며 초과 근로시간 16.4시간 전국 평균 10.9시간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 (경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https://nkyungbuk1.ivyro.net/mainset.php?groups=balance&Xmenu=1>, 검색일: 24. 10. 04)



자료: 고용노동부(2023)

[그림 2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현황

- 다음 세대 구성원의 건강한 성장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보호 제도 마련하고 육아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근로자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추진함(경상북도, 202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독려하고 육아휴직 및 근로 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보전을 위한 경제적 차원의 지원까지 함께 고려함
 - 경북도는 2024~2026년 경상북도에 직장 및 주소를 두고,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중 요건 해당자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초 5시간~10시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 200~400이하를 지원함
 - 사업비는 도비 700백만 원을 투입하여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로 줄어드는 시간 내 급여를 충당하여 보전을 지원함
- 경상북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 중임
 - 아이와 함께 출근하여 일할 수 있는 사무+육아 공간 조성을 위하여 리모델

- 링 비용 및 물품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
- 초등학교 1~3학년 학부모가 근무하고 있는 경북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 도입 정착을 위해 근로 단축으로 인한 손실분을 지원하는 정책도 수립하여 영세한 중소기업도 도입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틈새지원도 시행함

- 가사노동과 돌봄시간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문제에 남성 양육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함(경상북도, 2024). 육아기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 대상으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양육 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22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남성 양육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성평등한 돌봄 및 양육 관계 형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시행하고 있음

4. 경상북도 저출산 극복 관련 요약 및 시사점

- 경상북도는 저출산과의 전쟁에서 필승전략 일환으로써 완전돌봄 그리고 일생 활균형을 핵심 정책 및 서비스 구현을 큰 축으로 정립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첫째, 완전돌봄 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특색을 고려하여 수요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기존의 이용시간의 확대와 시설 수 보수 및 확충을 토대로 경북형 돌봄서비스 구축에 경주하고 있음
- 혼재되고 분산되어 있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 운영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서비스 지원을 위한 다차원적인 제도 검토와 지원체계 설계를 고려하고 있음
- 둘째, 일생활균형 정책구현을 토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확인할 수 있음. 육아기 부모의 단축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급여 공백을 보전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유연근무제 확대를 통하여 일하는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케어할 수 있는 조직 문화 개선 및 제도 활성화에 힘쓰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

○ 경상북도는 “완전돌봄” 을 근간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음

- 현재 경북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자신의 스케줄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는 돌봄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음(정서린, 2021)

○ “일생활균형” 과 관련해서는 경북도 및 시군, 도내 기업체 및 근로자,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중앙정부의 무한책임 역할수행 및 실효성 있는 정책구현, 그리고 미래지향적 저출산 극복 사회보장 관련 제도화 구축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사용 편의성 증대에 힘써야 함. 고용노동부에서 스마트 근로감독, 대체인력뱅크 등을 운영하고자 하나, 기업에서는 제도운영 관련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함

○ 경상북도 기업의 99%가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이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자녀돌봄 부담을 경감 시켜줄 수 있는 공공직장어린이집 지원은 매우 중요한 사항임(정서린, 2021)

- 마을돌봄터를 연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여 소규모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장어린이집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정서린, 2021)

- 일·생활 균형 정책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 역시 중요함. ‘위라벨’이라는 용어를 통해 일·생활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음
 -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의 영역, 가족 영역, 여가 영역 등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함
 -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어 생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향이 있음
 - 경상북도의 경우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젠더 통계 사이트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이트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음
- 경북도민이 요구하는 일·생활균형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되고 있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젠더 통계 사이트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아동돌봄 플랫폼으로 특화되어 있는 내용을 돌봄뿐만 아니라 개인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인 여가활동 관련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문화 및 관광, 휴양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동돌봄 플랫폼과 같이 지도 중심의 정보 제공을 통해 이용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제3장 국내외 저출생 대응 기관운영 및 정책사례 심층조사

제1절 국내 저출생 대응 기관운영 조사 분석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설립 목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개발, 여성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 <https://forwoman.or.kr>, 검색일: 2024. 10.01.)
- 특히 가족저출생연구본부는 가족변화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가족·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함

2) 기능 및 역할

- 미래환경 변화와 새롭게 등장하는 성평등 이슈 대응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성평등 이슈·정책 발굴
 - 기술혁신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탐색 및 대응방안 마련
 - 기후변화 및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과 여성 이니셔티브 확보 방안 마련
 - 주요 분야의 여성대표성 및 성별 다양성 제고 방안 제시
- 경제의 역동성 및 생애 전망 다양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 재구조화
 - 저출생·고령화 시대 변화하는 젠더관계에 대응하는 돌봄정책 내실화

- 가족변화와 가족다양성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공정 가치가 존중받는 성평등 노동시장 정책 마련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기에 대응하는 여성 일자리 정책 마련

○ 젠더 관점의 폭력·건강 정책 발굴 및 성차별적 사회문화 개선

- 다양한 폭력 유형 대응 및 체계화 방안 제시
- 젠더폭력 방지 및 여성 안전 보장의 실질화 방안 마련
- 성·재생산 영역 등 여성 건강 보장·증진 방향 제시
- 성평등 의식의 확산과 성평등 이슈에 대한 세대별 해소 방안 마련

○ 성주류화 정책 환경 변화 대응 및 정책의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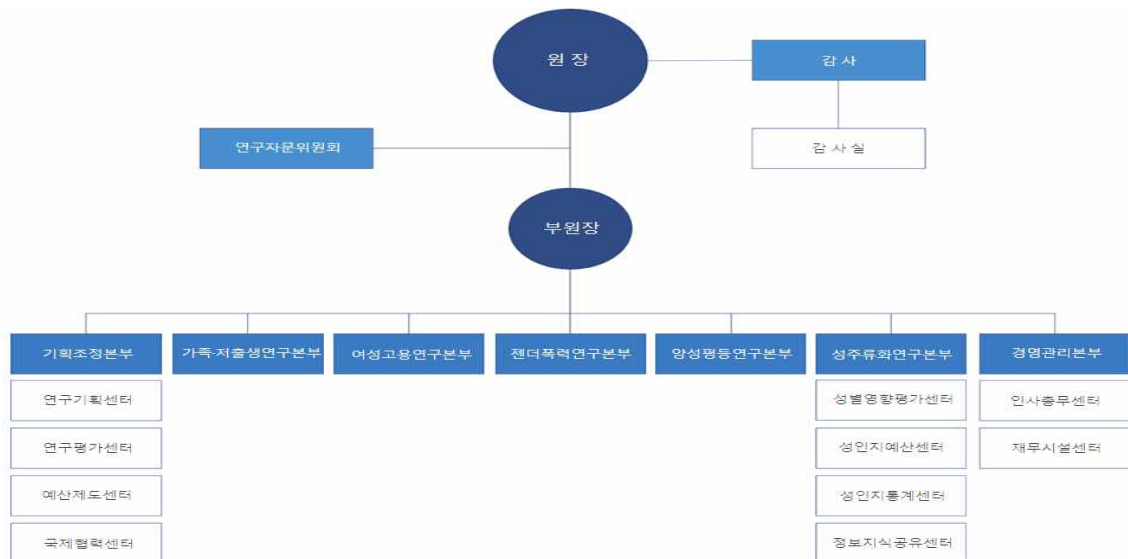
- 성평등 추진체계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성인지적 분석·평가 강화 및 실효적 성주류화 정책 추진
-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술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연계 고도화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성주류화 정책의 영향력 확대

〈표 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요 부서의 기능 및 역할

주요 부서	기능 및 역할	인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	가족변화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가족·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	17
여성고용연구본부	노동시장의 성격차와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며,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	15
젠더폭력연구본부	고도화·다변화되는 젠더 기반 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여 모든 국민의 권익과 건강증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	16
양성평등연구본부	국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향상과 분야별 양성평등 정책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를 수행	17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주류화 추진 전략 연구와 제도운영 지원 및 양성평등 지식공유 기반 구축 관련 업무를 수행	25

자료: 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https://forwoman.or.kr/main/main.do>, 검색일: 2024. 10. 01)

3) 조직 및 인력 구성



[그림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직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력의 경우 총 131명으로 정규직의 경우 일반 정규직 94명, 무기계약직 20명, 비정규직의 경우 17명으로 구성됨
 - 직급별 선임연구원 15명, 연구위원 19명, 부연구위원 16명, 전문연구원 10명, 연구원 5명, 책임행정원 4명, 선임행정원 9명, 행정원 13명 별도정원 3명, 무기계약직 20명, 비정규직 17명으로 구성됨
 - 부서별로는 원장실 3명, 부원장실 4명, 기획조정본부 20명, 가족·저출생연구본부 17명, 여성고용연구본부 15명, 젠더폭력연구본부 16명, 양성평등연구본부 17명,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25명, 경영관리본부 14명으로 구성됨

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 설립 목적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서울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https://www.seoulwomen.or.kr>, 검색일: 2024. 10. 01)

2) 기능 및 역할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평가·심사 및 인증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 기타 위탁하는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표 22〉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요 부서의 기능 및 역할

주요 부서	기능 및 역할	인원
저출생대응사업실	여성경제활동지원(기획, 구직지원, 인턴십사업), 일·생활 균형사업(서울형 양육친화 탄생기업 지원,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벨 포인트제 운영,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및 협력 기업문화 조성 사업 등), 양육친화사업(저출생 위기 대응 지원사업 기획 및 운영,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및 양성 기획 및 운영, 서울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 사업 운영 지원	35
돌봄사업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수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어린이집 책임경영자 과정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역량강화 교육(인력풀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개정, 서울형어린이집 의무 컨설팅 운영 등	32
양성평등사업실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 인력 역량강화 운영, 서울시 폭력 예방·대응 콘텐츠 개발 및 실행, 아동·청소년 성착취 교육 운영, 서울시 폭력 예방·대응 콘텐츠 개발 및 실행,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 인력 역량강화 운영,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서울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컨설팅, 양성평등 아카이브 여기모아 운영, 서울시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및 성과관리, 성인지 통계 및 통계 시스템 관리 지원,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24
정책개발실	여성가족정책 이슈분석 및 확산, 서울시 어린이 행복도 제고를 위한 아동·양육자 정책 수요조사, 서울 3040여성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해외 저출생 정책 사례를 통한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방안 연구, 산후조리경비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연구, 난자동결 지원사업 향후 운영 방안, 가사서비스 지원 정책 발전 방안 연구, 스토킹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안전지원사업 개선 방안 연구	26
공간운영실	정보화 신규 사업 및 유지보수 용역 기획 및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기능개선 등) 및 전산실 관리, 서울가족플라자 공간 개선 및 활성화, 서울가족플라자 시민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서울엄마아빠VIP존 운영 활성화, 서울여성플라자 시민이용 편의시설 관리	33
경영기획실	과제프로세스 및 기관 간행물·기록물 관리 이사회(임원추천위원회, 법인등기관리), 시민감동경영, ESG 경영(사회공헌, 환경경영), 기관홍보, 성과관리 등	28
수탁기관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시립제1호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 시립제2호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독섬 자별레점	29

3) 조직 및 인력 구성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직은 이사장과 그 하위조직으로 이사회, 감사, 대표 이사로 이루어져있으며 업무에 따라 크게 경영기획실, 저출생대응사업실, 돌봄사업실, 양성평등사업실, 정책개발실, 공간운영실 6개 실로 이루어져 있음

- 각 부서는 세부적으로 경영기획실은 기획팀과 인사팀, 경영지원팀으로, 저출생대응사업실은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기획팀,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구직지원팀,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인턴십사업팀, 일·생활균형사업팀, 양육친화사업팀으로 구성됨. 돌봄사업실은 보육기획팀, 보육평가팀, 아동정책사업팀, 아이돌봄지원팀으로 양성평등사업실은 폭력대응지원사업팀, 양성평등제도지원팀,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로 구성됨. 정책개발실은 여성가족정책팀과 아동보육정책팀으로 공간운영실은 전산팀, 공간활성화팀, 시설안전팀, 지원팀으로 구성됨
- 그 외 수탁운영시설로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시립제1호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 시립제2호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1호점, 서울형 키즈카페 시립 독섬 자벌레점이 있음



[그림 24]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인력의 경우 총 212명으로 정규직 170명, 계약직 42명으로 구성됨
- 직급별 대표이사 1명, 1급 2명, 2급 5명, 3급 27명, 4급 27명, 5급 35명, 6급 13명, 기능직 60명으로 구성됨
- 부서별로는 저출생대응사업실 35명, 돌봄사업실 32명, 양성평등사업실 24명, 정책개발실 26명, 공간운영실 33명, 경영기획실 28명, 수탁기관 34명으로 구성됨(육아휴직 대체인력 포함)

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1) 설립 목적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의 여성 및 가족정책과 관련한 제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실현하며 양성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경기도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https://www.gwff.k>, 검색일: 2024. 10. 01)

2) 기능 및 역할

- 기획조정실: 재단 운영의 종합 기획·대외협력 및 전사적 홍보콘텐츠 운영·관리, 재무·인사·총무 등 경영관리
- 정책연구실: 연구 기획 및 평가·관리, 여성가족분야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관련 부대사업
- 정책사업실: 성평등 및 가족지원 관련 교육·사업, 여성가족분야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관련 부대사업

〈표 23〉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요 부서의 기능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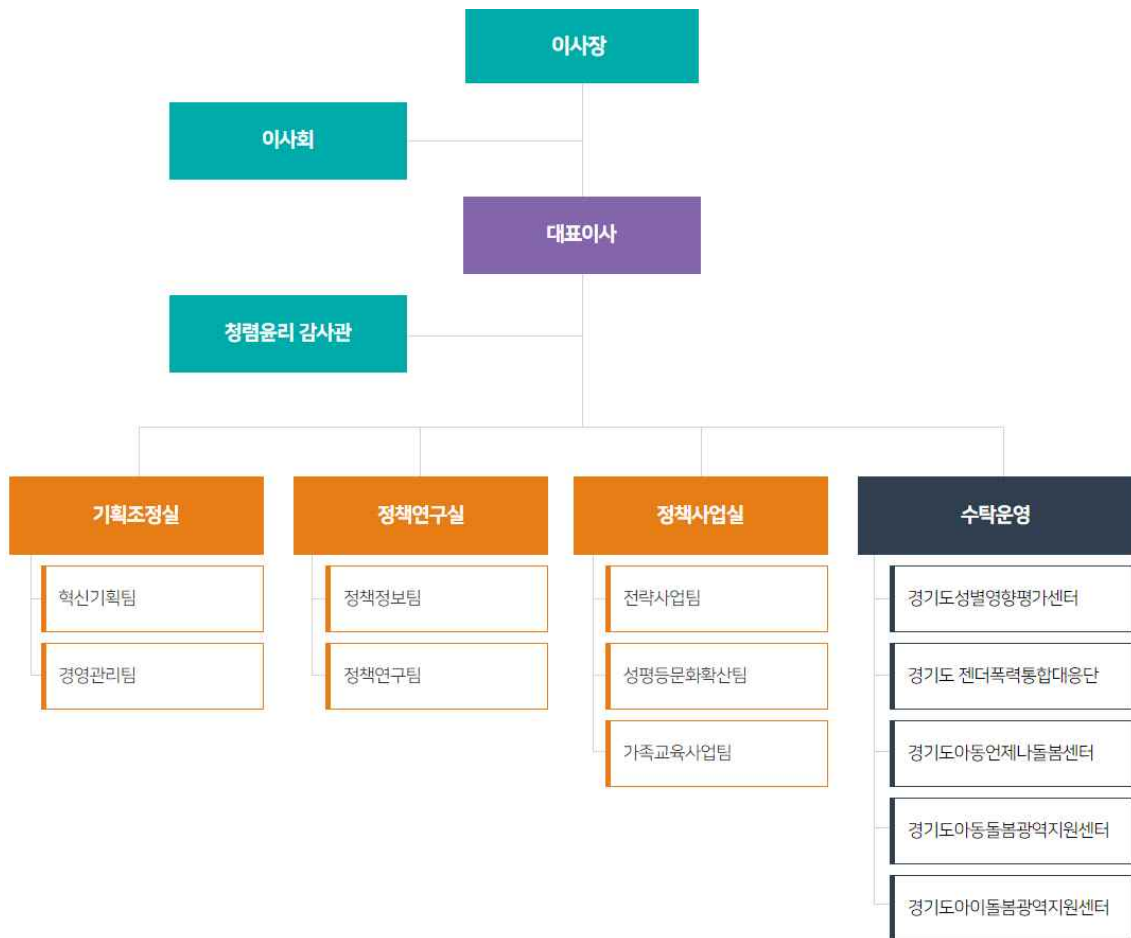
구분	주요 부서	담당업무	인원(명)
1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 업무총괄	1
1-1	혁신기획팀	기관 홍보 계획 수립 및 언론대응, 이해관계자관리(道 고객만족도조사)·노동조합, 대외협력(MOU 및 유관기관 관리), 경영전략·혁신경영(혁신경영위원회), 경영평가, 성과관리(기관 업무계획, 조직성과평가, 성과관리위원회), ESG 경영, 도 현안대응(공공기관 담당관, 여성정책과 등) 등, 직원 채용/노사협의회 운영/복무관리	9
1-2	경영관리팀	재무회계(예/결산), 예산의 편성 및 운영,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수탁계약 관리 및 회계 업무, 조직문화활동(워크숍, 주니어보드), 친환경활동, 사회공헌활동(자원봉사, 끝전나눔), 물품 구매 및 의무구매실적, 시설/안전/보건관리, 재단 이전 관련 업무, 자산 구매/관리, 전산 기기 관리, 관용차량 주유·세차·점검 지원, 관용차량 이용 관리(그룹웨어 승인 포함)	8
2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 총괄(사회학 박사/연구분야: 이주여성, 다문화, 인구)	1
2-1	정책정보팀	연구성과 점검 및 확산 업무, 연구기획 / 관리 및 연구사업 운영, 정책연구실 행정사무 및 자료관리, 연구 업무 지원	3
2-2	정책연구팀	가족, 성평등, 일·생활균형, 성인지예산, 참여, 거버넌스, 여성노동, 아동청소년, 보육, 아동돌봄, 정신건강, 사회연결망, 입양, 젠더정의, 젠더폭력, 젠더정치, 성재생산 등 정책 연구과제 수행	16
3	정책사업실	정책사업실 업무 총괄(소비자학, 문학 박사 / 연구분야: 가족, 성평등, 인구)	1
3-1	전략사업팀	사업계획/성과관리/현안대응, 매체홍보 기획/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사업, 경기도 세계여성대회 개최 지원사업, 경기여성인재뱅크 운영(여성전문가 DB/강사은행), 교육사업포털 운영,	6
3-2	성평등문화확산팀	경기도 성인지력 향상교육 기획·운영, 성평등 확산 및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업무, 경기도 성평등정책전문관 협의체 운영, 특수직 공무원대상 성인지 교육 운영, 도민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운영, 시·군 공무원 성인지교육(관리자과정)운영, 시·군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교육 운영, 시·군 성인지예산 업무담당자 교육	7

구분	주요 부서	담당업무	인원(명)
		운영, 젠더와 진로특강 및 진로지도 운영, 성주류화 정책 추진 사업 지원	
3-3	가족교육사업팀	경기도 아동 놀이문화 확산 사업, 경기도 아빠하이! 및 인구인식개선 사업, 전문인재 역량강화 콘텐츠 개발 사업, 경기도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신입원장 역량강화교육 사업, 0세아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강화교육 사업, 경기도 지역양육리더 사업, 경기도 아동학대예방 사업	14
수탁 운영	경기도성별 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 사업 기획 및 운영, 성인지감수성 및 성주류화제도 교육, 성별영향평가·성인지 예산·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단 운영 및 관리, 성주류화 제도 관련 콘텐츠 개발, 성인지정책 포럼 기획·운영, 정책개선 우수사례 선정 지원, 도정 홍보물 사전 컨설팅 사업 운영	4
	경기도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직원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도민예방단 : 청소년 젠더폭력 예방 서포터즈 운영, 종사자 전문성 강화 교육, 교육 기획 및 콘텐츠 개발, 젠더폭력 예방교육, 강사 교육, 시군 공동대응팀 거점 운영 업무, 사각지대 피해자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젠더폭력방지 자문위원회 운영/관리, 거버넌스 운영/관리, 피해지원단(법률/의료·심리지원단) 운영 및 관리, 시군거점 /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 관리, 젠더폭력 핫라인 운영 관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자원스톱지원센터 업무, 심리치유 / 의료지원 사업 운영, 아동·청소년성착취피해대응센터 긴급지원, 지원 업무, 스토킹·교제 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안전숙소 조성 및 운영, 업무 자동화 솔루션 유지보수 관리, 시설 및 자산관리, 예산 및 회계	23
	경기도아동언제나 돌봄센터	홍보사업 운영(홍보물 제작·배포, 행사 운영 및 언론 보도 등), 운영 매뉴얼 개발·관리, 광역협의체 구성 및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플랫폼 및 앱 개발·운영, 경기도 아동돌봄시설 안전관리 지원, 센터 정보보안 관리 및 공용채널 등 관리, 역량강화 교육 운영(초청 돌봄, 제공기관, 거점센터, 콜센터 등), 언제나돌봄 사업 실적 관리[방문형,시설형(초등돌봄, 언제나어린이집)], 사업 만족도 조사, 언제나돌봄 콜센터 상담, 언제나돌봄 사전신청 관리(이용자), 제공기관 및 언제나돌봄 관리, 언제나돌봄 콜센터 실적 관리(이용현황, 만족도 등)	9

구분	주요 부서	담당업무	인원(명)
	경기도아동돌봄 광역지원센터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컨설팅 운영,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공통 사업 운영 지원	2
	경기도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관리 지원, 네트워크 구축 운영, 서비스제공기관 및 광역센터 실적 관리, 언제나 돌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통계 수집 관리, 아동학대사례관리 슈퍼비전 및 컨설팅, 아이돌보미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아이돌봄 사례 관리 인력 방문 컨설팅,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민원, 부정수급 조치 취합,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실적 취합, 아이돌봄 사례관리 품질개선 간담회 제반, 아이돌봄사례관리 사례공유회의 제반, 아이돌봄서비스 인적성검사 운영 및 매뉴얼 제공,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관리, 아이돌보미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협력사업 운영, 아이돌봄지원사업 산업안전 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 현장 컨설팅 지원, 아이돌보미 수급관리, 아이돌봄지원사업 교육 기관 관리	14

3) 조직 및 인력 구성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조직은 이사장과 그 하위조직으로 이사회, 대표이사, 청렴윤리 감사관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업무에 따라 크게 기획조정실, 정책연구실, 정책사업실 3개 실로 이루어져 있음
- 각 부서는 세부적으로 기획조정실의 경우 혁신기획팀과 경영관리팀으로, 정책연구실은 정책정보팀, 정책연구팀으로 정책사업실은 전략사업팀, 성평등문화 확산팀, 가족교육사업팀으로 구성됨
- 그 외 수탁운영시설로 경기도성별영향평가센터,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센터, 경기도아동돌봄 광역지원센터, 경기도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가 있음



[그림 25]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조직도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인력의 경우 총 135명으로 정규직 59명, 계약직 76명으로 구성됨
- 직급별 대표이사 1명, 연구직 15명, 일반직 21명, 기능직 1명, 공무원 21명으로 구성됨
 - 부서별로는 기획조정실 18명, 정책연구실 20명, 정책사업실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탁운영 중인 경기도 성별영향평가센터 4명, 경기도젠더폭력대응단 23명, 경기도아동언제나돌봄센터 9명, 경기도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2명,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14명으로 구성됨

4. 경북연구원

1) 설립 목적

- 경북연구원은 지역개발 과제 및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연구/개발하고, 지역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정리/체계화하여 이를 지역사회에 널리 보급/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상북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공연구기관임(경북연구원 홈페이지, <https://gdi.re.kr/>, 검색일: 2024. 10. 01)

2) 기능 및 역할

- 학술과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및 인력의 양성과 활용을 지원함
 - 국가 및 지역경제, 국가 및 지역산업, 도시 및 지역계획, 환경, 교통, 관광, 노동, 지방행정 및 재정, 복지, 교육, 문화, 농산어촌 개발, 남북 및 국제교류 등 국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 <https://gdi.re.kr/>, 검색일: 2024. 10. 01)
 - 학술과 연구개발 관련기관·단체의 연구·운영 지원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 국가 및 행정기관,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 및 사업 수탁 및 대행 위탁
 - 국가 및 경북 지역연구 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영상, 콘텐츠 연구 및 제작
- 위탁사무는 경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경상북도 이웃사촌복지센터, 사회적기업예방지원센터를 수행함. 위탁시설은 경상북도여성장애인복지관, 경상북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경상북도 아동청소년쉼터, 경상북도 청소년남자쉼터, 경상북도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운영중임

3) 조직 및 인력 구성

- 연구본부 5연구실 2연구단과 기획경영실로 구성. 연구직 직원 총61명, 관리직 12명, 전문직 11명으로 구성되었음



5. 경북행복재단

1) 설립 목적

- 도민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회복지·청소년 육성 및 지원·보건서비스의 전문성, 책임성, 생산성,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능 및 역할

- 사회서비스정책연구를 통해 지역수요 맞춤형 정책개발과 대응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보건복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연구 수행 및 기초통계를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협력 체계 기반을 조성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 현장 개선과제 발굴하고 컨설팅 및 평가, 인증을 통해 매뉴얼 개발과 보급 기능을 수행함
- 사회서비스 인력 역량강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관련교육을 지원하여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 및 운영하고 사회서비스 현장 교육 수요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수행함

3) 조직 및 인력 구성



- 사무총장은 경북행복재단 사무처 및 위탁시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감사실은 자체감사 계획 수립, 대외감사 수감 총괄, 인권경영 및 ESG 계획 수립 운영등을 총괄함
- 정책연구부는 보건, 복지정책 분야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대응 방향에 따른 정책과제를 발굴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은 연구과제
 - 정책연구방향 토론회, 연구과제 선정심의회 및 수탁사업선정심의회 개최
 - 세미나 · 정책 토론회 등 학술행사 개최
 -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 사업 총괄
- 연구1팀은 복지정책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하고 복지(장애인분야, 지역복지 등)에 관한 정책 개발 연구를 총괄함
 - 복지분야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 정책대응 방향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은 연구과제
 - 학술행사 및 복지정책 분야 민관협력 구축
 -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 사업 자문
 - 정책연구 보고회 총괄
- 연구2팀은 복지정책 분야 중장기 계획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
 - 복지(저소득, 장애인 분야 등)에 관한 정책 개발 연구
 - 복지분야 외부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
 - 정책대응 방향에 따른 정책과제 개발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받은 연구과제
 - 세미나 · 정책 토론회 등 학술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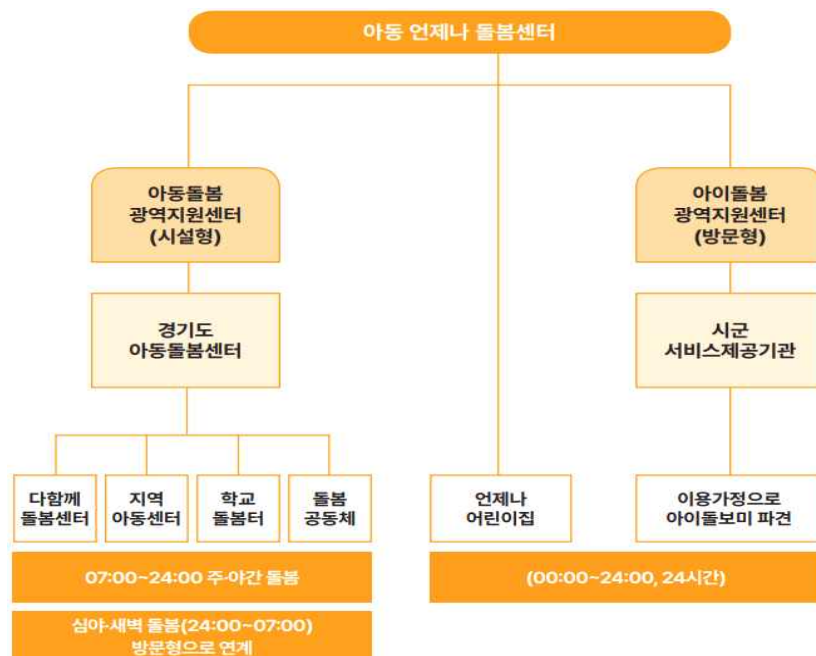
- 연구과제 발굴 공모전 총괄
- 보건복지사업부는 보건복지사업부, 품질관리사업을 총괄함
 - 교육운영사업 총괄
 - 이웃사촌복지센터 사업 총괄
 - 경상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 총괄
- 교육운영팀은 교육운영팀 업무 총괄하여 교육운영팀 연간사업추진함
 - 평생교육사업단 운영 총괄 및 성과관리
 - 신규 교육사업 기획 및 교육 콘텐츠 개발
 - 수탁 받은 보건복지사업 연구과제 수행
 - 보건복지 연계·협력 교육 개발 및 추진

6. 국내 유관기관의 운영사례 시사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직도에서 가족·저출생연구본부, 여성고용연구본부, 양성평등연구본부,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가족·저출생연구본부: 가족변화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가족·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
 - 여성고용연구본부 : 노동시장의 성격차와 차별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
 - 젠더폭력연구본부: 고도화·다변화되는 젠더 기반 폭력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여 모든 국민의 권익과 건강증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
 - 양성평등연구본부: 국가정책의 양성평등 효과향상과 분야별 양성평등 정책 개발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를 수행
 -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성주류화 추진 전략 연구와 제도운영 지원 및 양성

평등 지식공유 기반 구축 관련 업무를 수행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조직은 업무에 따라 크게 경영기획실, 저출생대응사업실, 돌봄사업실, 양성평등사업실, 정책개발실, 공간운영실 6개 실로 이루어져 있음
 - 특히 가족저출생연구본부는 가족변화와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가족·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검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저출생·고령화 심화, 핵가족화, 다양한 가족 형태 출현 등으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아동 언제나 돌봄센터”를 통해 통합 추진하고 있음
 - 가족 및 친인척의 지원이 없이 자녀 양육 및 공백없는 돌봄을 수행하고 초등 입학 시기 양육자의 사회생활 중단률 상향화, 일·가정 양립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수립함
- 특히 돌봄 공백으로 인한 양육 부담 문제가 지속되어 공공형,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아동을 ‘보호의 대상’ 관점에서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권리 기반 보호와 돌봄 기능을 확대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기반 촘촘한 아동돌봄 체계 구축 및 혁신적 서비스로의 추진을 도모하고 있음
 - 도민 및 각 시군의 시·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360° 전방위적 빈틈없는 돌봄서비스이용을 통해 양육부담 경감 및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그림 28] 경기도 언제나돌봄 조직 현황

<표 24> 경기도 광역지원기관 조직 및 인력 현황

경기도 광역지원기관	인력 현황
합계	25명
아동언제나 돌봄센터	9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주임 7명)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14명(센터장 1명, 팀장 3명, 주임 10명)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	2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으로 돌봄보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상북도에서 직영으로 운영될 K-보듬 지정시설의 경우 각 시설별 인원을 최소 2명으로 구성하고 K-보듬 시설에 대한 기획운영·사업관리 등 지원관리 기능(정책연구 기능 제외)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은 장기적으로 최대 9명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돌봄공백 없는 360° 아동 언제나돌봄 체계 구축 지역 기반 아동돌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전달체계를 구

축·운영하고 서비스 지원을 확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조직운영체계 및 필요 인력 등을 벤치마킹함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국내 저출생 대응 기관 운영 사례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표 25〉 국내 저출생 대응 기관 운영 사례 분석 종합

구분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부서	수행업무	가족·돌봄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가족 형태 변화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돌봄 관련 정책 제도 연구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부서명 및 구분	- 가족·저출생연구본부 - 여성고용연구본부 - 양성평등연구본부 -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가족저출생연구본부	아동 언제나돌센터
	역할 및 기능	- 가족·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연구 - 여성고용 및 노동환경 연구 - 양성평등 연구	-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가족·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연구	- 생활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사업부서	인력	74명	117명	95명
경영지원	인력	14명	28명	18명

제2절 주요 선진국 저출생 대응 정책사례 조사 분석

1. 프랑스

1) 합계출산율의 변화

-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2.47명에서 1975년 1.93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5년 1.71명을 기점으로 출산·육아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효과적으로 극복함(김형구, 2023)
 - 즉 2000년 1.89명, 2010년 2.03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2020년에는 1.83명을 기록하였음(김형구, 2023)

<표 26>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변화

(단위: 명)

구분	인구(만명)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프랑스	6,781	1.85	1.77	1.89	2.03	1.83

자료: 통계청 KOSIS, OECD 합계출산율, 2023.

- 프랑스의 경우 2010년 이후 출산율 하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가임기 여성의 수가 1990년 중반 대비 약 10% 감소됨에 따라서 출산율 또한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음(김형구, 2023)
- 프랑스는 여성의 육아와 일 양립 지원 제도 및 문화 등의 확산을 바탕으로 2020년 기준 15~64세 여성의 취업률은 67.6%이며,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 비율은 45.3%에 달하는 등 여성의 높은 사회적 지위 상승이 출산율 제고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남(김형구, 2023)

2) 프랑스 저출산 대응 정책 전개 방향

-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계획되고 시행되는 가족정책과 영유아 교육정책의 ‘협업’ 이라고 할 수 있음(김형구, 2023)
 -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산장려 정책은 보육정책과 교육정책, 그리고 지역 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이 상호 보완적으로 강화되었음(김형구, 2023)



[그림 29] 20세기 이후 프랑스 합계출산율 추이와 주요 정책변화

- 구체적으로 남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장려(2001), 자녀 지원금 통합 일원화 인 유아출산수당 등 절차의 간소화 및 혜택의 폭과 내용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음
 - 2014년 ‘실질적인 남녀 평등법(La loi no 2014-873 du 4 aout 2014 pour l’egalite re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ines)’ 공표되어 근로노동법 차원의 남녀평등과 육아휴직 평등의 법제화를 통해 출산 이후 여성의 부담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또한 육아휴직 이후의 지속 고용이 보장됨(김형구, 2023)
- 육아와 돌봄이 지자체/기초단체 내에서 사회복지 연결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게 됨
 -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육아와 돌봄이 국가 최대의 공공 서비스라는 개념을 확장시키고, 육아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이 공유되는데 기여함

- 프랑스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육아와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 정책, 사회복지,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이 종합적이고 다자적인 접근은 모범 사례에 속함
-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적 인 지역화 활동을 통한 보육통합지원서 비스 시스템 구축하여 가족정책과 교육정책, 사회복지 정책과 지역사회개발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업하는 ‘학습과 돌봄 및 지역사회 발전’ 을 자연스럽게 도모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3) 경제적 지원 정책

(1) 가족수당

- 프랑스는 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였음 (김형구, 2023). 가톨릭 문화에 기반한 가족주의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족과 모성을 중시하여 가족정책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음(김형구, 2023)
- 프랑스 가족 정책의 특징은 첫째, 대부분의 지원은 고용주 보다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둘째, 지원 종류의 범위가 광범하고 포괄적이며, 셋째, 아동기의 대부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임(김형구, 2023)
- 프랑스의 가족수당정책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즉 가족수당 및 가족보조금, 영아보육수당(출산·임양수당, 기초수당, 자녀보육 대체 보조금), 부모휴직 수당 등을 포함함(김형구, 2023)
- 프랑스의 가족수당정책(Les Prestations Familiales)은 자녀가 2명 이상의 모든 가정의 자녀가 20세까지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을 받으며 다자녀 일수록, 저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함(김형구, 2023)
- 2019년 기준 가족수당 월 지급액은 소득수준 및 자녀수별로 차이가 있으며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2자녀인 경우 129.47 유로(170,253 원), 3자녀 295.35 유로(388,385 원), 4자녀 이상 1명당 156.88 유로(206,297 원) 등으로 증가함⁸⁾
- 출산·임양수당 및 기초수당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함.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출산수당은 2020년 기준 944.50 유로(1,263,932 원), 20세 이하 자녀 입양에 대해 20세 이전의 36개월 동안 지급되는 입양수당은

8) 황성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의 유아교육·보육정책 연구, 열린교육연구, 2020. Vol.28. No.5, p.258.

1,888.98 유로(2,526,756 원) 규모임

- 기초수당은 출산 이후 3세까지 지급하고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와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18년 4월 1일 이전은 월 184.62 유로(246,953 원) 이후는 171.22 유로(237,055 원)를 지급함

〈표 27〉 프랑스 가족수당 현황

가족수당	지 급 기 준
가족수당	○ 20세 이하 자녀 2명 양육 가족에게 지급 ○ 가족 상황 및 소득 수준 무관하며 전원 지급 ○ 자녀가 14세 이상이면 기본 가족수당에 추가수당 지급 ○ 자녀 수 많을수록, 소득 수준 낮을수록 급여액 높음
가족보조금	○ 일정 소득 이하의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 자녀 연령 3~21세 기간에 홀벌이 및 맞벌이 지급 상이 ○ 자녀 수 많을수록 소득기준 증가, 자녀 2명 이하 중단
영아보육수당	○ 2004년 효율적 지원 위한 출산·육아 관련 보조금 통합 ○ 출산·입양수당, 기초 수당, 자녀보육 대체 보조금 포함 ○ 출산·입양수당 및 기초수당은 일정 소득 이하 가족 지급
출산·입양수당	○ 출산 및 입양으로 자녀를 가질 경우 일시불 수당 지급
기초수당	○ 3세 미만의 자녀 양육, 20세 미만 아동 입양시 지급 ○ 자녀의 3세 생일 전, 입양 자녀 20세 생일 전까지 지급
자녀보육 대체 보조금	○ 직업을 가진 부모가 6세 미만의 자녀 양육을 위해 보육사 고용시 지원받는 수당 ○ 부모가 최소 이용 비용의 15% 부담
부모휴직수당	○ 3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시 지급하는 수당 ○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포함 지급, 고용보험 무관 ○ 자녀 수 많을수록 급여액 및 혜택 증가

자료 : 신윤정, 합계출산율 1.8명 강국을 만든 프랑스의 가족수당정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2. 8. 9에서 작성.

4) 돌봄서비스 정책과 운영

- 프랑스는 보육제도는 중앙집권적 공교육 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연령별 이원화 체계를 갖추고 있음(김형구, 2023)
 - 도(département) 단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크레쉬의 설립, 인가, 개보수 심사, 관리 감독을 담당함
 - 면(commune) 단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크레쉬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함(정미라·조희연, 안재진, 2009 : 34)
- 프랑스는 만 3세 이하의 보육서비스와 3세 이상의 유아교육으로 구분됨. 보육서비스의 경우 시간제 탁아소, 아동정원, 가정보육모, 여가센터 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화도, 2007)

〈표 28〉 프랑스 0~6세 아이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종류

보육서비스종류	기관	대상연령
공공보육기관	Crèches collectives	만 3세 미만
	Crèches parentale	0~6세
	halte-garderie	
	Jardin d'enfant	
	creche familiale	

자료: 이화도(2007), 부분 인용

- 프랑스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제도는 연령별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영아는 크레쉬(Creche)라고 불리는 어린이집에 2세까지 보육이 이루어지고, 3~5세까지는 유아교육기관인 에콜 마테르넬(Ecole Maternelle)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짐(이화도, 2007)
- 크레쉬(Creche)는 일반적으로 기관 집단보육의 유형을 의미하며, 정부의 “사회연대 및 건강부”가 관리함(김형구, 2023). 프랑스의 6세까지 접할 수 있는 기관보육 유형은 모두 11가지로 다양하게 설립되어 있음. 부모들은 가족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집단보육 또는 개인 보육을 선택할 수 있으며 집단 보육기관은 「영유아보육현장」에 근거하여 운영함(김형구, 2023)
- 에콜 마테르넬(Ecole Maternelle) 프랑스의 크레쉬는 0~2세 영유아 보육기관이며 에콜 마테르넬은 3~5세 유아교육기관으로 무상교육 혜택을 제공함(김형구, 2023)
 - 에콜 마테르넬은 모든 유아에게 필요한 기초과정으로 유아가 매일 오고 싶은 공간이 되도록 구성하고, 유아가 스스로 참여하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신윤정, 2012)
 - 가정과 학교의 가교 역할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고, 주의 깊은 관찰에 근거하여 영유아의 행동과 반응을 평가하고 해석함(김형구, 2023)

〈표 29〉 프랑스 영유아 기관보육 유형

보육기관 유형	유형별 운영 특성
조기의료사회활동센터 (CAMPS)	○ 취학 전 장애영유아의 발견, 진단, 치료, 재교육 실시
전이학급	○ 에콜 마테르넬의 2~3세 영유아 대상 실험적 학급 ○ 영유아는 에콜 마테르넬 및 크레쉬 영아교사 동시 담당
집단 크레쉬	○ 25개월 영아~에콜 마테르넬 취학 전 유아 대상 ○ 연간 규칙적으로 다닐 경우 5세까지 재원 가능
직장 크레쉬	○ 25개월 영아~에콜 마테르넬 취학 전 유아, 6세까지 가능 ○ 기업 및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 대상
가정 크레쉬	○ 인증 가정보육모가 자신의 집 또는 부모의 집에서 가정보육 ○ 일정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모이는 공간
부모 크레쉬	○ 25개월~6세까지 보육 담당 ○ 자녀 보육에 참여하는 부모연합회가 운영
맞춤형 보육기관	○ 25개월~6세까지 영유아 대상의 다양한 유형별 혼합 운영 ○ 정기적·간헐적 보육시간, 집단·가정 보육형태 운영 가능
시간제 보육기관	○ 25개월~6세까지 영유아 시간제 보육 기관
자르덴 당팡	○ 25개월~6세까지 에콜 마테르넬 취학 전후 영유아 대상 ○ 지역에서 일정시간 규칙적으로 다니는 방과후 보육기관
부모·자녀 놀이공간 (LAEP)	○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에게 개방된 놀이공간 ○ 부모 또는 보호자 필수 동반, 참여자간 상호교류 공간
소규모 크레쉬	○ 25개월~6세까지 영유아 대상 ○ 최대 10명 영유아 보육 담당 기관

자료 : 황성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의 유아교육·보육정책 연구, 열린교육연구, 2020, Vol.28, No.5, pp.261~262.

- 시설 수를 보면 종일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단 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20%) 보다 일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 시설(일시보육시설과 복합보육기관 58%) 비중이 더 높음(신윤정, 2012)
- 일시 보육(l' accueil occasionnel)은 아동이 보육 시설에 등록되어 있지만 제한된 시간만 이용하거나 미리 이용시간 스케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신윤정, 2012)
 - 보육료는 국가 계산표에 의해서 산정되지만 월별로 일정한 보육료를 미리 산정하기 어려워 이용할 때 마다해당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신윤정, 2012)

- 위급 보육(l' accueil d' urgence)은 아동이 보육 시설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위급할 경우 이용하는 시설 보육 서비스로서 위급시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 시설은 일정 부분의 위급 보육 정원을 미리 마련해 놓고 있음(신윤정, 2012)

[그림 30] 프랑스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2005~2009)

구분	시설 수 (개소수)					연간 증가율(%)	
	2005	2006	2007	2008	2009	2008~2009	2005~2009
단일 보육기관 (Structures mono-accueil)	4913	4595	4334	4160	4107	-1.3	-4.4
집단 어린이집 (Crèches collectives)	2277	2105	2072	1960	1947	-0.7	-3.8
지역 전통 (traditionnelles de quartier)	1885	1719	1724	1650	1639	-0.7	-3.4
직장 (de personnel)	206	204	165	150	151	0.7	-7.5
부모 (parentales)	186	182	183	160	157	-1.9	-4.1
일시 어린이집 (Haltes garderies)	2449	2303	2072	2006	1933	-3.6	-5.7
지역 전통 (traditionnelles de quartier)	2315	2190	1973	1921	1854	-3.5	-5.4
부모 (parentales)	134	113	99	85	79	-7.1	-12.4
놀이방 (jardins d'enfants)	187	187	190	194	227	17.0	5.0
복합 보육기관 (Structures multi-accueil)	3915	4360	4799	5284	5702	7.9	9.9
지역 전통 (traditionnelles de quartier)	3363	3811	4158	4513	4856	7.6	9.6
직장 (de personnel)	-	-	60	115	149	29.6	-
부모 (parentales)	329	311	302	314	296	-5.7	-2.6
단체/가족 (collectives/familiales)	223	238	279	342	401	17.3	15.8
총 집단 보육 시설 (total accueil collectif)	8828	8955	9133	9444	9809	3.9	2.7
가족 보육 시설 (accueil familial)	848	842	800	772	756	-2.1	-2.8
총 보육 시설 (total établissements)	9676	9797	9933	10216	10565	3.4	2.2

출처: 신윤정(2012: 2), 직접인용

- 보육시설은 운영주체에 따라서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어린이집(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어린이집(de personnel), 부모 어린이집(parentales)으로 구분함(신윤정, 2012)
- 지역에서의 전통적인 어린이집은 아동의 집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당 정원은 60명으로 낮 동안 8~12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밤,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음(신윤정, 2012)

(1) 프랑스 방과 후 아동 돌봄기관(centre de loisirs)

- 프랑스의 유일한 방과후 아동돌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여가센터(centre de loisirs)’는 학기 중, 방학 기간 또는 학교 수업이 없는 매주 수요일에 운영됨(황성원, 2022) 취업부모를 위해 운영 시간은 오전 7시~오전 8시 30분 또는 9시, 오후 4시 30분~오후 7시까지 운영됨(황성원, 2022)
 - 운영 주체는 행정 부서인 사회복지부(Ministère des affaires sociales)와 시(commune)에서 담당하며 보육료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음(황성원, 2022)
- 센터에는 디렉퇴르(기관장 또는 센터장)가 근무하며 아동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인력을 아니마퇴르(animateur)가 있음(황성원, 2022)
 - 아니마퇴르(animateur) 능력을 인증받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17세부터 취득이 가능함. 지역별로 아니마퇴르 양성 전문기관에서 소정의 양성과정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자격을 받을 수 있음. 아니마퇴르 자격을 취득하는 기간은 최대 30개월이며 3단계의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황성원, 2022)
- 여가센터의 운영 대상과 특성, 센터에서 맞이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담당 인력당 아동 비율이 달라짐. 기본적으로 6세를 기준으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음(황성원, 2022)
 - 6세 미만의 유아가 여가센터에서 머무는 시간이 연속 5시간을 초과한다면 1명의 아니마퇴르는 8명의 유아를 담당하고 5시간 미만 시 1명의 아니마퇴르 당 10명의 유아를 담당함(황성원, 2022)

〈표 30〉 프랑스 방과후 돌봄 인력 비율

아동연령	아동 체류 시간	유아 1명 당 담당인력 비율
6세 미만	1~5시간 미만	10명 ~ 14명
	5시간 초과	8명 ~ 10명
6세 이상		12명

자료: 황성원(2022), 연구자 재구성

- 학교와 협력하여 여가센터를 운영한다면 아니마퇴르 당 담당 유아 수가 증가

함. 연속 5시간 이상이어도 1명의 아니마퇴르는 10명의 유아를, 5시간 이내라면 1명의 아니마퇴르 당 14명의 유아를 담당하게 됨(황성원, 2022)

- 6세 이상의 아동은 1명의 아니마퇴르 당 12명의 아동을 지도하고, 방과후 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원은 최대 300명으로 제한되어 있음(황성원, 2022)

5) 일·생활균형 정책

(1) 육아휴직

- 모든 여성은 16주(출산예정일 6주 전~출산 후 10주간) 동안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보장되는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셋째 자녀는 26주까지 연장이 가능함. 남성은 2주간 유급 출산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김형구, 2023)
-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부모는 자녀 출생 후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으며, 동일 직장 또는 다른 직장 내 유사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음 (김형구, 2023)
- 휴가 동안에는 최저임금 1/2 이하의 재택수당이 지급됨⁹⁾
- 월급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6개월씩 공동으로 육아를 해야함(김형구, 2023)
- 첫째는 1년 중 6개월, 둘째부터는 3년 중 1년을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해야 하도록 법률로 제정하였음(김형구, 2023)
- 부모휴직수당은 3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함(김형구, 2023)
- 프랑스의 부모휴직수당은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도 급여를 제공하며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함. 또한 근로시간을 50% 이하 또는 50~80%로 단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감소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함(김형구, 2023)
- 2022년 4월 기준으로 근로 활동을 완전히 그만 둘 경우 월 405.97 유로

9) 이태훈, 전계논문, 2019. p.98.

(541,755 원), 근로시간을 50% 이하로 감소시킨 경우 월 262.45 유로(350,232 원), 근로시간을 50~80%로 감소시킨 경우 월 151.39 유로(202,025 원)를 지급함(이태훈, 2019)

- 그리고 부모휴직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은 첫째 자녀는 1세가 될 때까지 부부 각각 최대 6개월, 둘째 자녀는 3세가 될 때까지 최대 24개월, 셋째 자녀는 6세가 될 때까지 최대 48개월임(이태훈,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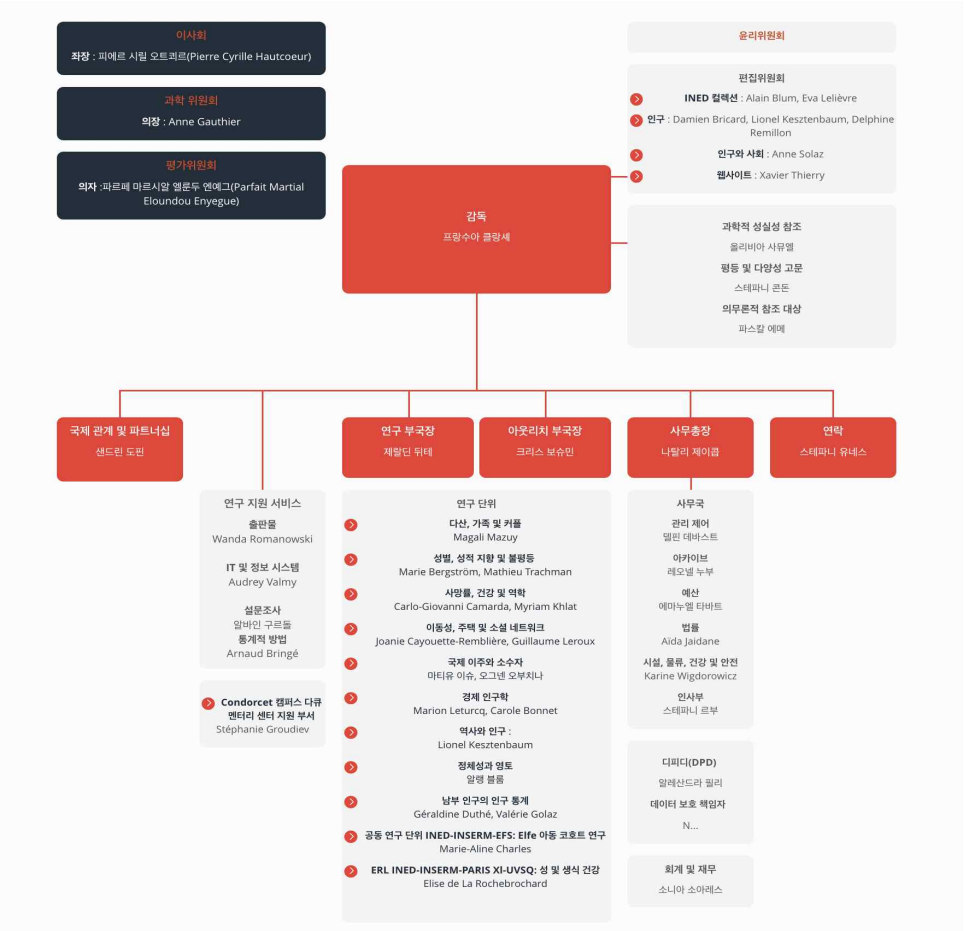
(2) 자녀보육 대체 보조금

- 취업여성에게 지원되는 보육방식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과 직업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위한 보조금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수단임(이태훈, 2019)
 - 즉 자녀보육 대체 보조금은 취업 부모가 6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보육사를 고용할 경우 지원받는 수당임. 급여액은 자녀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상이하며 부모는 전체 보육사 비용의 15%를 부담해야 함(이태훈, 2019)
 - 자녀교육 분담수당의 수혜조건은 3세 미만 영아를 돌보거나 입양아동이 20세미만으로 부모가 휴직 상태이거나 취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음(이태훈, 2019)
- 취업 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게 되면 월 397.21 유로(531,320 원)를 받고, 법정 노동시간 50% 미만을 일하면 256.77 유로(343,463 원), 법정노동시간 50~80%의 경우 148.12 유로(198,130 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게 됨(황성원, 2019)

6) 저출생 극복 연구 및 실행 기관: 국립인구학연구소(Institut national d'études démographiques: INED)

- 프랑스에서 인구와 가족 문제는 ‘국가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해당 문제 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정부 의무’ 라고 생각하고 있음(민유기, 2023)
 - 20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체계적으로출생, 사망, 이주 관련 다양한 통계를 계량화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세부적으로 이러한 구성 요소가 만들어내는 결혼, 가족관계,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와 집단심성 등을 정성적으로 분석 및 연구를 수행 중임(민유기, 2023)
 -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인구와 가족 정책, 인구의 양적 질적 유지나 발전을

위한 출산, 양육, 교육, 보건의료, 연금과 돌봄을 망라하는 사회보장 정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민유기, 2023)



자료: INED, 홈페이지(<https://www.ined.fr/en/research/research-teams/>, 검색일: 2024. 10. 05.)

[그림 31] 프랑스 국립인구학연구소 조직도

- 연구소의 미션은 전반적인 사명은 인구의 모든 측면을 연구하고 이 연구 결과와 관련된 교육을 통하여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인구 통계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프랑스 인구 통계 연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NED의 미션은 연구법 R327-1 및 이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1조 INED는 자체적으로 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구 문제에 관한 모든

형태의 연구를 수행하고 개발하며 장려함

- 제2조 인구 문제에 관한 모든 관련 연구와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모든 연구를 평가, 실시 또는 위탁함
- 제3조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프랑스 국내 및 해외에서 활동 분야와 관련된 모든 연구를 중앙 집중화하고 개발하며, 습득한 모든 지식을 정부 및 공공 기관에 알림
- 제4조 본 학회는 다양한 전문 분야의 연구를 통해 교육 및 연구 활동에 기여함
- 제5조 인구 통계학적 문제에 관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함
- 제6조 프랑스어 인구학 연구를 국제적으로 보급하고 프랑스어 사용을 촉진하면서 인구학 정보를 개발함

○ 국립인구학연구소는 연구 인력만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INED는 내부에 노령화 그룹, 불임 커플 그룹, 생식능력 그룹 식으로 세부 파트를 두고 마이크로 데이터를 대량 생산함(조선일보, 2024. 06. 21.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06/21/WK5PCVGPRVDSTKCFCHSCG564IY/>, 검색일: 2024. 10. 05.))

- 이들 기관은 그는 피임 수단과 출산과의 연계성, 30대 미만 청년들의 연애 양상 등의 연구를 통해 저출생극복을 위한 다각도차원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조선일보, 2024. 06. 21.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06/21/WK5PCVGPRVDSTKCFCHSCG564IY/>, 검색일: 2024. 10. 05.)

○ INED의 연구팀들은 10개의 단위와 1개의 혼합 연구 단위로 구성되어 있음. 팀은 1명 이상의 이사가 운영하며 프랑스의 연구 및 고등교육 평가 기관인Hcéres(High Council for Evaluation of Research and Higher Education)에서 5년마다 평가를 받음¹⁰⁾

- 연구팀은 생식 및 가족 본부, 성별, 성적 지향 및 불평등, 사망률, 건강 및 역학, 주택, 공간적 불평등 및 궤적연구, 국제이주와 소수민족, 경제 인구 통계, 역사와 인구, 이동, 경로 및 영역, 성 및 생식 건강과 권리, 프랑스 어린이 종단연구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생식, 가족 및 부부 연구팀(Fertility, Families and Couples) 프랑스와 다른 산업화 국가의 결혼과 가족 추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운 형태의 커플

10) 국립인구학연구소 홈페이지 내용, 연구자 재구성 (<https://www.ined.fr>)

파트너십과 가족 구조의 확산을 연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족 환경의 변화를 조사함

- 출산율 추세(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자녀 욕구, 다산, 피임 및 임신 중절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를 수행함

FA MILLES Fertility, Families and Couples Team director(s): Magali Mazuy	GENRE Gender, sexuality and inequalities Team director(s): Marie Bergström, Mathieu Trachman	MSE Mortality, Health and Epidemiology Team director(s): Carlo-Giovanni Camarda, Myriam Khlat	LIST Housing, spatial inequalities and trajectories Team director(s): Joanie Cayouette-Remblier, Guillaume Le Roux
MIM International migrations and minorities Team director(s): Mathieu Ichou, Ognjen Obucina	DÉMO ECO Economic Demography Team director(s): Carole Bonnet, Marion Leturcq	HIS TOIRE History and Population Team director(s): Lionel Kesztenbaum	MOP ART Mobility, Trajectories and territories Team director(s): Alain Blum, Loïc Trabut
SDS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Research team in partnership with Inserm - Univ Paris-Saclay - UVSQ) Team director(s): Elise de La Rochebrochard, Virginie Rozee	ELFE French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UMS : Ined-Inserm-EFS) Team director(s): Marie-Aline Charles	DÉMO SUB DEMOSUD - Demography of the Global South Team director(s): Géraldine Duthé, Valérie Golaz	

자료: INED, 홈페이지(<https://www.ined.fr/en/research/research-teams/>, 검색일: 2024. 10. 05.)

[그림 32] 프랑스 국립인구학연구소 연구부서 구성

- 성, 성적 지향 및 불평등(Gender, sexuality and inequalities)팀은 다양한 영역(성, 부부 관계, 가족, 건강)에서 성관계를 연구하며, 특정 경험(폭력, 이주)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연구함
 - 역사적 자료, 설문지 기반 설문조사, 인터뷰 연구를 사용하여 이러한 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소수자 그룹과 새로운 행동을 포함한 다양한 관행과 인구에 초점을 맞춤
- 사망률, 건강 및 역학 연구팀(Mortality, Health and Epidemiology)은 인구 고

령화의 맥락에서 프랑스와 세계의 사망률과 건강을 연구함. 사망률에 관한 연구는 기대수명, 노년기의 사망 및 생존 원인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건강 연구의 주제에는 인지된 건강, 만성 질환(특히 낭포성 섬유증), 위험 요인, 장애 및 의존성이 포함됩니다. 추세를 조사하고, 국제 비교를 하고, 불평등(사회적, 지리적, 성별 등)을 식별하고 관련된 수많은 기여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 인구 또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됨
- 또한 공중 보건(정부 정책, 지표 등의 영향) 및 의료 조직(의료 인구통계, 임종결정,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연구를 개발함

○ 주택, 공간적 불평등 및 궤적 연구팀(Housing, spatial inequalities and trajectories)은 주거 이동성, 특히 가족, 직업 및 주거 경로 간의 상호 작용 관련 연구를 수행함

- 거주 개념을 확대하고, 대인 관계 및 세대 간 연대를 고려하면서 가족 차원을 통합하고, 제도적 차원을 포함한 주변 네트워크에 관심을 둠
- 연구의 주요 초점은 주변 주거 상황에 있는 불안정한 인구의 경로로 가족 및 친구의 개인 네트워크, 노숙자, 주거 취약성 등을 논의하고 토론하고, 원본 데이터를 수집하고, 혁신적인 분석 방법을 개발함

○ 국제이주와 소수민족(International migrations and minorities)팀은 이주와 송출국과 수용국 모두의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

- 이주 이유, 이주에 대한 실질적 양식, 이민 인구의 통합 및 그들이 마주치는 차별 문제에 초점을 둠. 소수민족과 그들의 사회 인구학적 역학 및 정체성 형성 방식 등을 연구함

○ 경제인구통계팀(Economic Demography) 인구통계학과 경제학 간의 상호 작용을 연구함. 특히 출산율, 소비, 세대 간 이동 등과 관련하여 가족의 민주 경제적 행동을 분석함

-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간의 관계를 연구함. 퇴직 및 연금 문제에 중점을 두고 연령, 성별, 생산성, 임금 수준, 직업 이동 및 차별 간의 연관성을 조사함
- 개인이나 가족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의 영향을 측정

○ 역사와 인구팀(History and Population)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인구학의 역사

와 인구학 및 경제 지식의 발전을 연구함

- 과거 통계 조사(헨리 조사, TRA 조사)의 아카이브를 개발 및 관리하고, 과거 인구학적 추세를 밝히기 위해 포함된 데이터를 분석함
- 고고 인구학자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함. 인간 수명의 연장과 과거 인구의 건강 상태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중요한 연구과제로 인식하고 활발히 진행 중임

○ 이동성, 경로 및 영역 연구팀(Mobility, Trajectories and territories) 경험, 자기 보고 또는 타인이 귀속한 개인 및 집단 정체성의 다양성 연구에 초점을 둠. 이주 및 사회적 궤적 등과 관련된 사람들의 다양한 관계망을 연구함

-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적, 공간적, 문화적 범주의 구성을 연구함. 광범위한 지리적 및 연구 영역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범주가 다른 정치 시스템 내에서 인구 관리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비교 연구함

○ 성별 및 생식 건강과 권리 연구팀(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은 파리-사클레 대학, 베르사유-생-켄틴-앙-이블린 대학팀과 함께 연구를 협력하여 수행함. 연구 분야는 성, 피임 관행, 임신 중절 및 의학적 보조 생식임

- 건강의 다양한 차원(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 관계 및 성 관련 젠더를 중심으로 인구 통계, 사회학, 역학, 건강 경제학 및 임상 연구를 접목하여 분석함
- 주요 일반 인구 조사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현재 접근할 수 있는 파리 지역 공공 병원 시스템을 포함한 복잡한 행정 데이터베이스도 활용함

○ 프랑스 어린이 종단연구팀(French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은 2011년 프랑스 본토에서 태어난 18,300명의 어린이를 출생부터 20세까지 추적연구함. 환경, 가족 관계 및 생활 조건이 발달, 건강, 사회화 및 학업 경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함

○ 프랑스 국립인구연구소의 주요 연구 분야와 인력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31〉 INED 연구팀의 연구분야 및 인력 구성

연구팀명	연구 분야	연구인력 구성
생식, 가족 및 부부 (Fertility, Families and Couples)	가족구조 변화, 가족환경, 출산을 변화, 결혼 및 커플 파트너십	- 내부연구원(INED researchers): 19명 - 외부관련연구원(Associated researchers): 4명 - 박사과정(PhD students): 11명 - 박사후과정(Post-doctoral students): 3명
성, 성적 지향 및 불평등 (Gender, sexuality and inequalities)	생애주기에 걸친 성별, 젠더관련 폭력 및 불평등과 사회적 관계 연구, 성소수자 연구	- 내부연구원(INED researchers): 12명 - 외부관련연구원(Associated researchers): 4명 - 박사과정(PhD students): 6명 - 박사후과정(Post-doctoral students): 6명
사망률, 건강 및 역학 (Mortality, Health and Epidemiology)	장수, 노화, 사망률과 지역 불균형에 따른 사망원인 분석, 건강과 사망률 격차 연구	- 내부연구원(INED researchers): 17명 - 외부관련연구원(Associated researchers): 5명 - 박사과정(PhD students): 6명 - 박사후과정(Post-doctoral students): 5명
주택, 공간적 불평등 및 궤적 연구 (Housing, spatial inequalities and trajectories)	주거지역과 공간역학, 프랑스 주택 문제와 개인생활영향, 사회적불평등역학: 교육, 사회, 직업적 지위 및 주거 연구	- 내부연구원(INED researchers): 10명 - 외부관련연구원(Associated researchers): 4명 - 박사과정(PhD students): 4명 - 박사후과정(Post-doctoral students): 3명
국제이주와 소수민족 (International migrations and minorities)	국제이주민 이동원인, 민족 및 인종 다양성과 사회적 계층화, 이민, 통합 및 차별금지 정책 연구	- 내부연구원(INED researchers): 11명 - 외부관련연구원(Associated researchers): 4명 - 박사과정(PhD students): 10명 - 박사후과정(Post-doctoral students): 2명
경제인구통계 (Economic Demography)	생애주기와 사회경제적 불평등, 노령화와 사회정책, 가족관계 및 공공정책 한계분석, 일·생활균형변화, 민간-공공분야 불평등 연구	- 내부연구원(INED researchers): 13명 - 외부관련연구원(Associated researchers): 6명 - 박사과정(PhD students): 8명 - 박사후과정(Post-doctoral students): 4명 - 분석가(Engineers): 1명
역사와 인구 (History and Population)	18-20세기 인구와 경제과학, 산업화이전 인구의 건강, 질병 및 사망률, 인구통계적 행동의 이질성 연구	- 내부연구원(INED researchers): 6명 - 외부관련연구원(Associated researchers): 4명 - 박사과정(PhD students): 2명 - 박사후과정(Post-doctoral students): 2명

이동성, 경로 및 영역 (Mobility, Trajectories and territories)	권위주의와 통치권력 역사, 역사적 공간 규모 , 영토의 역동성과 관계망 연구	• 내부연구원(INED researchers): 8명 • 외부관련연구원(Associated researchers): 5명 • 박사과정(PhD students): 2명 • 박사후과정(Post-doctoral students): 8명	
성별 및 생식 건강 권리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성생활 및 생식건강과 권리 연구, 전생애 성 및 생식건강과 권리 연구	• 내부연구원(INED researchers): 11명 • 외부관련연구원(Associated researchers): 5명 • 박사과정(PhD students): 8명 • 박사후과정(Post-doctoral students): 5명 • 분석가(Engineers): 3명	
프랑스 어린이 종단연구 (French Longitudinal Study of Children)	코호트연구	• 박사후과정(Post-doctoral students): 2명 • 분석가(Engineers): 13명	
연구 인력 총계	내부연구원(INED researchers)	107명	262명
	외부관련연구원(Associated researchers)	41명	
	박사과정(PhD students)	57명	
	박사후과정(Post-doctoral students)	40명	
	분석가(Engineers)	17명	

자료: INED 홈페이지, 연구자 구성(<https://www.ined.fr/en/research/research-teams/>, 검색일: 2024. 10. 05.)

- 프랑스 국립인구학연구소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 수행기관임. 인력만 200여 명 달하는 INED는 출생과 이민 등 14개 분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해 정부에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등을 제언하고 있음
- 프랑스의 인구정책은 정쟁 대상에 두지 않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INED 기관의 일관성 있는 인구정책 연구는 보장받음.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 간 신뢰 형성이 가능하였으며 출산율 반등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2. 스웨덴

1) 합계출산율의 변화

-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81년 1.61명에서 1991년 2.11명으로 증가하였으나, 1998년 1.50명으로 감소한 후에 2010년 1.98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음(김형구, 2023). 2020년에는 1.66명으로 다시 감소하는 등 약 10년 기준으로 등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김형구, 2023)

〈표 32〉 스웨덴 합계출산율 변화

(단위: 명)

구분	인구(만 명)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스웨덴	1,026	1.68	2.13	1.54	1.98	1.66

자료: 통계청 KOSIS, OECD 합계출산율, 2023.

- 스웨덴의 연간 출생자 수는 2010년 115,641 명 이후 2017년 115,416 명, 2019년 114,523 명으로 소폭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김형구, 2023)
 - 그러나 스웨덴 인구는 2010년 938.2만 명에서 2017년 1,005.8만 명으로 1,000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2020년 1,036.9만 명, 2022년 1,054.9만 명으로 2017년 이후 2022년까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김형구, 2023)
- ‘스웨덴은 노동인구 증대, 여성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출산율 증대, 부모의 일·가정 균형을 통한 빈곤 위험의 감소 등 현대 사회에 새로운 도전이 된 사회적 과제들을 지속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보완’ 하였음(김민정 외, 2019)¹¹⁾
- 스웨덴은 아동수당의 조기 시행, 여성의 사회 진출에 따른 포괄적 가족복지 시행, 육아·보육·대학원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사교육비 없는 방과후 과정 등을 통해 출산에 따른 부모분담률을 낮추는 등 출산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

11) 김민정 외, 저출산세대의 가족정책, 한울아카데미 : 경기, 2019. p.182.

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개발하였음(김형구, 2023)

- 특히 북유럽의 아동·가족·사회복지를 통한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은 가장 중요한 출산정책 수단이 되었음(최연혁, 2017)¹²⁾. 스웨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함과 동시에 일·가정 양립과 육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립하였음(김형구, 2023)

2) 경제적 지원 정책

(1) 부모보험

- 스웨덴의 「부모보험」은 「사회보험법」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 기금으로 운영되며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 비적용자의 경우는 일반재정을 통해 급여를 받게 됨. 부모보험은 사회보험의 형태이지만 전 국민 대상 제도임(윤기찬 외, 2022)
- 스웨덴 사회보험청의 사회보험기금은 고용주가 근로자 월급의 31.42%, 근로자가 월급의 2.6%를 부담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전체 기금의 85%를 부담하고 나머지 15%는 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임(조덕진, 2018)¹³⁾
- 「부모보험」 제도는 3종류이며 휴직 전 소득의 80%를 1년간 수당을 지급함(윤기찬 외, 2022)
 - 일반 부모보험 급여 : 일반적인 출산·육아 휴직 시 소득 지원
 - 한시적 부모보험 급여 : 아이 간호 등 단기 휴가 지원
 - 임신 급여 : 임신 중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 부모가 모두 부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480일 중 390일은 소득비례 급여 기

12) 최연혁, 인구절벽 탈출할 저출산 해법은? 해외사례① 스웨덴, 나라경제, 2017. 5, p11.

13) 조덕진, 전계자료. 2018. 11. 28.

간으로 평균 급여의 77.6%가 보장되며, 소득인정 최대 상한선은 월 임금 약 503만 원¹⁴⁾임(윤기찬 외, 2022). 나머지 90일은 1일 180SEK(23,380 원)를 정액으로 지급받음.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에서 10~20%까지 소득을 대체하여 지원함(윤기찬 외, 2022)

- 실업자는 과거 취업시 임금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고 학생 및 구직자의 경우 1일 250SEK(32,472 원)를 총 195일 동안 받게 됨(윤기찬 외, 2022)
- 2018년 기준 부모보험 총지출 규모는 전체 사회보험 현금급여 지출액의 약 18.7%로서 439억SEK(5조 4,702억 원)이며 GDP 대비 0.9% 수준임(윤기찬 외, 2022). 일반 부모보험 급여 80%, 한시적 부모급여 18.5%, 임신급여는 1.5%를 각각 차지함(양재진, 2019)¹⁵⁾

(2) 가족예산

- OECD Family Data Base 2019년 기준 스웨덴의 GDP 대비 가족예산 지출 비중은 3.42%로서 세계 2위이며 현금 1.29%, 서비스 2.13%, 가족세금우대 0.0%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OECD Family Data Base, <http://www.oecd.org>, 검색일:2024.09.01.)¹⁶⁾
- 2018년 기준 스웨덴 부모휴가 지출예산은 30억 유로이며 양육보조금과 주택보조금 등을 합하면 100억 유로 등 130억 유로(18.1조 원) 규모임(김삼용, 2019)¹⁷⁾

3) 돌봄서비스 정책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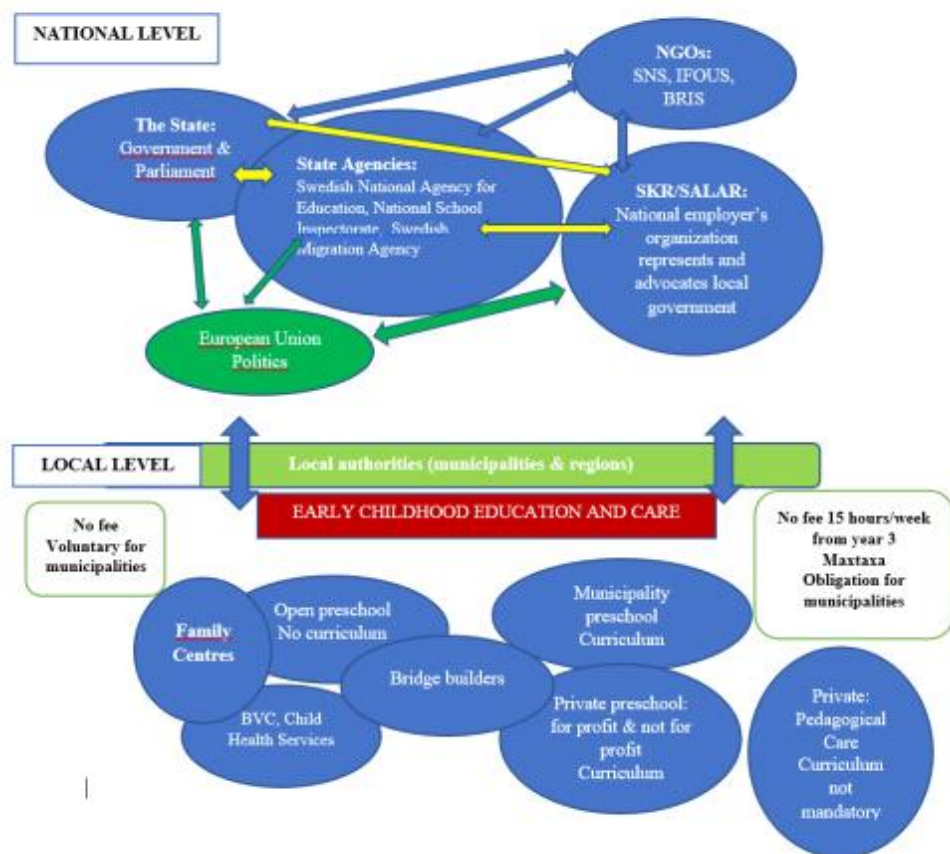
14) 월 임금 38,750SEK(SEK: 스웨덴 크로나, 2024년 현재 환율 기준: 1크로나당 129.85원)

15) 양재진 외, 전계자료, pp.13~14.

16) OECD Family Data Base, <http://www.oecd.org>, 2024년 9월 1일 검색.

17) 김삼용, 전계자료, 2019. 12. 4.

- 스웨덴은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ECEC)을 위해 돌봄관련 정책과 법률은 중앙 집중화된 운영체제지만 교육 운영의 실제적 주체는 지자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삼식, 2012)
- 지자체 수준에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주요 주체는 가족센터, 개방형 유치원, 아동건강센터 등이 포함(이삼식, 2012)



자료: AL Lindgren(2024), 직접인용

[그림 33] 스웨덴 ECEC 제도의 주요 행위자

- 스웨덴에서는 부모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18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음(이삼식, 2012)
- 18개월 이상에서 취학 전까지는 반일제 무상보육(기본)을 제공하며, 만3~6세는 주당 15시간까지 무상(취업모는 주당 40시간까지 무료)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이삼식, 2012)

- 스웨덴 아동은 연령 및 부모의 취업 등 가구 여건에 따라 피르스콜라(스웨덴 어린이집, 취학전 유아학교), 개방 피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 활동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이삼식, 2012)
- 피르스콜라, 유아학급 등을 포함한 유아학교의 경우 전체의 75%가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음(이삼식, 2012)

<표 33> 스웨덴 보육시설 및 특징

기관		이용아동 연령	특징
유아학교	피르스콜라 (pre-school:foskola)	취학 전 아동 (만1~5세)	- 취업모를 위한 시설 - 연중무휴 종일보육서비스(부모 근무시간에 따라 조정 가능)
	개방 피르스콜라 (open preschool:open forskola)	취학 전 아동 (만1~5세)	- 전업주부를 위한 시설 - 시간제(정기적 등록 필요 없음) - 부모, 가정보육교사 등이 함께 방문하여 가정에서 접하기 어려운 교재 등 이용
	유아학급 (pre-school class)	취학 전 아동 (만6세)	- 취학 직전 유아를 위한 기관 - 보육·유아교육 통합에 따라 만1~5세 피르스콜라, 만6세 유아학급으로 구분
가정보육시설		취학 전 아동 (만1~6세)	- 지자체의 아동보육사들이 가정보육 제공 - 특별한 이유로 소집단 양육이 필요하거나 인근에 유아학교가 없는 아동 등 대상
여가활동센터		취학 후 아동 (만 7~12세)	- 연중무휴, 시간제 서비스 제공 - 학교교육 보충, 아동발달 지원

자료: 이삼식(2012), 직접인용

- 피르스콜라(pre-school)는 만 1~5세의 아동이 다니는 종일제 유아보육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가장 유사한 보육 유형임(안현미, 2019)
- 학교나 유아학급에 다니기 전인 만 1~5세 아동은 피르스콜라(preschool)이나 개방형 피르스콜라(open preschool), 가정보육(family day care)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안현미, 2019)

- 피르스콜라는 부모가 취업·학업중이거나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취학 전 연령의 아이들에게 종일제 보육을 제공함(안현미, 2019)
 - 대체로 주 5일 동안 이른 아침(6:30)부터 늦은 오후(18:30)까지 연중 개방됨. 스웨덴은 여름에 일출시간이 새벽 3시반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06:30에 시작함(백선정, 2016)
- 피르스콜라에서는 보육과 교육이 통합되어 운영됨(안현미, 2019). 아동들은 아침과 점심 식사를 피르스콜라에서 먹으며 하루를 보내며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사회성을 기르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백선정, 2016)
 - 대부분의 피르스콜라에는 1~4개의 그룹이라 불리는 집단이 있는데 혼합 연령 그룹으로 이루어지며 평균 15명 정도의 아동으로 구성되고 3명의 교사로 이루어져 있음(백선정, 2016)
- 종일제 피르스콜라에는 1~4개의 학급이 있으며, 한 학급은 평균 15명, 전체 정원 평균 42명 정도로 학급 수도 평균 2~3개의 비교적 소규모 시설 규모로 운영됨(최윤경, 2015)
 - 피르스콜라 학급당 아동수는 평균 17.4명이며 평균 규모는 1~3세 아동의 경우 14.6명, 3~5세 19.7명, 혼합연령집단은 18.4명으로 구성됨(최윤경, 2015)
- 팀을 구성하는 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2명의 유아 교사와 1명의 보조 교사이며, 3명이 모두 유아교사인 경우, 2명이 유아교사이고 1명이 보조교사인 경우, 2명이 보조교사이고 1명이 유아교사인 경우도 있음(최윤경, 2015)
 - 종일제 피르스콜라의 경우, 대개 학급당 3명의 교사가 팀티칭(teamteaching)의 형태로 돌보고 가르치며, 시간제 교사 및 대체교사의 활용도가 높음(최윤경, 2015)
- 개방형 피르스콜라(open pre-school)는 전업주부나 시간제 취업부모를 위한 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함. 대부분 무료이며, 주로 시간제로 운영됨(최윤경, 2015)

-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달라지고, 정규 등록하지 않아도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정기적인 출석의 개념이 없음(최윤경, 2015)
 - 개방형 피르스쿨라는 다른 유형의 보육보다 비형식적인 특성이 있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나 가정보육모 등 양육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최윤경, 2015)
- 개방형 피르스쿨라의 주목적은 전업주부나 아이 돌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양육 기술을 키울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역할도 수행함(최윤경, 2015)
 -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에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며, 특히 미취업 부모나 육아휴직 중인 부모에게 중요한 기관임. 개방형 피르스쿨라는 일종의 가족지원센터로서 기능을 함(최윤경, 2015)
 -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 하는 개방형 피르스쿨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아 교사 1인과 보조교사 1인의 2명으로 이루어지며, 교사는 부모에게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고 사회적 교류의 장을 마련해주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함(최윤경, 2015)
 - 실제 이용시간은 반일제에서 시간 연장, 야간보육까지 부모의 근로 시간에 맞춰 다양하게 제공되는 점, 그 밖에 종일제 공보육시설 외 사적영역의 다양한 서비스 이용권을 보장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 정책 성격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음(최윤경, 2015)

4) 일·생활 균형제도

(1) 부모휴가제도

- 1974년 스웨덴은 유럽 최초로 남성과 여성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

는 제도를 도입하였음(김형구, 2023). 즉 자녀 출산 후 14주간의 유급 여성산 후휴가 제도가 부모육아휴가로 확대 재편되어 출산후 6개월 동안 부모가 나누어서 유급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김형구, 2023)

- 1980년 부모육아휴가제도는 1년으로 확대되었고 3개월 추가 휴가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1995년에는 부모 각자에게 육아휴직 1개월씩 할당하는 ‘엄마할당제’와 ‘아빠할당제’를 도입하였음(김형구, 2023). 할당기간을 2002년 60일, 2016년 90일로 각각 증가시키는 개혁을 추진하였음(김형구, 2023)

- 육아휴직은 여성만이 사용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전환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개혁을 추진한 결과,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54명에서 2010년 1.98명, 2016년 1.85명 등으로 증가하였음(김형구, 2023)

- 스웨덴의 부모휴가제도는 자녀 1인당 총 480일이며 부모가 각각 240일씩 서로 나누어서 1년에 최대 3회까지 분절하여 사용할 수 있음(김형구, 2023). 남성의 육아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아빠의 달’ 의무사용 기간 90일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됨(김형구, 2023)

-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는 아동 돌봄에 대한 젠더 평등문화가 강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남성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음(김형구, 2023). 따라서 남성의 돌봄 참여도 제고 정책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윤승희, 2019)¹⁸⁾

- 1994년 남성만 사용할 수 있는 ‘아빠의 달(Daddy Month)’을 도입하여 자녀를 돌보는 새로운 아빠 상을 제시하고, 부모의 자녀 양육권리, 자녀양육 시간보장 권리 인식, 아빠의 권리행사 인식 전환 등으로 돌봄문화를 변화시켰음(김형구, 2023)

- 스웨덴은 정책 주도형 남성의 돌봄 참여도 제고를 통해 ‘라테파파’(Latte

18) 윤승희,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추수밭 : 서울, 2019. pp.92~93.

Papa)가 일반화되었으며 남성의 부모휴가 사용률은 1977년 2%에 불과하였지만 2017년 8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음(김형구, 2023)

- 스웨덴은 지속적으로 아빠의 자녀 돌봄 참여문화를 정립시켜 기존 여성 중심의 고착된 돌봄 문화를 남성 참여 문화로 전환시켜 정책이 문화를 바꾸는 사례를 창출하였음(윤승희, 2019)¹⁹⁾
- 특히 스웨덴의 ‘바바’ (Vabba : varda 돌보다와 barn 아이의 합성어) 문화는 육아휴직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자녀 돌봄 및 병 간호 등에 따른 결근, 조퇴, 지각 등을 사회적·제도적으로 인정하며 유급돌봄 급여가 가능함(김형구, 2023)
- ‘바바’는 당연한 권리와 문화로 정착되었으며 회사는 재택근무 또는 타 근무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자녀돌봄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을 확립하였음²⁰⁾

3. 일본

1) 합계출산율의 변화

-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4년 2.05명에서 2005년 1.2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2015년 1.45명으로 소폭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2020년 1.34명 등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음. 일본은 2000년 이후 20년간 1.3명대를 유지하고 있음가 능함(김형구, 2023)

19) 윤승희, 스웨덴의 저녁은 오후 4시에 시작된다, 추수밭 : 서울, 2019. pp.96~98.

20) 최연혁, 스웨덴 패러독스, 전계자료.

〈표 34〉 일본의 합계출산율 변화

(단위: 명)

구분	인구(만 명)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일본	10,257	1.75	1.54	1.36	1.39	1.34

자료: 통계청 KOSIS, OECD 합계출산율, 2023.

- 일본은 합계출산율이 1989년에 1.57명으로 저하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1.57 쇼크’에 따라 스웨덴,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모델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서구와 일본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많은 한계점이 나타났음가능함(김형구, 2023)²¹⁾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두 번의 베이비붐을 제외하면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 이하로 유지되었음. 2005년 합계출산율이 1.26명으로 낮아진 후 2017년에 1.63명까지 증가하였음(조성호, 2023)
 - 그러나 출생아 수는 2017년에 946,065 명으로 100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2019년에는 865,239 명으로 80만 명대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가능함(김형구, 2023)

2) 일본의 저출산 대응 방향

-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그동안 ‘저출산대책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책정되고 있었으나, ‘아동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아동대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됨(조성호, 2023)
 - 저출산 대책의 기본방침(아동미래전략방침)이 2023년 6월에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아동대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제시됨(조성호, 2023)
 - 일본 정부는 현재의 저출산 상황에 대해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6-7년의 기간을 저출산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음(조성호, 2023)

21) 山田昌弘, 日本の少子化対策はなぜ失敗したのか?, 光文社新書: 東京, 2022.

- 출산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추가 경정 예산으로 신설된 ‘출산·양육 응원 교부금(10만 엔)’을 제도화하고 출산일시금을 기존의 42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인상하고,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던 분만 비용을 2026년까지 보험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메디파나뉴스, 2023.10.28.)

3) 돌봄서비스 및 운영

(1) 「어린이가정청」 설립

- 2022년 6월 어린이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어린이 기본법(こども基本法)」과 「어린이가정청(こども家庭廳) 설치관련법」이 제정되었음. 「어린이가정청」은 11개 정부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저출산과 육아지원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저출산과 고령화대책을 분리·운영하게 됨(김형구, 2023)
- 「어린이가정청」은 총리대신 직속기관으로 내각부 외청으로 설치하여 어린이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김형구, 2023). 어린이 정책 담당 내각부 특명 담당대신과 어린이가정청 장관을 임명함(김형구, 2023)
 - 기획 입안·종합조정 부문, 성육 부문, 지원 부문 등임. 기획 입안·종합조정 부문은 부처별로 실시해 온 어린이정책을 통합적으로 집약하여 어린이 정책의 기본 체계(大綱) 작성과 정보 DB를 구축함(김형구, 2023)
- 어린이 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서 「어린이가정청」설립은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첫 출발로 평가되고 있음(김형구, 2023). 아동을 사회의 중심에 두고 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관점에서 가족기능 및 가정 기반의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김형구, 2023)²²⁾

- 「어린이가정청」이 문부과학성과 같은 타부처에 어린이 문제와 관련한 정책에 관여하거나 연계할 수 있는 ‘권고권’을 부여하였음(김형구, 2023). 그러나 신설된 정원 300명 규모의 조직이 2,000명 이상의 문부과학성에 실질적인 정책 권고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김형구, 2023)

4) 일·생활균형 제도

- 제도 측면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 목표를 상향하고, 육아휴직 취득률을 유가증권보고서에 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조성호, 2023)
- 급여 측면에서는 남성의 ‘산후파과휴직’ (최대 28일) 급여율을 현재 67%(세후 80%)에서 80% 정도(세후 100%)로 인상하여, 자녀 출산 후 일정 기간 내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조성호, 2023)
- 또한 육아휴직 중의 사회보험료 면제 및 육아휴직 급여의 비과세 조치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큰 폭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주위 직원이 분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수당 지급도 검토하고 있음(조성호, 2023)
- 자녀 양육기(연령)에 따라 유연한 근무가 가능한 근무 방식 제도를 추진하는데, 자녀의 연령이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이면 이용할 수 있는 원격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휴가 등을 기업이 마련하고 노동자가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부모와 자녀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조성호, 2023)
- 자녀가 2세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

22) 구혜경, 전계자료, pp.6~7.

하여 ‘육아 근무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하고 이 외에 취학 전 자녀가 아픈 경우 연 5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녀 간호 휴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이벤트(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입학식 등) 참가 등 휴가 취득 사유 범위 확대함(조성호, 2023)

-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하는 노동자의 심신 건강을 위하여 근무일 간의 최소 휴식 시간 보장 및 스트레스 체크 등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제도를 검토하며, ‘선택적 주휴 3일 제도’를 추진함(조성호, 2023)
 - 이 제도는 기업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데, ① 1일 근로시간을 늘려 주당 40시간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유지되는 경우, ② 1일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③ 1일 근로시간을 줄이는 반면 임금은 유지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조성호, 2023)²³⁾
- 일본 후생노동성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2021년 출생동향 기본조사’에 따르면 대졸 이상 학력의 기혼여성 출산율이 1.74명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의 1.66명에 비해 증가하였음(조성호, 2023)

5) 일본의 저출산 대응 방향

-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그동안 ‘저출산대책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책정되고 있었으나, ‘아동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아동대책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규정됨(조성호, 2023)
- 현재 일본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략적인 방향성은 다음과 같음(조성호, 2023)
 - 첫째, 청년세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의향이 있으면서도 소득 및 고용 불안정으로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의 안정성 및 질적 측면의 향상을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의 소득이

23)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주휴 3일제 설명 참조. <https://part-tanjikan.mhlw.go.jp/tayou/holiday3.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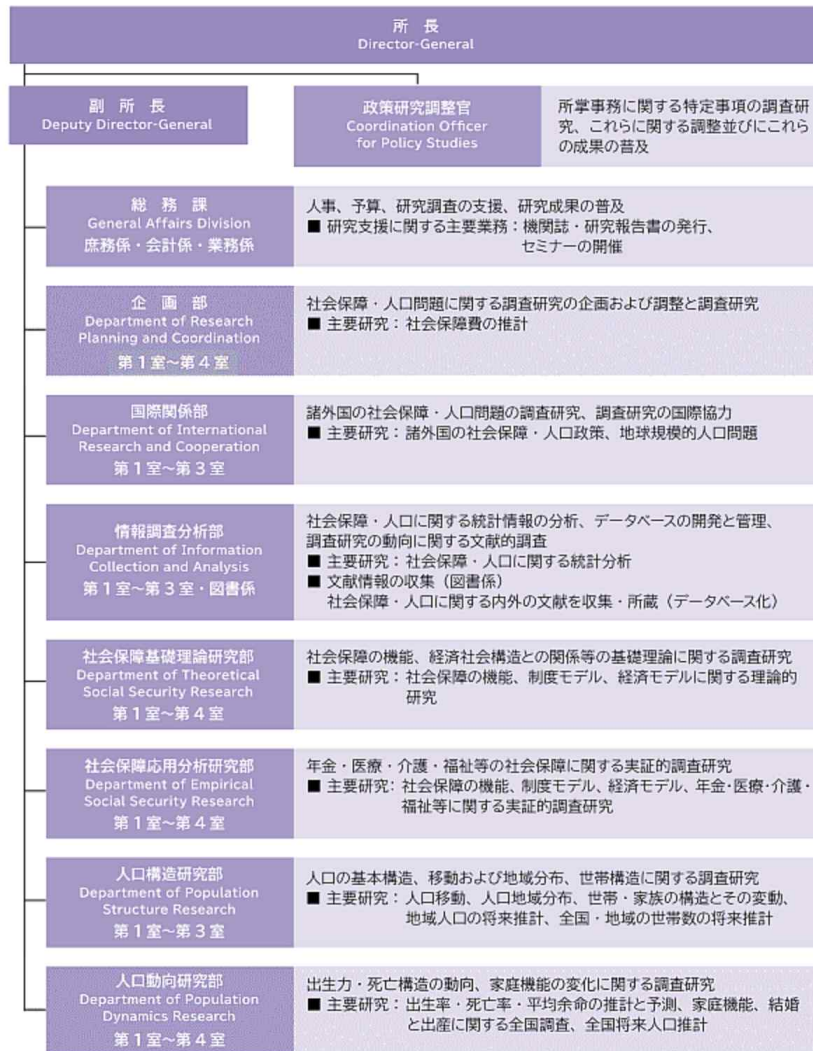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아동·양육 지원 가속화 플랜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조성호, 2023)

- 둘째, 자녀를 양육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 및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이 존재하므로, 남녀의 역할을 고착시키는 뿌리 깊은 젠더 의식을 타파하고 사회 전체적인 인식 및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대책 추진을 지향함 (조성호, 2023)
- 셋째,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및 정신적 부담과 자녀 양육 가정에서 느끼는 불공평이 존재하므로, 우수한 교사 확보, 교육 환경 정비, GIGA 스쿨 구상²⁴⁾ 등의 질 높은 공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적인 학교 급식 무상화를 통한 가정의 부담 완화를 지향함(조성호, 2023)

6) 일본 저출생 극복 연구 및 수행기관: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일본어: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영어: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는일본 후생노동성의 시설 등 기관이다. 인구 연구,사회 보장연구를 전담함(송태민 외, 2010)

24) 2019년 문부과학성에서 발표한 것으로, 정보기술(IT) 시대를 맞아 학생 1인당 1단말기 및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여 학생 개인의 창조성을 키우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임.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s://www.mext.go.jp/a_menu/other/index_0001111.htm.



[그림 34]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조직도

- 일본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연구 및 통계는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산하단체인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NIPSSR)와 독립행정법인 고령자고용지원기구(Japan Organization for Employment of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JEED)가 각각 관련된 통계DB를 생성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송태민 외, 2010)

- 국립 사회보장인구연구소는 1996년 12월 후생노동성의 인구문제연구소와 특수법인 사회보장연구소가 통합하여 조직된 후생노동성 산하의 국립 정책연구기관임(송태민 외, 2010)
 - 인구 변동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장래 인구의 정확한 예측을 수행함과 동시에 연금, 의료, 개호, 보육 등 사회보장의 각 분야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국립 사회보장인구연구소의 주요한 역할임
 - 국립 사회보장인구연구소는 2001년 1월 후생성과 노동성이 통합하여 후생노동성이 출범하게 된 것을 계기로 노동 분야도 연구 영역에 포함하여 인구, 경제, 사회보장의 상호관계에 대한 전체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이론적·실증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직 구성은 소장, 부소장, 정책연구조정관으로 구성되어 있음(송태민 외, 2010). 하부 부서는 총무과, 기획부, 국제관계부, 정보조사분석부, 사회보장기초이론연구부, 사회보장응용분석연구부, 인구구조연구부, 인구동향연구부로 구성되어 있음(송태민 외, 2010)

〈표 35〉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부서 및 역할

부서명	역할	기능 및 주요 연구
총무과	인사, 예산, 연구조사 지원, 연구성과 보급 등의 연구지원을 수행	기관지, 연구보고서 발생, 세미나 개최 등
기획부	사회보장, 인구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의 기획 및 조정과 조사연구	주요연구: 사회보장비 추계
국제 관계부	외국의 사회보장, 인구문제 조사연구, 조사연구 국제협력	주요연구: 외국의 사회보장과 인구정책
정보조사분석부	사회보장, 인구등 공개된 통계정보의 분석, DB개발 및 관리, DB활용 연구 동향에 관한 문헌 조사	주요연구: 사회보장, 인구통계분석
사회보장기초이론	사회보장의 기능, 경제사회구조와의 관계 등	주요연구: 사회보장 기능, 제도 모델,

연구부	기초이론에 관한 조사연구	경제모델 이론
사회보장응용분석 연구부	연금·의료·돌봄·회사 등의 사회보장 실증적 조사 연구	사회보장기능, 제도모델, 경제모델, 의료돌봄복지 실증적 조사연구

자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자구성(<https://www.ipss.go.jp/>)

- 국립 사회보장인구연구소는 매년 ‘인구통계자료집’을 발간하고 이를 통해 일반인구 통계를 공표하고 있고 장래 추계인구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여 장래 추계인구의 정보를 제공함(송태민 외, 2010)
- 국립 사회보장인구연구소에서는 인구와 세대에 관한 추계를 전국과 지역단위로 실시하여 ‘일본의 장래 인구추계’, ‘도도부현별장래 인구추계’, ‘시군구별 장래 인구추계’, ‘일본의 세대주 수의 장래 추계(전국 추계)’, ‘일본의 세대주 수의 장래 추계(도도부현별 추계)’를 공표하고 있음(송태민 외, 2010)

〈표 36〉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 주요 연구분야 및 통계DB

연구분야	연구 세부내용
인구의 동향과 전망	- 일본의 총인구, 인구증가, 성비 및 인구밀도 - 인구의 연령 구조에 관한 지표: 1884~2005년 - 연령별 인구 및 증가율의 장래 추계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높은 나라
출생에 관한 통계	- 출생수, 보통 출생률, 및 합계 특수 출생률 - 성별 출생수 및 출생 성비 - 여성의 출산력 및 재생산력에 관한 주요 지표 - 주요국 여성의 연령별 출생률 및 합계 특수 출생률
결혼 및 배우관계	- 초혼·재혼별 혼인수 및 보통 혼인율 - 성별 생애 미혼율 및 SMAM(정태 평균 초혼 연령) - 성, 국적별 일본인과 혼인 한 외국인수 - 주요국의 혼인율 및 이혼율
사망·수명	- 성별 사망수 및 사망 성비, 성별 주산기 사망수 및 비율 - 특정 연령의 평균여명 - 주요 선진국의 평균수명 - 주요 사인별 사망수, 비율 및 비율

세대	- 가족유형별 일반 세대수와 장래 추계 - 세대의 가족유형별 아이 인구 - 외국인 세대의 가족유형
노동력	- 노동력 상태별 인구 및 비율- 산업별 취업인구 및 비율- 성/연령별 고용 비율
지역이동/지역분포지역이동/지역분포	- 현내/현간/시군간 이동수 성비 및 비율 - 인구증가율 및 감소율이 큰 시읍면 - 세계주요도시의 인구추이와 장래추계
국적 별 인구 및 국제 이동	- 국적별 등록 외국인 인구 - 성별 국적 이동에 의한 일본인 인구의 순증가
교육	- 성, 교육정도별 인구 - 성별 고등학교, 대학에의 진학율
광역지자체별 통계	- 광역지자체별 성별, 인구, 인구성비,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 광역지자체별 생산연령 - 광역지자체별 노년인구

자료: 송태민·이중순(2010);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ipss.go.jp/>) 연구자 재구성,

-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인구연구소는 인구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향요인을 발견하고 DB를 구축하여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이를 토대로 일본의 출생률의 저하·인구의 고령화에 대한 제도·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국민 및 정책 공감대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음(송태민 외, 2010)

4. 해외 저출산 대응 관련 사례 분석 시사점

-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이에 따른 사회보장 재정 급증은 후기산업 사회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 가족정책이 주요 선진국의 최우선 순위로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연금복지, 가족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건강복지, 실업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한 지 거의 1세기를 맞고 있는 서구 유럽 산업 국가들의 특징은, 사회복지 예산이 정부 예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막중하다는 점과 만약 노동력 감소가 정부의 연금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경우 기존 복지제도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임
 - 즉, 저출산-생산가능인구 감소-노령인구 증가-의료 및 돌봄 비용 증가-국가 연금부담 증가-사회복지 붕괴라는 공식은 국가의 위기로까지도 인식
 - 이와 같은 이유로 유럽연합에서는 출산장려정책과 가족정책이 지속발전가능한 핵심 아젠다로 우선순위의 정책이 됨

- 프랑스는 파격적인 출산·육아 지원을 통해 저출산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였음. 가톨릭 문화에 기반한 가족주의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족과 모성을 중시하여 가족정책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음(김형구, 2023)
 -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은 가족 지원정책과 교육정책의 협업을 통해 전개되고 있음. 아이 출산 및 전 생애 단위로 경제적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있음(김형구, 2023). 급여수당, 출산 전 수당, 출산수당과 보육 및 교육 지원금 등 상호 보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김형구, 2023)
 - 프랑스의 경우 EU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남성의 육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남성의 육아휴직을 제고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특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복직이 보장되는데, 동일한 월급과 직급을 보장하면서 복직을 시키도록 노동법에 규정함(김형구, 2023)
 - 프랑스는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육아와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정책, 사회복지, 노동정책, 교육정책 등이 종합적이고 다자적인 접근은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음(김형구, 2023)
 - 기초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지역화 활동을 위해 보육통합지원서비스 시스템

구축하여 가족정책과 교육정책, 사회복지 정책과 지역사회개발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협업하는 ‘학습과 돌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자연스럽게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김형구, 2023)

- 프랑스는 보육제도는 중앙집권적 공교육 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연령별 이원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도(département) 단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크레쉬의 설립, 인가, 개보수 심사,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면(commune) 단위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크레쉬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정미라·조희연, 안재진, 2009 : 34)
- 그리고 프랑스는 만 3세 이하의 보육서비스와 3세 이상의 유아교육으로 구분되며, 보육서비스의 경우 시간제 탁아소, 아동정원, 가정보육모, 여가센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기관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화도, 2007)

○ 스웨덴의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을 대폭 증대하여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부모보험」은 「사회보험법」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기금으로 운영되며 자영업자 등 사회보험 비적용자의 경우는 일반재정을 통해 급여를 받게 됨. 부모보험은 사회보험의 형태이지만 전 국민 대상 제도를 시행함(윤기찬 외, 2022)

- 부모보험제도를 통해 육아휴직 활용을 출산 전-후로 나누어 유급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윤기찬 외, 2022)
- 스웨덴의 일·생활 균형은 남성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러한 결과 젠더 평등문화가 정착되어 아동 돌봄에 대한 남성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윤기찬 외, 2022)
- 따라서 남성 부모 휴가,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80% 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이며 아빠의 육아 참여로 인한 유연근무제 및 대체인력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사회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윤기찬 외, 2022)

○ 단순 시혜성 지원정책의 실패로 일본은 사회구조적 측면의 인식개선에 투자하고 있음(송태민 외, 2010)

- 일·생활균형제도 활용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해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음(송태민 외, 2010)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육아 근무시간 단축 급여’를 신설하고 이 외에 취학 전 자녀가 아픈 경우 연 5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녀 간호 휴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이벤트(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입학식 등) 참가 등 휴가 취득 사유 범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송태민 외, 2010)
- 어린이 기본법 제정을 통한 어린이가정청은 11개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저출산 및 육아지원 관련 정책을 통합하여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분리하여 운영을 시작하였고 아동 중심 사회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과 가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송태민 외, 2010)
-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 및 시설 정비와 국가 주도적 돌봄체계 수립을 통해 돌봄의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송태민 외, 2010)

〈표 37〉 해외 저출생 대응 정책사례 분석 종합

구분	프랑스	스웨덴	일본
경제적 지원 정책	가족수당, 출산 및 입양 수당	부모보험(정부+고용주), 가족예산,	출산·양육 응원 교부금 건강보험지원
돌봄 서비스 정책	중앙차원: 공교육 체계 추진 도 단위: 돌봄기관 설립 인가 및 심사 관리 감독 기초단위: 돌봄기관 운영	지자체 중심 교육 운영 중앙: 예산 및 운영관리 감독 지자체: 돌봄기관 운영 및 서비스 지원	총리직속 「어린이가정청」 컨트롤타워
일·생활 균형 정책	남성 육아 휴직 권장 - 월급 보전 80% 지원 정책	부모휴가제도 남성육아 참여	산후파파휴직 월급 보전 67%
저출생극복 연구 및 실행기관	국립인구학연구소 (정부직속 국가연구기관)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 프랑스의 국립인구학연구소는 인구에 영향을 주는 사회, 경제, 문화 및 역사학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국가차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특히 세대별 연구를 통해 젊은 세대들의 생활 동향과 문화를 파악하고 이러한 특성이 결혼, 출산, 양육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해외이주민 및 소수민족의 연구를 통해 인구유입 방안을 모색하고 그들이 정착화 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도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정치적 상황과 엄격히 구분하여 국가차원의 연구가 정쟁에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 연구기관의 독립성의 갖는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또한 박사과정 및 박사후과정생의 인력을 통해 향후 저출생극복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 일본의 국립사회보장연구연구소는 국가직속 기관으로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DB 구축을 중점화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제도 연구와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저출생, 고령화를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사회보장제도와 연결하여 정책개발과 더불어 실행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해외 저출산 극복 심층사례 분석을 기반으로 국가별 제도적 특징을 요약·정리함(<표 38 참조>)

<표 38> 해외 저출생 대응 제도적 특징

(단위: %)

구분	2020년 출산율 (최저율)	GDP대비 가족예산 (2019년)	제도 특징
프랑스	1.83 (1.71)	3.44	[중앙정부 차원] ○ 가족수당정책 : 보편성, 그물망 지원 ○ 육아휴직 : 부·모 최대 3년,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6~12개월) ○ 영유아교육·보육 국가관리, 초·중·고 무상교육 연계 ○ 개방적 가족규범 : 법률혼, 동성·동거부부, 미혼 가정 포함 ○ 가족합산과세제도 : 가족계수방식, 다자녀 우대 ○ 국립 가족수당기금공단 : 가족수당 총괄, 일반 사회기여금

			[지방정부 차원] ○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후여가센터의 프로그램 수준 제고, 프로그램의 교육적 성격 촉진, 문화·스포츠활동 접근성 향상, 사회적·지역적 불평 등 해소를 위한 지원에 집중
스웨덴	1.66 (1.50)	3.42	[중앙정부 차원] ○ 보편적 아동수당, 현물급여 중심 지원, 출산·보육 사회책임 ○ 부모휴가 : 부·모 각 240일(총 480일), 남성 90일 의무 사용 ○ 부모보험 : 출산·육아 휴직 전 소득 80%, 1년간 수당 지급 ○ 동거인법 : 비혼 동거를 결혼과 동일한 가족 구성 보장 ○ 여성차별금지법 : 성평등사회, 남성 돌봄 참여, 일·가정 양립 [지방정부 차원] ○ 스웨덴에서는 ‘코뮌’이 보육을 비롯한 모든 복지 정책을 전담 ○ 정부는 정책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만 편성하며, 각 지역마다 상황과 수요가 상이함을 고려함 ○ 부모의 근로로 인한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공보육과 공교육 서비스를 모두 코뮌에서 운영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무조건 신청 3개월 내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음
일본	1.34 (1.34)	1.95	[중앙정부 차원] ○ 저출산 대책 실패의 문화적 요인 : 일본 고유 가치의식 무시 ○ 어린이가정청 설립 : 저출산 대책과 고령화대책 분리 - 저출산 대책은 결혼대책과 육아대책으로 추진 ○ 일·육아 병행 지원체계 : 고학력 기혼여성 출산을 증가 ○ 일하는 방식 혁신 등 민관의 적극적 대책 추진 [지방정부 차원] ○ 신제도에서는 시정촌이 자신들의 지역 실정에 맞게 저출산 대책을 만들고, 이 대책의 실시 주체가 되어 저출산 대책 추진을 제안함 ○ 즉, 시정촌이 지역의 수요를 파악해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을 실시하며, 중앙정부와 도도부현은 시정촌을 뒤에서 뒷받침함 ○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시설형 재원은 사립일 경우 중앙정부에서 2분의 1을 부담하고 도도부현에서 4분의 1, 시정촌에서 4분의 1을 부담 ○ 공립일 경우에는 시정촌이 모두 부담. 지역형 보육 재원은 공립, 사립 공통으로 중앙정부가 2분의 1, 도도부현 4분의 1, 시정촌이 4분의 1을 부담하게 되며, 지역 자녀·육아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 도도부현, 시정촌이 3분의 1씩 부담

제4장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저출생 극복 기능 진단

제1절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및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

1.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현행 조직운영체계

- 국가 Agenda인 ‘저출생 완화·반등·극복’에 선제·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지원할 지역 전문 연구기관 필요성 증대
- 각 지역에 필요한 저출생 정책이 실현되도록 실제 현장에 맞는 종합대책 디자인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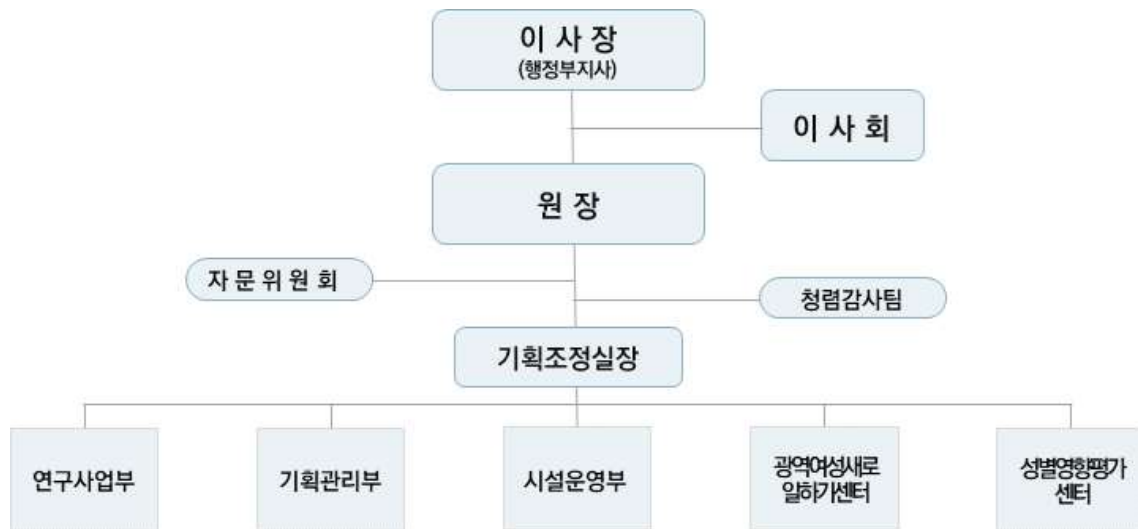
[그림 35] 경상북도의 저출생 대응방향에 따른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 변화

○ 저출생 문제는 청년과 여성의 지역 유출이 주요 원인으로 그간 여성정책을 지속 연구한 개발원의 기능·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 대응할 수 있음

- 업무 연속성,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성·아이·가족정책으로 역할 확대가 필요함

분야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아이돌봄 및 보육	【완전돌봄】 • 24시까지 돌봄 확대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다자녀 가정 Fast Track 등	• K-보듬센터 운영 •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장애아, 영아 지원 등) •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 양육가정 지원 • 초등돌봄 및 늘봄학교 운영 내실화
일·생활 균형	【일·생활 균형】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지원 •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및 인식개선 • 돌봄 연계 일자리편의점	•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 일·생활균형 실천 기업지원(환경개선, 직장교육) • 도민 공감대 확산(가족친화프로그램) • 육아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유연근무제 사업 등) • 아빠의 맞돌봄·맞살림 실천 및 활성화
여성·가족	【행복출산】 • 남성난임지원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확대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 우리아이 돌봄마을 조성 등	• 결혼·출산 정책 • 한부모, 이민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정책 • 초고령사회 대응 • 경력보유여성 경력유지(교육 및 상담 등) • 여성(청년,고령) 취·창업 원스톱 지원
양성평등	【여성친화 경북 조성】 • 아빠 육아 프로그램 • 다자녀 가정 관리장전 제정 • 웰컴키즈존, 모두의 놀이터 조성 등	•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 • 성평등지수 및 여성대표성 제고 •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확산 • 양성평등 교육 확산 및 실천 캠페인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컨설팅
저출생 데이터	• 저출생 관련 분야 기초 데이터 수집·축적	• 저출생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 • 저출생 관련 통계 데이터 동향 분석 • 경북 통계 데이터 확보

- 2024년 현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일·삶·쉼이 조화로운 양성평등 행복경북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다음 [그림 29]와 같은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정원 59명, 현원 56명)



[그림 45]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조직도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1실, 3부, 3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 중심의 연구 및 사업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하위부서로 연구사업부, 기획관리부, 시설운영부, 광역새일센터, 성별영향평가센터, 1366 경북센터가 있음

〈표 41〉 부서별 수행기능

부서명		주요업무
기획조정실	연구 사업부	(연구파트) • 고객 및 시대변화를 담은 여성가족 정책 연구의 강화 • 이민가족, 고려인, 장애인, 농촌여성 등 대상맞춤 여성가족 정책연구 • 난임부부 지원, 청년의 결혼·출산 인식 등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정책연구 (사업파트) • 지역·산업·수요 맞춤형 여성전문인력 양성으로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한 경력이음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중앙정부, 경북도, 지자체 등의 연구 및 사업 발굴 다양화로 기관 위상 제고
	기획 관리부	• 법인 이사회 운영 •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제·개정 • 인사, 조직, 복무, 급여, 사회보험 문서관리 업무 • 회계, 지출, 결산, 구매, 계약입찰 업무 • 직원 교육, 후생, 복지, 복무, 감사 • 홈페이지 관리 및 고객만족 경영
	시설 운영부	•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의 제공 • 개보수 및 정기적 유지·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시설관리
	광역 새일 센터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창업지원 서비스 강화 •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지원
	성별 영향 평가 센터	• 양성평등 정책의 수혜자 확대를 위한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 지역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교육·문화 확대 • 도민주도형 양성평등 정책 실현 및 환경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교육 확대 • 청년 정책 기본 계획 분야별 정책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의 정책개선 • 정책개선 목표 달성 및 국비예산 감소를 대비한 지자체 예산 수립 • 권역별 사업 추진 전략 등을 통한 균형 있는 사업 수혜 제공
수탁 운영	1366 경북 센터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긴급피난처 제공, 보호시설 안내 및 연계. • 여성폭력피해자지원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내담자에게 One-Stop 연계 및 3자 통화방식을 통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외국인 피해여성에게는 동시통역서비스 실시
자료: 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		

2. 예산 및 추진사업 성과

- 2023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4,077,021천원으로 전년대비 104,789천원이 증가하였음. 인건비의 경우 2023년 1,508,510천

원으로 2022년 1,582,125천원으로 전년대비 73,615천원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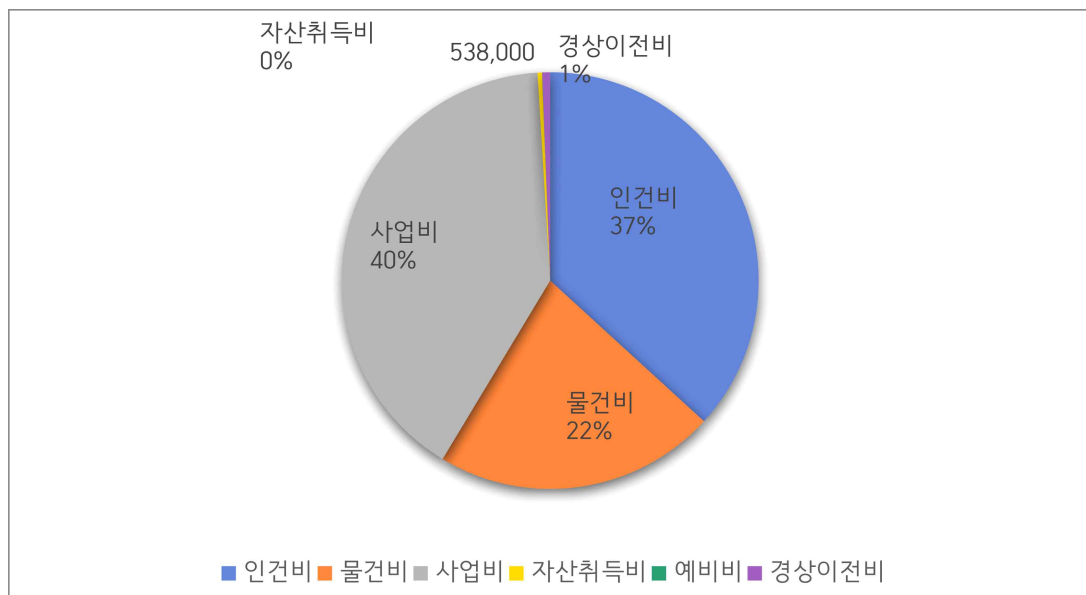
- 2023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금조성 규모를 살펴본 결과 2020년 612,260천원, 2021년 592,438천원, 2022년 588,905천원, 2023년 612,920천원 수준으로 나타남

<표 42>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기금조성 규모(2020~2023),

단위:(천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기금적립규모	612,260	592,438	588,905	612,920

- 2023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예산지출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사업비가 1,656,483천원으로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는 1,508,510천원으로 총 37%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46] 2023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예산지출 내역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2023년도 총 87건으로 정책실 자체수립과제 28건, 외부의뢰 과제 7건임. 여성일자리본부의 인재개발팀의 사업은 총 17건, 광역새일센터 32건으로 추진함.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외부의뢰 과제 2건을 추진함
- 정책실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가족정책 중장기 로드맵 구축 및 지원정책 개발하여 저출생·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보육·돌봄 정책 발굴 연구를 추진함
 - 신종 성폭력범죄 실태 파악 및 여성인권 증진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함
 - 일자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방안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하고 여성의 정치·사회참여 활성화 지원 및 성 주류화 정책 강화 연구를 추진함
 - 여성·가족정책 이슈 발굴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교육·홍보 추진함
- 여성일자리본부는 인재개발팀,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구성되었으며 경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운영을 통해 도내 여성인력 양성과 여성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맞춤 구인구직 매칭으로 일자리 미스 매칭 해소에 노력하고 있음

〈표 43〉 정책실 추진사업(2023년)

	과제명
1	경상북도 가족정책 대응전략 방안 수립 연구
2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3	경상북도 산업체별 중소기업 일·생활 균형 확산 방안 연구
4	경상북도 스톡킹 범죄 대응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연구
5	경북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실태 및 대응 방안
6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방안 연구

7	경북 아이돌봄 서비스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8	경북 농촌보육서비스 전달체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9	경상북도 아동의 스마트미디어 이용 실태 및 디지털 기능향상 방안
10	경북형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
11	경북 사회적 농업 여성참여 활성화 방안
12	경북지역 이주여성 취창업 사례연구 및 지원방안
13	여성장애인의 취·창업 및 직업유지에 관한 연구
14	경상북도 여성일자리 안정과 출산친화적 일자리 개선 방안
15	경북지역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16	풀뿌리 경북 여성리더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17	경상북도 여성단체 양성평등활동 활성화 방안
18	경상북도 청년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개선방안
19	경상북도 양성평등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	2023 젠더통계로 본 경북여성가족의 삶
21	2023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 콜로키움
22	경북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23	경북 여성 미래포럼 운영
24	경북 여성·가족정책 성과보고회
25	경북 Woman Net 운영
26	경북여성가족정책 Briefing 제작
27	소식지"희망을 여는 창"및 웹진 발간
28	경북e-보이는 젠더통계
29	2023 경북여성 구술생애사 채록사업
30	풀뿌리 경북 여성의 삶 이야기(Ⅵ)
31	경북여성인물을 여행(女行)하는 인문학 여행(旅行)
32	2023년 양성평등정책지원사업
3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컨설팅 지원사업
34	경상북도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사업
35	산학연 공동 R&D 지원사업

- 2023년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은 연구과제 1건, 교육과제 1건을 추진함. 또한 2023년여성일자리본부의 인재개발팀에서 추진한 사업을 정리하면 총 17개의 사업을 직접 및 위탁 운영을 추진 중에 있음

3.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 재설계를 위한 실증조사 및 분석

1) 조사 개요

- 경상북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구현 차원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관 역량 강화 및 조직운영 체계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증조사를 실시함
- 조사대상 :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내부 관계자, 이해관계자(실무 담당 공무원, 시설 관리자, 시설 이용자 등),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경상북도 시군 공무원²⁵⁾, 00기관 관리자, 조직진단·인력진단·조직재설계 관련 전문가(전공 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등)

25)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경상북도 시군 22개 시군 공무원

〈표 44〉 조사개요

구분	조사대상		조사시기
1단계 (설문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내부관계자	26명	2024년 09월 09일 ~ 09월 13일
	돌봄기관 이용자	90명	2024년 09월 09일 ~ 09월 13일
	돌봄기관 관리자	16명	2024년 09월 09일 ~ 09월 13일
	관련 실무 공무원	20명	2024년 09월 09일 ~ 09월 13일
2단계 (의견조사)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담당 공무원	45명	2024년 09월 20일
3단계 (FGI조사)	조직진단/인력진단/조직재설계 전문가(교수, 연구위원) 및 000기관 조직관리자	16명	1차 2024년 09월 25일 2차 2024년 10월 0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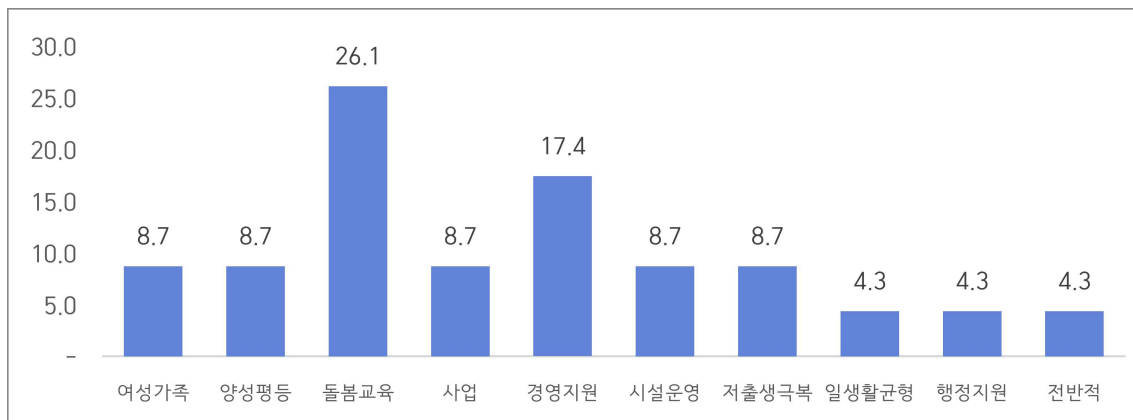
〈표 45〉 실증조사 항목

구분	조사대상	조사 항목
1단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내부관계자	- 조직 재설계 및 사업다각화 분야 - 기능 확대에 인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일선 돌봄기관 관련 성과평가 방안 - 위상변화에 따른 기관 명칭 조정(안)
	돌봄기관 이용자	- 양육 및 돌봄지원 인식 - 일선 돌봄기관 관련 성과평가 방안 - 위상변화에 따른 기관 명칭 조정(안)
	돌봄기관 관리자	- 양육 및 돌봄지원 인식 - 지역 시군부서와의 상호협력 정도 - 돌봄기관 내실화를 위한 요구사항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역할 - 일선 돌봄기관 관련 성과평가 방안 - 위상변화에 따른 기관 명칭 조정(안)
	관련 실무 공무원	- 양육 및 돌봄지원 인식 - 지역 돌봄기관과의 상호협력 정도 - 일·생활균형제도의 개선사항 - 돌봄서비스 인프라 개선사항 - 일선 돌봄기관 관련 성과평가 방안 - 위상변화에 따른 기관 명칭 조정(안)
2단계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담당 공무원	- 조직 재설계 및 사업다각화 분야 - 기능 확대에 인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일선 돌봄기관 관련 성과평가 방안 - 위상변화에 따른 기관 명칭 조정(안)
3단계	조직진단/인력진단/조직재설계 전문가 00조직 관리자	[1차]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관역량 강화, 기능확대, 조직 운영체계 최적화 방안 마련 및 적정성 검토 - 위상변화에 따른 기관 명칭 조정(안)
		[2차] - 조직재설계(안) 검증 및 적정성 재검토 - 향후 조직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

2)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내부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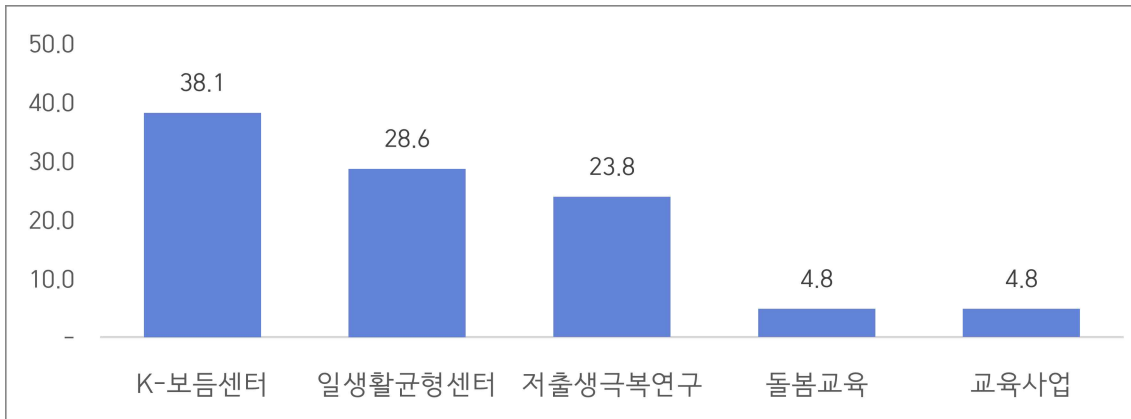
(1) 수행기능의 확대 및 사업다각화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확대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는 돌봄교육 분야 26.1%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경영지원 분야 17.4%, 여성가족/양성평등/사업/시설운영/저출생극복 분야 8.7%, 일생활균형/행정지원/전반적 분야 4.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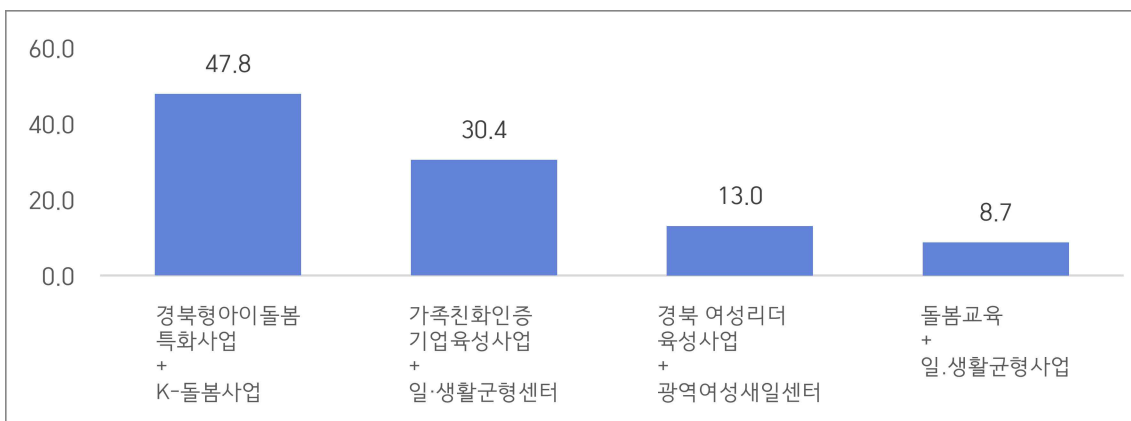
[그림 47] 보완이 필요한 분야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확대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신설이 필요한 분야는 K-보듬센터 38.1%, 일생활균형센터 28.6%, 저출생극복연구 23.8%, 돌봄교육 4.8%, 교육사업 4.8% 순으로 나타남



[그림 48] 신설이 필요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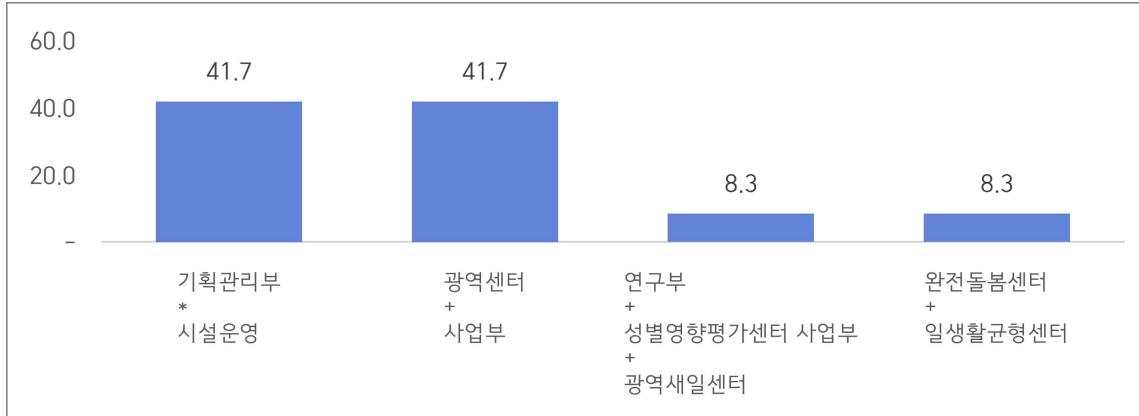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통합이 가능한 분야는 경북형아이돌봄특화사업과 K-돌봄사업 47.8%, 가족친화인증기업육성사업과 일·생활균형센터 30.4%, 경북여성리더육성사업과 광역여성새일센터 13.0%, 돌봄교육과 일·생활균형사업 8.7%로 나타남



[그림 49] 통합이 가능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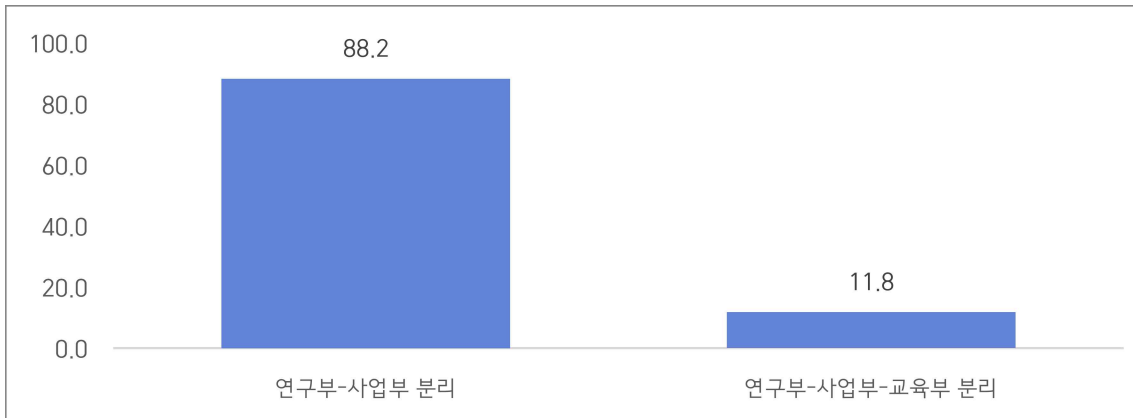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확대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통합이 가능한 부서는 기획관리부+시설운영 41.7%, 광역센터+사업부 41.7%, 연구부+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부+광역새일센터 8.3%, 완전돌봄센터+일생활균형센터

8.3%로 나타남



[그림 50] 통합이 가능한 부서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확대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분리가 가능한 분야 및 부서는 연구부-사업부 88.2%, 연구부-사업부-교육부 11.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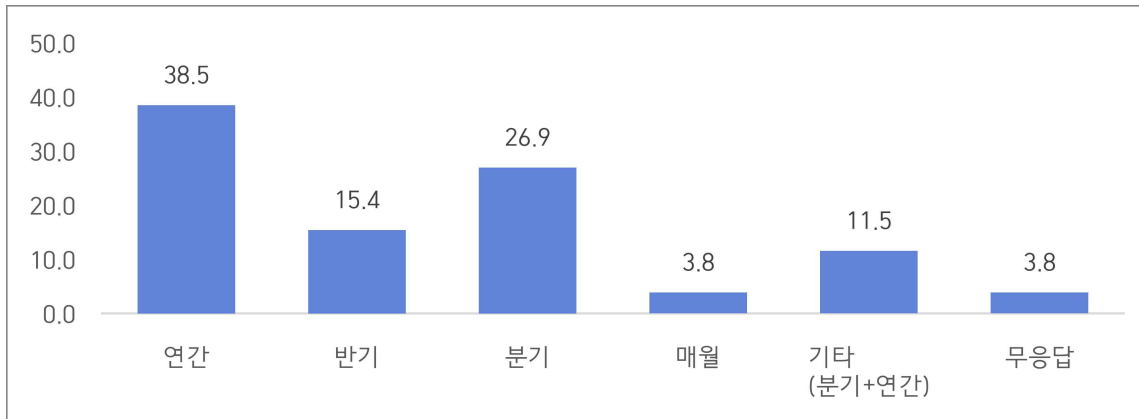


[그림 51] 분리가 가능한 분야 및 부서

(2) 일선 돌봄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정례화 수준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확대에 따른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선 돌봄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정례화 수준은 연간 38.5%, 분기 26.9%, 반기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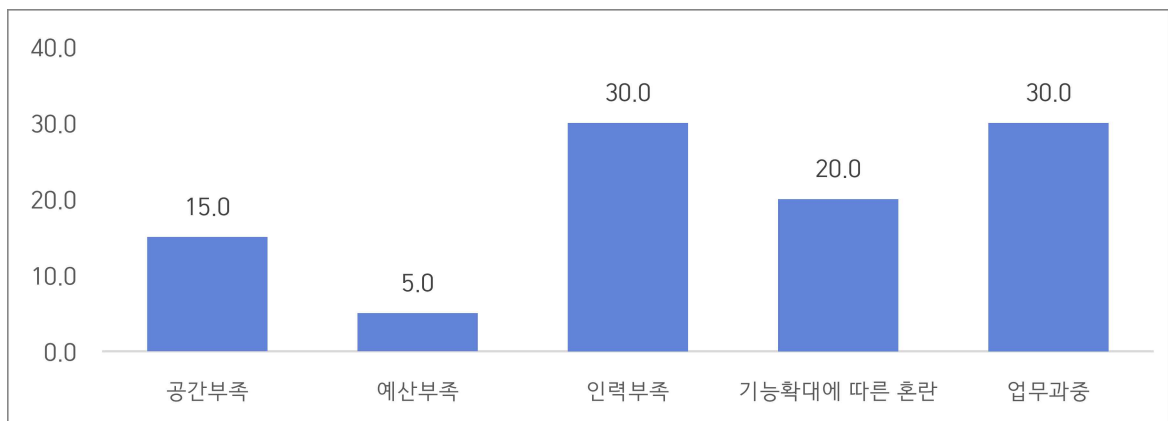
기타(분기+연간) 11.5%, 매월 3.8% 순으로 나타남



[그림 52] 성과평가 정례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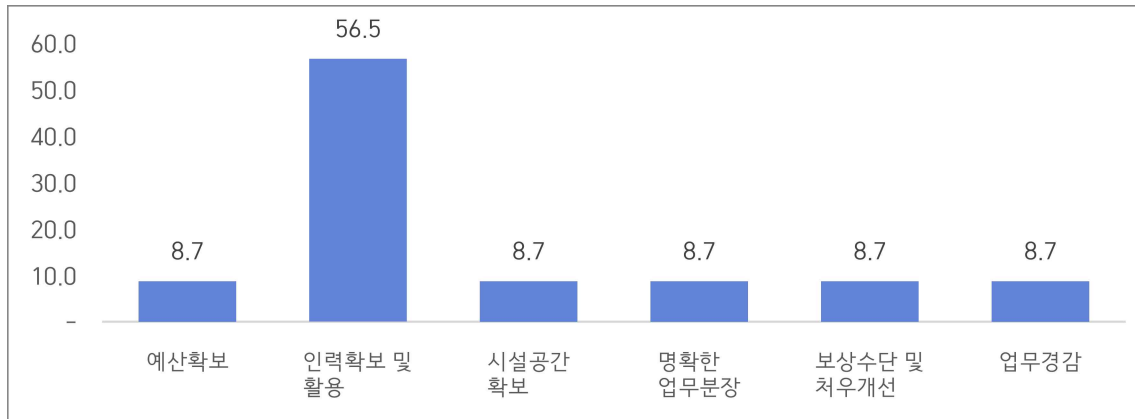
(3) 기능확대로 인한 업무수행 장애요인과 개선방안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확대에 따른 업무수행 장애요인으로 인력부족 30.0%, 업무과중 30.0%, 기능확대에 따른 혼란 20.0%, 공간부족 15.0%, 예산 부족 5.0% 순으로 나타남



[그림 53] 장애요인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확대에 따른 업무수행 개선방안으로 인력확보 및 활용 56.5%, 예산확보/시설공간확보/명확한 업무분장/보상수단 및 처우개선/업무경감 8.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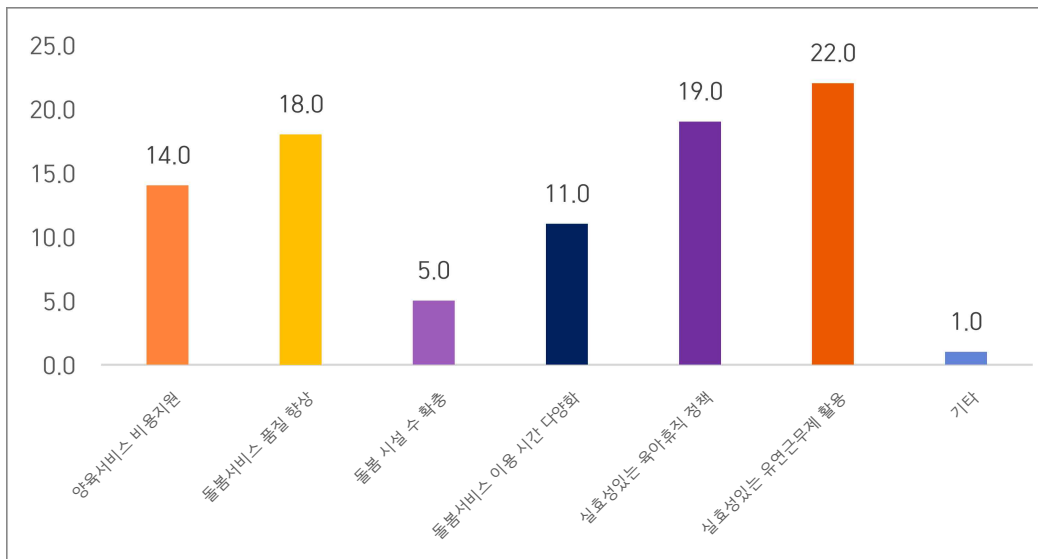


[그림 54] 개선방안

2) 돌봄기관 이용자 인식조사 결과

○ 양육 및 돌봄지원 인식조사 문항인 “귀하께서는 자녀 양육 및 돌봄지원 정책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 질문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실효성 있는 육아휴직정책 19%,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18% 순으로 나타나 양육 및 돌봄 정책 중 일·생활 균형 제도의 정착과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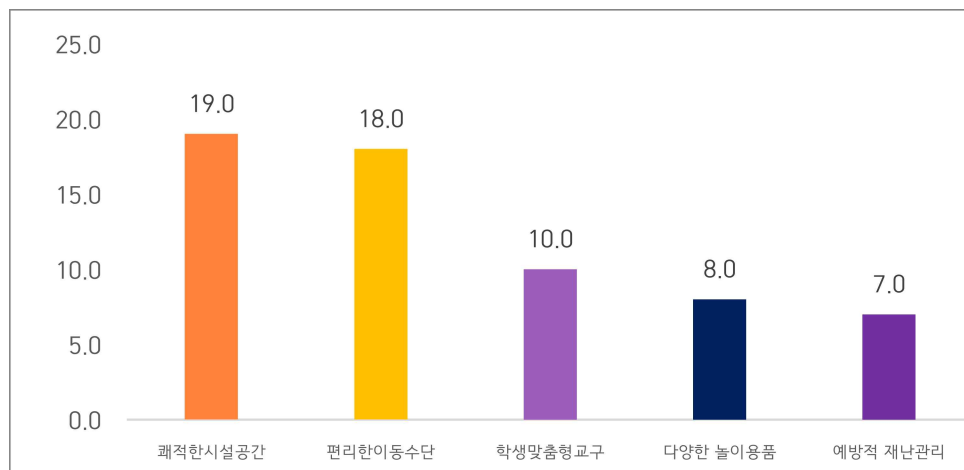
[그림 55] 돌봄기관 이용자 양육 및 돌봄지원 관련 인식조사

○ 돌봄기관 운영시간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주중은 7:00 ~ 20:00 시까지 운영을 가장 높게 요구하고 있었으며 주말 또는 공휴일은 오전 시간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돌봄기관 이용자들의 육아휴직 활용,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균형 제도 지원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중 높은 비율로 조직 내의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함

- 일·생활균형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 업무 공백 부담 경감과 인사고가의 방지 등 조직 문화개선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육아휴직 시 업무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 육아 휴직 동안의 기본적 수입 유지를 위한 급여 보존 및 인상 의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부모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 여건 조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돌봄서비스 인프라 중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쾌적한 시설공간 19.0%, 편리한 이동수단 18.0%, 학생맞춤형 교구 10.0%, 다양한 놀이용품 8.0%, 예방적 재난관리 7.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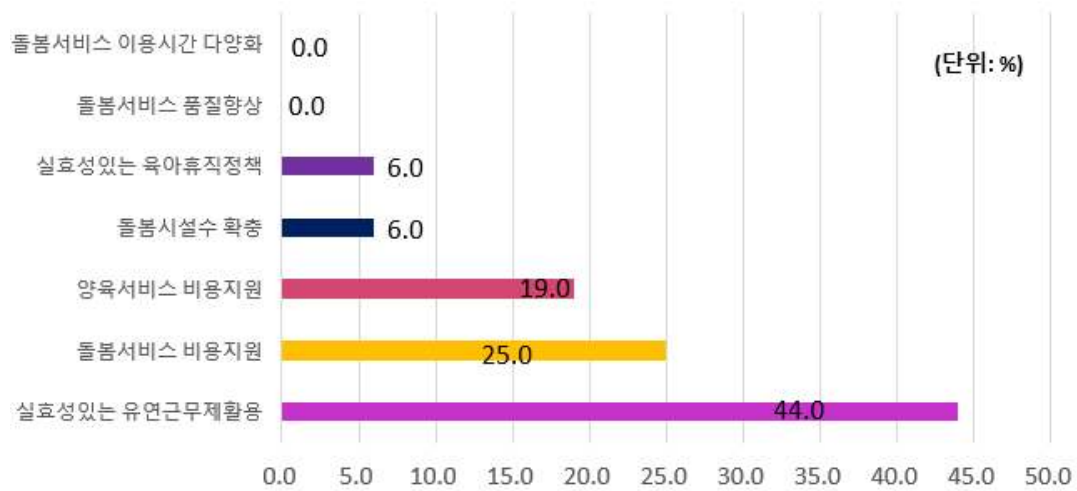
[그림 56] 돌봄서비스 인프라 개선 사항

○ 국공립 돌봄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보완 사항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조사한 결과, 운영시설의 확충과 예산지원과 돌봄기관 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 돌봄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요구 사항은 지역적 특색에 맞는 돌봄기관 내실화에 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돌봄 확충시설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 정립,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접근적 편의성 등을 요구함
- 국공립 돌봄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시군차원에서의 보완사항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기관운영의 체계화와 관리 감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현장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돌봄 기관에 대한 윤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점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민간돌봄기관의 큰 장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현재 국공립 돌봄기관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다양성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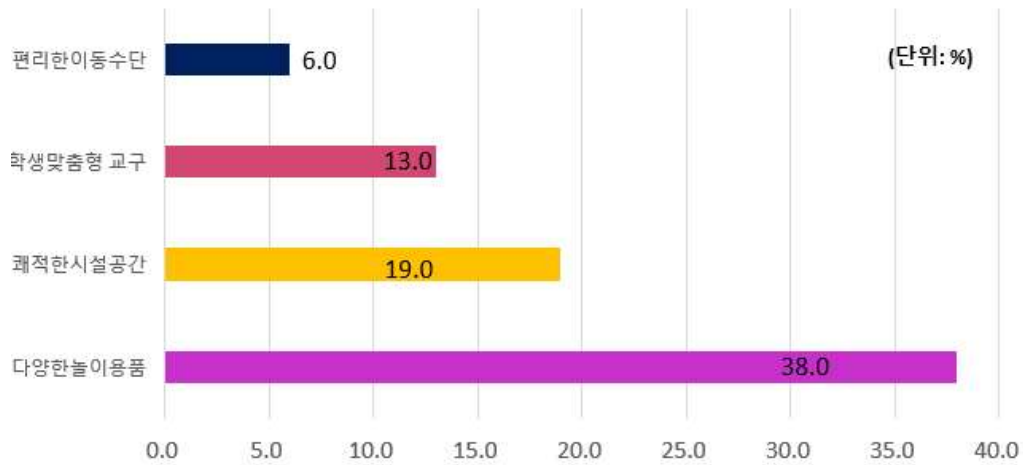
4) 돌봄기관 관계자 인식조사 결과

- 양육 및 돌봄지원 관련 인식조사 결과, 실효성 있는 유연근무제 활용 44%,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5%, 양육서비스 비용지원 19% 순으로 나타남



[그림 57] 양육 및 돌봄지원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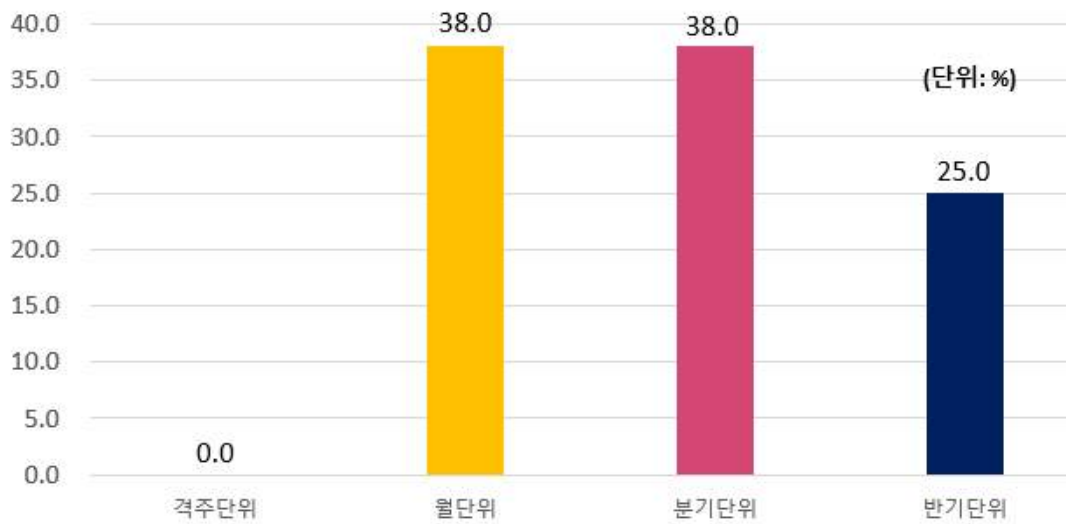
- 돌봄기관 운영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조사 결과, 돌봄기관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평균 주중 운영 시간은 09:00~19:00로 나타남
- 일·생활 균형제도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조사 결과, 육아휴직 기간의 급여보전 및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유연근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시간 활용의 자율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함
- 돌봄서비스 인프라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1순위 다양한 놀이용품, 2순위 쾌적한 시설공간, 3순위 학습 맞춤형 교구 순으로 나타남



[그림 58] 돌봄서비스 인프라 개선

- 해당 지역의 시군부서와의 상호협력 질문에 대하여 상호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냐는 의견조사 결과, 보통이다 44%, 그렇다 31%, 매우그렇다 25%순으로 나타남
- 돌봄기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돌봄인력 확보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돌봄기관의 예산지원 및 관리 인원 충원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 차원에서도 인력 충원에 대한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정책개발원이 K-보듬을 위하여 중앙, 경북도, 시군 차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을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현실성 있는 정책마련과 대안제시에 대한 요구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에 대한 의견도 제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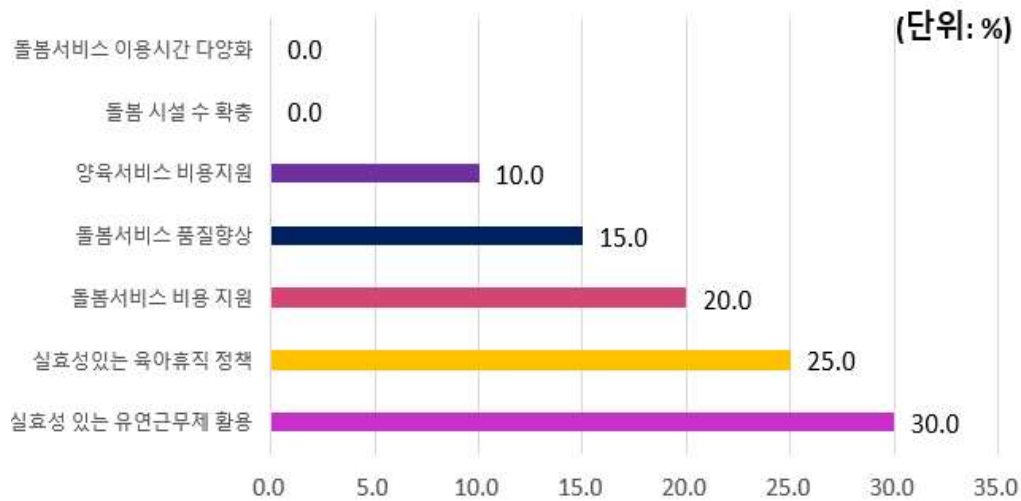
- 저출생 극복과 관련하여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의 정기적 회의, 간담회 등의 정례회의 수준의 경우 월 단위와 분기 단위가 38%로 동일한 응답비율로 나타났으며, 반기 단위는 25%로 나타남



[그림 59] 여성정책개발원과의 정기적 회의 및 간담회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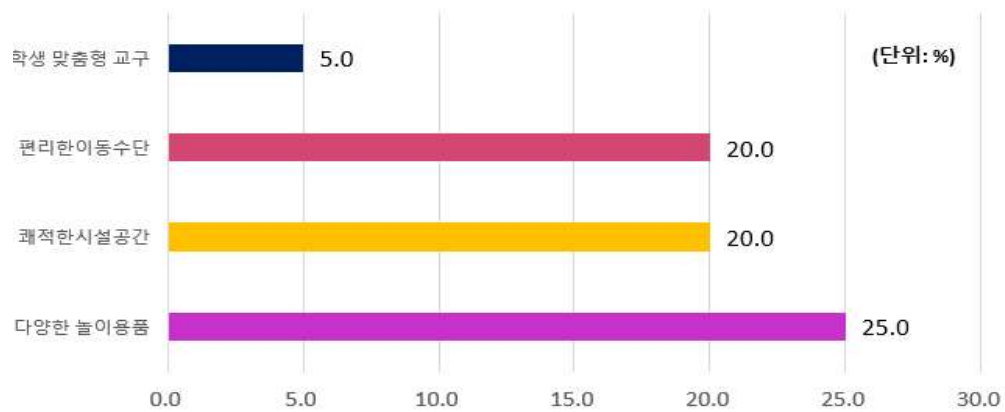
5) 저출생 극복 관련 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결과

- 양육 및 돌봄지원 관련 인식조사 결과 실효성있는 유연근무제 활용 30%, 실효성있는 육아휴직 정책 25%,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2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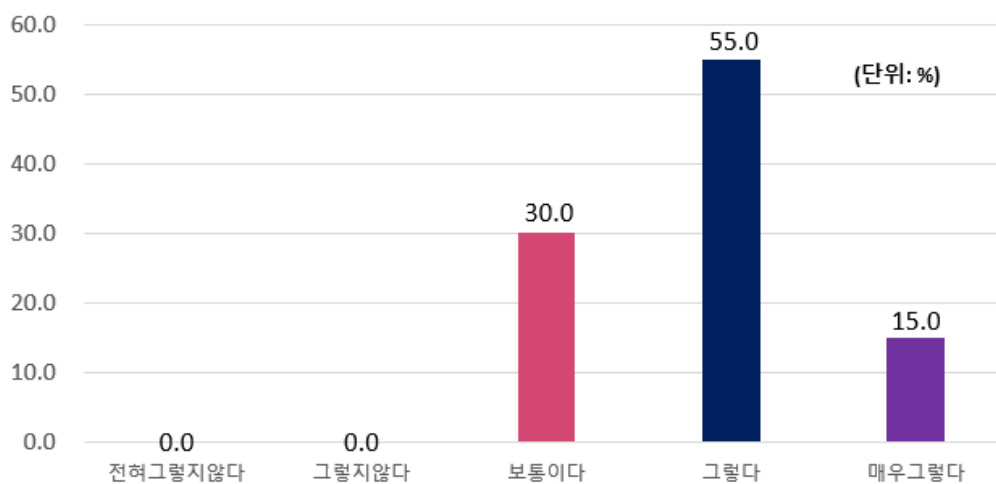
[그림 60] 양육 및 돌봄지원 관련 인식조사결과

- 돌봄기관 운영시간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조사 결과, 평균 주중 운영 시간은 06:00~21:00로 나타남
- 일·생활 균형제도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조사 결과, 육아휴직의 활용을 위한 지원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 급여보전에 대한 응답이 많았으며, 유연근무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돌봄서비스 인프라 중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1순위 다양한놀이용품, 2순위 쾌적한시설공간, 3순위 편리한 이동수단 순으로 나타남



[그림 61] 돌봄서비스 인프라 개선 사항

- 해당지역의 돌봄기관과의 상호협력 질문에 대하여 상호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냐는 의견조사 결과, 그렇다 55%, 보통이다 30%, 매우 그렇다 15% 순으로 나타남



[그림 62] 돌봄기관과의 상호협력 수준

- 돌봄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경상북도 차원에서의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돌봄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차량 등의 편의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6) 표적집단면접조사(FGI) 분석결과

- 표적집단면접에서는 조직구성원 내부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인력진단, 조직재설계 전문가, 00기관 관리자 16명을 표적집단 심층면접 위원으로 선정하여 연구대상기관인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효율적 조직운영 및 관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표적집단 면접조사는 2024년 9월 25일, 2024년 10월 2일 2차례에 걸쳐 진행됨
- 표적집단 심층면접 위원의 구성은 조직진단, 인력진단, 조직재설계를 전공하는 교수 8명, 연구위원 4명(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00기관 관리자 4명으로 구성함
- 표적집단 면접조사를 통하여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기관역량 강화, 기능확대, 조직운영체계 최적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출생 극복이라는 대내외 환경변화 및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관점에서 현장밀착형 사업 및 교육 기능 강화 등 여성·아이·가족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기관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됨. 따라서 경상북도의 저출생 대응 방향을 충분히 반영한 기능을 강화하여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전국 여성정책 선도기관으로서 본원의 성과와 업적을 공유를 통해 각 지역에

필요한 저출생 정책이 실현되도록 실제 현장에 맞는 종합대책이 디자인될 수 있도록 그동안 여성정책을 지속 연구한 개발원의 기능·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주거부담 없고 결혼·출산 친화적 방향 지원 확대
- 교육·돌봄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부담 획기적 해소
-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사회인식 변화 및 적응노력 강화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관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직구성원들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관역량 수준을 평균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직구성원 대부분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미션·비전·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다고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션·비전 및 목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여성정책 중심에서 여성·아이·가족으로의 사업영역 확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저출생 전반에 대한 정책 개발·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다수 개진됨. 특히 완전 돌봄, 일·생활균형, 돌봄 보육, 저출생 데이터 등 개발원의 핵심 추진사업들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한편, 전반적 기관역량 수준 대비 조직구성원들이 낮게 인식하고 있는 연구영역의 기능은 돌봄보육, 양성평등, 여성가족 순으로 나타남. 저출생 사업영역에서는 K-보듬센터, 일·생활균형센터, 교육사업, 성별영향평가센터, 광역여성새일센터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 저출생 관련 연구 및 사업영역으로 개편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행기관으로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직구조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연구, 사업 영역을 지원하는 경영기획·지원 부서에 대한 확충이 필요함
- 둘째, 저출생 극복 기능 조정 및 사업다각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경상북도 여성, 아이, 가족 등 다양한 수요 집단을 위한 현안 파악과 현장맞춤형 정책 연구·개발이 확대되어야 함. 이를 통해 경상북도 여성·아이·가족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가능함
 - 보육, 아이돌봄, 틈새돌봄 등 완전돌봄체계 관련 정책 연구 및 데이터 수집
 - 결혼 및 출산장려, 난임극복,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 연구 및 데이터 수집
 -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 성평등지수 및 여성대표성 제고 관련 정책연구 및 데이터 수집
 - 저출생 관련 각종 교육·학술행사, 여성일자리 교육, 외부 수탁사업 추진 등
 - 온종일 공동체 돌봄서비스 제공(영육아 및 초등돌봄 등)
 - 가족친화, 맞돌봄,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생활균형 관련 사업
 -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연계, 여성 창업지원, 새일센터 미지정 시·군 지원 등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컨설팅,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인식개선 사업 등
-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는 동시에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연구 기능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존 여성정책 중심에서 여성·아이·가족 중심으로 재편하여 ‘저출생 완화·반등·극복’에 선제·체계적인 정책 대응을 지원할 지역 전문 연구기관으로의 기능을 집중하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됨

- 특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중장기 계획수립에 대한 기능 또한 확대·강화되어야 함

○ 셋째, 조직 및 기능 재설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출생 관련 연구와 사업영역의 확대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현재 경상북도의 완전돌봄에서 강조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인 K-보듬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장애아, 영아 지원 등),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양육가정 지원, 초등돌봄 및 늘봄학교 운영 내실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사업 운영의 확대가 요구됨
- 그리고 일·생활의 균형분야의 경우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일·생활균형 실천 기업지원(환경개선, 직장교육), 도민 공감대 확산(가족친화프로그램), 육아기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유연근무제 사업 등), 아빠의 맞돌봄·맞살림 실천 및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사업 운영의 확대가 요구됨
- 여성가족 분야의 경우 결혼·출산 정책, 한부모, 이민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정책, 초고령사회 대응, 경력보유여성 경력유지(교육 및 상담 등), 여성(청년, 고령) 취·창업 원스톱 지원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사업 운영의 확대가 요구됨
- 양성평등 분야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 성평등지수 및 여성대표성 제고,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확산, 양성평등 교육 확산 및 실천 캠페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컨설팅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사업 운영의 확대가 요구됨
- 그리고 저출생 데이터의 경우 저출생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 저출생 관련 통계 데이터 동향 분석, 경북 통계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해 저출생 관련 분야 기초 데이터 수집·축적에 대한 영역의 확대가 요구됨

- 돌봄보육의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외협력기능 강화되어야 함. 이와 함께 개발원의 위상 제고 관점에서 경영기획 및 지원 영역에서의 홍보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경상북도 여성·아이·가족 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양성평등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도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청년, 학계/전문가 등 경북 도민 참여 중심의 커뮤니티를 확장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기능 활성화 및 양성평등정책을 이슈화해 나가야 함
- 넷째, 기관명칭의 경우 현재 여성에만 국한된 명칭을 벗어나서 인구, 가족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포괄성 있는 명칭으로의 기관명 변경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 홍보활동 강화와 대외협력 확대를 통하여 기관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가족’이라는 단어가 최근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기관의 명칭 변경을 통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음(라승연, 2024)
 - 그리고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에 무게를 두는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최근 출생인구가 줄어드는 사회 구조에 주목하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활용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본부’의 경우 저출생 극복과 인구 감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구성됨. 이에 대한 일환으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역량 확대방안을 마련고 있어 각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고 경상북도의 저출생 위기 극복 전담조직과의 명칭이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을 확보하는 조직의 명칭이 필요함
 - 해외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명칭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담당 부서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운영 중에 있음

- 다만 연구원이라는 기관명칭도 고려하였으나, 자칫 정책연구 기능에만 치중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여성가족과 관련한 사업을 병행하는 본 기관의 경우 개발원이라는 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존 기관명칭과의 혼란도 피할 수 있어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을 기관 명칭 조정(안)으로 제안함

제2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 구성 및 인력 배치 최적화 방안

1. 조직 구성 최적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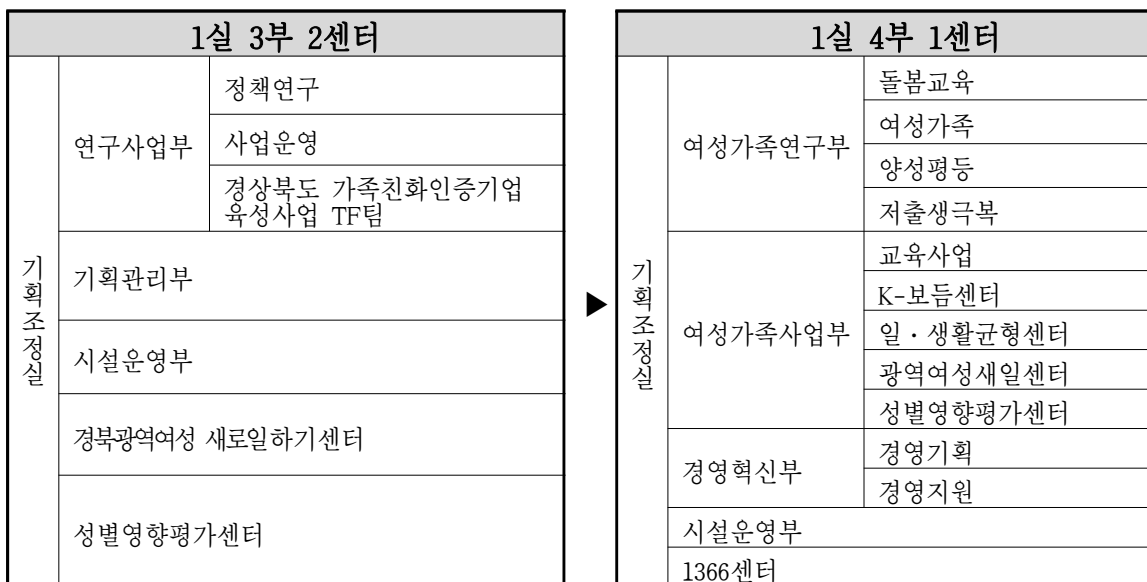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의 성장과 발전 관점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에 따른 조직구성원들 의견수렴 결과, 최우선적 고려 사항으로는 연구와 사업을 분리하고 돌봄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다음으로 경영지원 기능 강화, 여성가족/양성평등/저출생극복의 연구 기능 강화, 사업 분야 및 시설운영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신설이 요구되는 분야는 K-보듬센터, 일생활균형센터, 저출생극복 연구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저출생 대응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연구 및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정책개발과 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여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저출생대응사업실’을 설치하여 ① 일·생활균형사업, ② 양육친화사업, ③ 저출생 인식개선 교육 등을 담당함
 - 그리고 ‘돌봄사업실’은 보육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역량 강화 사업(인력풀 교육 등), 책임경영자 및 보육교사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보육시설 컨설팅 등을 담당함
 - ‘양성평등사업실’의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예방, 청착취 교육, 폭력예방 및 대응 교육, 아동학대 예방 대응인력 역량강화,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및 성과관리 등을 담당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 있어서도 정책연구실과 정책사업실을 구분하여 조직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실은 정책연구팀과 정책정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연구팀은

가족, 여성노동, 일·생활균형, 성평등, 참여, 거버넌스, 아동청소년, 보육, 아동돌봄, 정신건강, 입양, 젠더, 성인지예산 등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정책정보팀은 연구성과 점검, 연구기획/관리 연구사업 운영 등을 통해 정책연구 업무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구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먼저 연구 분야와 사업 분야의 구분을 도모하고, 반면에 독립적 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와 같은 수탁사업들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부를 신설함
- ‘저출생사업부’ 신설을 통해 사업영역 확장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탁사업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아이, 저출생 극복 등과 관련하여 광역지원기관의 유관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대내외환경분석, 전문가 및 내부 관계자의 의견수렴 결과를 활용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 돌봄교육, 여성가족, 양성평등, 저출생 극복에 대한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구성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 교육사업을 비롯하여 K-보듬센터, 일·생활균형센터를 신설하고 수탁기관인 광역여성새일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수 있음

〈표 47〉 조직구성 최적화

부 서	하위팀	주요 역할 및 분장	비 고
여성가족연구	돌봄보육	보육, 아이돌봄, 틈새돌봄 등 완전돌봄체계 관련 정책 연구 및 데이터 수집	강화
	여성가족	결혼 및 출산장려, 난임극복,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 연구 및 데이터 수집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 성평등지수 및 여성대표성 제고 관련 정책연구 및 데이터 수집	
	저출생극복	저출생 대응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증대 및 정착화 관련 정책연구 및 데이터 수집	신설
여성가족사업	교육사업	저출생 관련 각종 교육·학술행사, 여성일자리 교육, 외부 수탁사업 추진 등	
	K-보듬센터	온종일 공동체 돌봄서비스 제공(영유아 및 초등돌봄 등)	신설
	일·생활균형센터	가족친화, 맞돌봄, 육아휴직 활성화 등 일·생활균형 관련 사업	신설
	광역여성새일센터	경력보유여성 취·창업 연계, 여성 창업지원, 새일센터 미지정 시·군 지원 등	
	성별영향평가센터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컨설팅,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사업 등	
경영혁신	경영기획	법인 운영, 제규정, 경영평가, 예산관리, 행정사무감사, 일상감사, 윤리·청렴 등	
	경영지원	채용, 평가, 징계, 승진, 복무관리, 지출, 회계, 계약, 결산, 교육, 복리후생 등	
시설운영		여성가족플라자 유지·관리,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2. 인력 배치 최적화 방안

○ 가칭 “저출생 극복 실행기관”의 인력 배치 최적화(안)을 단계적[단기(안)→중장기(안)]으로 제시함. 인력 배치 최적화(안)의 방향은 크게 ① 돌봄분야 관련 연구기능 확대, ② 저출생 대응 연구과 사업 분야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음

○ 국내 저출생 대응 기관운영에 대한 사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으며, 관련 부서를 참조하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인력배치 최적화 방안을 재설계하고자 함

〈표 48〉 국내 저출생 대응 기관 운영 사례 분석 종합

구분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부서	수행업무	가족·돌봄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가족 형태 변화와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돌봄 관련 정책 제도 연구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제도
	부서명 및 구분	- 가족·저출생연구본부 - 여성고용연구본부 - 양성평등연구본부 - 성주류화지식혁신본부	가족저출생연구본부	아동 언제나돌센터
	역할 및 기능	- 가족·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연구 - 여성고용 및 노동환경 연구 - 양성평등 연구	-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하여 가족·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위한 연구	- 생활 밀착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정책+사업 인력		74명	117명	95명
경영지원 경영지원인력		14명	28명	18명

제3절 기능재정립에 따른 기관 명칭 조정(안)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확대에 따른 기관 명칭 조정(안)으로 경북여성가족 정책개발원이 내부관계자, 돌봄시설 이용자, 돌봄시설 관계자, 관련 담당 공무원이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9〉 기능재정립에 따른 기관 명칭 조정(안) 의견조사 결과

구 분	명칭(안)	경북여성 정책개발원 내부관계자	돌봄시설 이용자	돌봄시설 관계자	공무원	전문가
①	경북저출생정책기획원		12.0%	19.0%	15.0%	
②	경북저출생여성정책기획원		4.0%	6.0%	10.0%	
③	경북여성아동가족재단	19.2%	4.0%	6.0%	5.0%	
④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	30.8%	53.0%	19.0%	25.0%	1순위
⑤	경북저출생정책연구원	7.7%	0.0%	13.0%	5.0%	
⑥	경북저출생극복가족재단		5.0%	6.0%	20.0%	
⑦	경북여성가족정책연구원	11.5%	16.0%	19.0%	20.0%	2순위
⑧	기타(경북여성가족재단)	15.4%	4.0%	12.0%		

- FGI조사 결과, 전문가 또한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으로 명칭 조정(안)을 제안함
- ‘가족’이라는 단어가 최근 핵가족화로 인해 약해진 가족의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기관의 명칭 변경을 통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음
 - 다만 연구원이라는 기관명칭도 고려하였으나, 자칫 정책연구 기능에만 치중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여성가족과 관련한 사업을 병행하는 본 기관의 경우 개발원이라는 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기존 기관명칭과의 혼란도 피할 수 있어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을 기관 명칭 조정(안)으로 제안함

- 앞서 제4장 제1절 FGI조사 결과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문가 그룹 또한 경북 여성가족정책개발원으로 명칭 조정(안)을 제안하였는데, 기관 명칭의 경우 현재 여성에만 국한된 명칭을 벗어나 인구,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포괄성 있는 명칭이 필요함
- 최근 가족 개념 확대에 따라 기본적으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다양성 보장,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을 취약성이 아니라 보편적 가족 지원 차원에서 접근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 강화를 제시하고 있음(라승연, 2024)
 -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기관의 명칭 변경을 통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확보할 수 있음
 - 한편, 아이를 적게 낳는 주체에 무게를 두는 ‘저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최근 출생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 구조에 주목하는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또한 ‘저출생 극복 본부’의 경우 저출생 극복과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동일한 현안 및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사업집행 및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될 유관기관이 현재 경상북도 본청의 저출생 위기극복 전담 부서와의 명칭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중복·사용함은 외부 시각(중앙정부, 타 광역자치단체, 지역주민 등)에서 볼 때 복수 기관이 명확한 명칭의 차이점이 없기에 오히려 중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원 낭비 또는 자원 왜곡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방정부가 적극 주도적으로 감당해야 할 현재 및 미래 사회에 대한 책임을 산하 기관에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 또한 다분함에 양 기관에 대한 명확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의 명칭이 타당할 것임
 - 해외사례 심층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대다수

의 저출생 관련 기관들이 각각 상이하고도 차별성 있는 부서 명칭을 사용·운영하고 있음

- 덧붙여서 연구원이라는 기관 명칭 사용도 자칫 정책 연구의 기능에만 치중한다는 오해 인식을 낳을 수 있음. 이에 여성가족과 관련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현재 기관의 특성상 개발원이라는 기관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한 기관의 정체성 및 이미지 유지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다각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에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으로 기관 명칭을 새로이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함

제5장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 및 인력 재설계(안)

제1절 가칭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의 조직운영 방향

1. 조직운영 방향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여성·아이·가족 정책들은 저출생 위기 극복 이슈와 연계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정책중요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지역의 여성정책 전문기관으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양성평등 기준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우리나라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돌봄보육, 일·생활균형, 여성·가족, 양성평등, 저출생 데이터 축적 등으로 기능확대에 필요성이 매우 큰 실정임
 - 환경분석 결과, 경상북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분석 결과, 저출생 정도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47(0.5 이하일 경우, 지방소멸 고위험국으로 분류)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소멸지수가 낮은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임.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일차적으로 지역경제의 침체, 사회보장지출비 증가와 같은 지역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소멸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낮은 양성평등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내 시·군별로도 높은 양성평등수준 차이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출생 극복과 관련하여 대내외 환경변화 및 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관

점에서 현장밀착형 사업 및 교육 기능 강화 등 여성·아이·가족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기관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됨. 따라서 경상북도의 저출생 대응 방향을 충분히 반영한 기능을 강화하여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션·비전 및 목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여성정책 중심에서 여성·아이·가족으로의 사업영역 확대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저출생 전반에 대한 정책 개발·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다수 개진됨. 특히 완전 돌봄, 일·생활균형, 돌봄 보육, 저출생 데이터 축적 등 개발원의 핵심 추진사업들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조직 및 기능 재설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저출생 관련 연구와 사업영역의 확대에 대하여 세부적인 기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현재 경상북도의 완전돌봄에서 강조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인 K-보듬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장애아, 영아 지원 등),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양육가정 지원, 초등돌봄 및 늘봄학교 운영 내실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사업 운영의 확대가 요구됨
- 그리고 일·생활의 균형분야의 경우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일·생활균형 실천 기업지원(환경개선, 직장교육), 도민 공감대 확산(가족친화프로그램), 육아기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유연근무제 사업 등), 아빠의 맞돌봄·맞살림 실천 및 활성화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사업 운영의 확대가 요구됨
- 여성가족 분야의 경우 결혼·출산 정책, 한부모, 이민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정책, 초고령사회 대응, 경력보유여성 경력유지(교육 및 상담 등), 여성(청년,고령) 취·창업 원스톱 지원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사업 운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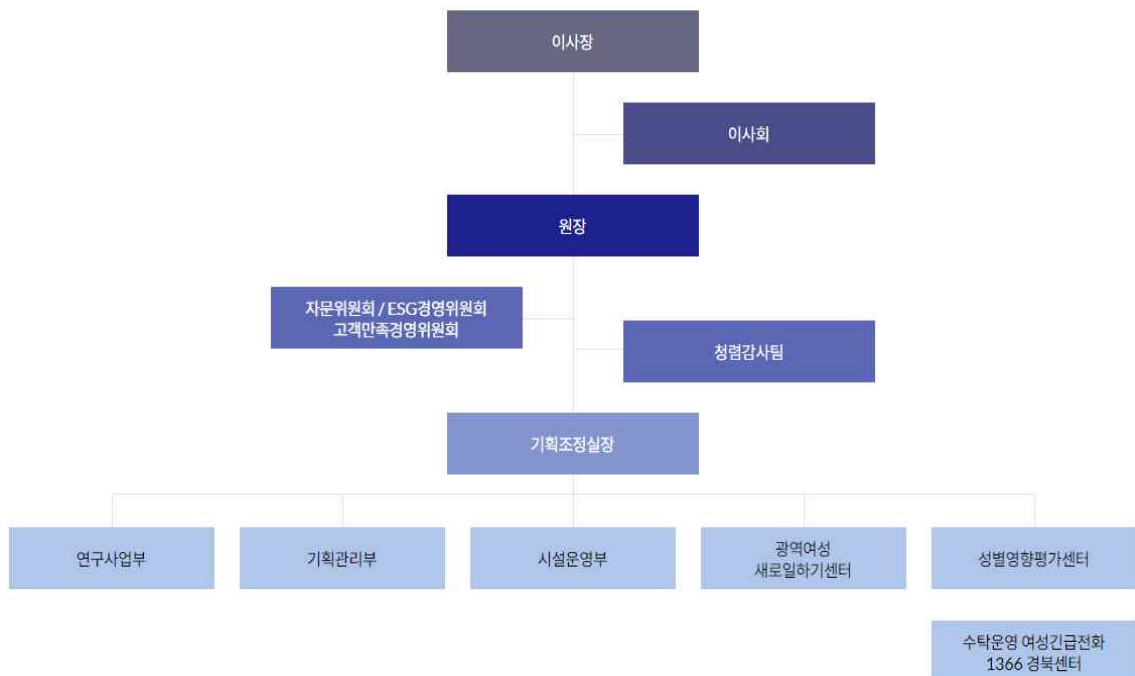
확대가 요구됨

- 양성평등 분야의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 성평등지수 및 여성대표성 제고,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확산, 양성평등 교육 확산 및 실천 캠페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컨설팅 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사업 운영의 확대가 요구됨
- 그리고 저출생 데이터의 경우 저출생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 저출생 관련 통계 데이터 동향 분석, 경북 통계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해 저출생 관련 분야 기초 데이터 수집·축적에 대한 영역의 확대가 요구됨

제2절 가칭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의 조직 재설계

1. AS-IS 조직

- 2024년 현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일·삶·쉽이 조화로운 양성평등 행복경북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다음 [그림 60]와 같은 체제로 운영하고 있음(정원 59명, 현원 56명)



[그림 63] 경북여성정책개발원 AS-IS 조직도

2. TO-BE 조직 재설계(안)

- 조직설계(안)의 이행력을 제고를 위하여, 가칭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의 조직 재설계(안)을 제시함. 조직 재설계(안)의 방향은 저출생 대응 정책연구 강화와 사업 분야의 신설로 요약할 수 있음
-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AS-IS) ‘기획조정실’, ‘연구사업부’, ‘기획관리부’, ‘시설운영부’ (1실-3부) 체제에서 → (TO-BE) ‘여성가족연구부’, ‘여성가족사업부’, ‘경영혁신부’, ‘시설운영부’의 4부 체제로 개편하고 업무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기획조정실장’은 그대로 유지함
- **(연구와 사업 분리)** 융·복합화 되어가는 여성·아이·가족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책연구 부서 그리고 사업집행 부서로의 이중 관리체제로 조직구조 전환을 진단함. 즉, 기존의 연구사업부의 정책연구파트와 사업운영파트를 명확히 분리하여 ‘여성가족연구부’와 ‘여성가족사업부’를 분리하여 재편함이 효율적인 업무추진, 분야별 역량 전문화 및 강화, 그리고 성과에 대한 책임 명확화 등 여러 면에서 타당하고도 적합할 것이라는 진단 결과가 도출됨
 - 대내외 환경변화 및 기관의 성장과 발전 관점에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기능 확대에 따른 조직구성원들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최우선으로 연구와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큰 비중을 보임
 - 국내 사례 심층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을 비롯하여 국내 광역 단위의 여성가족재단의 경우에서도 정책 연구와 추진 사업을 구분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그리고 해외 선진국 또한 정책 연구와 사업운영(기금 집행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연구부와 사업부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FGI 조사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정책 연구와 사업 영역으로 분리하여 한층 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행 기관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함
- 연구부의 경우 점차 다른 수행주체들과 함께하는 복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고, 사업부는 점차 질적으로 고도화된 사업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추세이므로 각기 다른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수행하여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음
- 한편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달성하고자 하는 미션·비전 및 목표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존 여성정책 중심에서 여성·가족으로의 사업영역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부서 명칭을 여성가족연구부와 여성가족사업부로 제안하는 주장이 다수로 나타남

○ (저출생 위기 모니터링단 신설) 진단결과에 대한 최종회의 논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중심으로 “저출생 위기 모니터링단”을 신설하고자 함

- 연구기능과 사업기능 각각의 기능적 역량 강화와 육성을 위해 두 기능을 분리하지만 책임 관리의 운영을 위하여 “저출생 위기 모니터링단”을 신설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함
- 경상북도 본청의 저출생위기 극복 본부장, 관련 부서장,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의 원장, 기획실장, 부서장 그리고 외부 전문가(정책분석, 성과평가, 공공관리 분야 등 전문가) 등으로 구성함
- 월단위 그리고 분기단위 현장 동향 파악 및 분석, 정책 연구 및 추진 사업 연계 조율, 이해관계자 갈등 및 문제점 진단 해결, 연구 및 사업 추진성과 점검·평가 등 정례적인 점검시스템 운영 등 정례적인 점검시스템을 운영

할 필요가 있음

- 분기별로는 경상북도 내 지역 특성 및 인구규모 등을 감안하여 3그룹으로 나누어 저출생 위기 극복 모니터링을 실시함
- A 그룹(3개 산업 및 연구도시, 인구 116만, 1분기):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 B 그룹(7개시 중소도시, 인구 90만, 2분기): 경주시, 안동시, 김천시, 영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 C 그룹(12개 군단위 지역, 인구 49만, 3-4분기): 칠곡군, 예천군, 의성군, 울진군, 성주군, 청도군, 영덕군, 고령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울릉군

○ **(여성가족연구부의 신설·재편)**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는 동시에 기관의 성장 및 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연구 기능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FGI조사 결과에서도 저출생 전반에 대한 정책 개발·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다수 개진되었는데, 특히 완전 돌봄, 일·생활균형, 돌봄 보육, 저출생 데이터 등 개발원의 핵심 추진사업들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돌봄보육) 경상북도의 완전돌봄에서 강조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인 K-보듬센터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장애아, 영아 지원 등),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양육가정 지원, 초등돌봄 및 늘봄학교 운영 내실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가 긴요함
- (여성가족) 결혼·출산 정책, 한부모, 이민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 정책, 초고령사회 대응, 경력보유여성 경력유지(교육 및 상담 등), 여성(청년, 고령) 취·창업 원스톱 지원 등에 대한 정책 연구가 필요함
-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확대, 성평등지수 및 여성대표성 제고,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확산, 양성평등 교육 확산 및 실천 캠페인, 성별영향

평가, 성인지 예산 컨설팅 등에 대한 정책 연구 또한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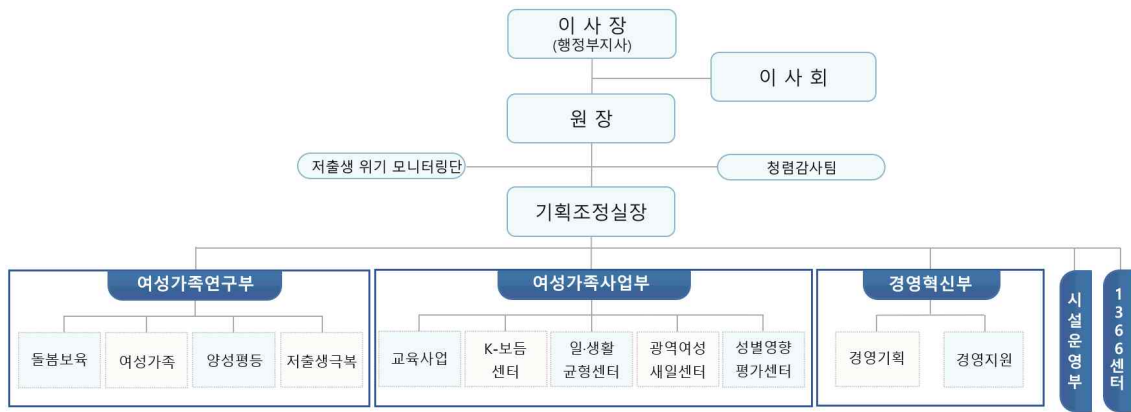
- (저출생 극복) 저출생 관련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 저출생 관련 통계 데이터 동향 분석, 경북 통계 데이터 확보 등을 통해 저출생 관련 분야 기초 데이터 수집·축적에 대한 영역의 확대가 필요함

○ **(여성가족사업부의 신설·재편)** 여성가족사업부 신설을 통해 여성·가족·아이, 저출생 극복과 관련된 광역지원기관 등의 유관 사업들을 주도적이고도 전문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음

- 돌봄교육 사업은 대내외적 환경 및 현황 분석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분야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설문조사와 FGI조사 결과에서도 가장 필요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현재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독립적 부서로 운영하고 있는 ‘경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성별영향평가센터’를 비롯하여 ‘K-보듬센터’, ‘일·생활균형센터’와 같은 신규 사업들을 통합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사업부’에 신설·재편하여 사업영역 확장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탁사업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경영혁신부의 신설·재편)** 기존 기획관리부에서 경영혁신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외협력 기능 강화가 필요함. 이와 함께 개발원의 위상 제고 관점에서 경영기획 및 지원 영역에서의 홍보기능 등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 경상북도 여성·아이·가족 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양성평등한 미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도내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임. 이에 청년, 학계/전문가 등 경북도민 참여 중심의 커뮤니티를 확장하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 이슈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기능 활성화 및 양성평등 정책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64] 경북여성정책개발원 TO-BE 조직도

- 가칭 “저출생 극복 실행기관”의 인력을 현재 28명에서 49명으로 확대하여 재설계함
- 재설계(안)에서는 총 49명으로 원장 1명, 기획조정실장 1명, 저출생연구부 15명, 저출생사업부 20명, 경영혁신부 9명, 시설운영부 3명임

<표 50> 인력 재설계(안)

구분	인력확대(정원)			
	2024		재설계(안)	
	연구	사무	연구	사무
원장	1		1	
기획조정실장	1		1	
여성가족연구부	10		13(+3)	
여성가족사업부		6		20(+14)
경영혁신부		7		9(+2)
시설운영부		3		3
합계	28		45(+19)	

-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여성가족연구부 재설계(안)의 총 인력은 15명으로 기존 10명에 추가로 5명의 인력증원이 필요함
- 첫째, 국외사례 분석 및 1단계/2단계 실증 조사결과, 돌봄 분야는 가장 중시 해야 할 핵심 분야로 진단되었으며 3단계 FGI조사 결과에서도 돌봄보육 연구 분

야는 현재 경상북도 본청의 정책 기조와 연동하여 향후 적극 추진되어야 할 실무분야로 강조됨. 이러한 맥락에서 경상북도의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선제적 돌봄 정책추진을 위한 돌봄 관련 문제 발굴·정책 동향 분석·정책 개발 등을 전담하여 효과적으로 역할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 인력 1명의 확충이 긴요한 상황임

- 둘째, 여성가족 연구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외 사례 분석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일과 가정 병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가중하게 됨에 따라서 여성 자아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정책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 최근 일·생활 균형의 경우 남성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반영한 일·생활 균형 관련 연구 인력이 필요하며, 3단계 FGI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가족기능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토대 구축, 직장여성들의 출산 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책 강구 등과 연관된 연구 인력 2명의 인력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
- 셋째, 3단계 FGI조사 결과에 의하면, 저출생 극복 연구 분야에서의 경북지역만의 저출생 관련 데이터 구축과 관리가 필요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 반영한 질적 연구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함
- 효율적인 인력배분을 위해 조직의 미션 및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외국인 취업자 정착화 분야(프랑스), 저출생 관련 데이터 베이스 구축(일본) 분야에 인력규모의 비중을 둔 것에 비추어 이를 적용함
- 이를 위해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다각적이고도 유용한 지표의 개발, 경북지역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 돌봄지원 사업 등의 성과점검 관련 데이터 구축 등을 위해서는 저출생 빅데이터 확충 및 활용 관련 연구 인력 2명이 요구됨

〈표 51〉 여성가족연구부 인력 재설계(안)

구분		인력확대(정원)			
		2024		재설계(안)	
		연구	사무	연구	사무
여성가족연구부		10		13	
	돌봄보육팀	2		3(+1)	
	여성가족팀	6		6	
	양성평등팀	2		2	
	저출생극복팀			2(+2)	
소계		10		13(+3)	

- 여성가족사업부 재설계(안)의 총 인력은 20명으로 기존 6명보다 14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함
- 첫째, K-보듬센터의 경우 직영센터 7개를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센터장 1명, 직원 7명이 필요하며, 추후 K-보듬 시설 규모 확대에 따른 인력 확대가 요구됨. 이는 국내 돌봄지원기관 신설 시 최소 각 센터별 1명의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운영·관리하고 더불어 관련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센터장을 포함하여 업무수행 인력이 확충되어야 할 것임
 - 둘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는 일·생활균형제도의 정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각 단계별 실증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특히 경상북도의 경우 농어촌, 중소도시, 산업도시 성격 등을 모두 내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각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일·생활 균형제도 관련 서비스 제공 그리고 필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센터장 1명 그리고 사업운영·관리 관련 3명의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성별영향센터의 경우 수탁사업을 진행되고 있어 기관 내 운영점검 및 성과관리, 협력 및 지원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 1명이 필요함

〈표 52〉 여성가족사업부 인력 재설계(안)

구분		인력확대(정원)			
		2024		재설계(안)	
		연구	사무	연구	사무
여성가족사업부			6		19+1*
	교육사업팀		5		5
	K-보듬센터				8(+8)
	일 생활균형센터				4(+4)
	광역여성새일센터		1		1
	성별영향평가센터				1(+1)
소계		6		20(+14)	

* 여성가족부 부장 1명

○ 경영혁신부 재설계(안)의 총 인력은 9명으로 기존 7명보다 2명의 인력증원이 요구됨

- 1단계/2단계 실증 조사결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행기능의 확대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경영지원분야의 인력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남. 3단계 FGI조사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경상북도 저출생 위기극복 관련 정책을 경북도 브랜드화 대응 차원에서도 경상북도의 관련 정책 개발 및 추진 성과 등에 대한 기획 홍보 그리고 정책 동향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비롯하여 가칭 ‘여성가족정책개발원’의 위상 정립 및 전략적·체계적 운영과 관련된 업무수행 인력 2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시설운영부의 경우 아직은 현 수준에서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남

〈표 53〉 경영혁신부 및 시설운영부 인력 재설계(안)

구분		인력확대(정원)			
		2024		재설계(안)	
		연구	사무	연구	사무
경영혁신부			7		9
	경영기획팀		4		5(+1)
	경영지원팀		3		4(+1)
소계		7		9(+2)	
시설운영부			3		3

제3절 조직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제언

1. 중앙정부 관련 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 내실화

- 가외성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개별 차원의 정책추진만으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실행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관련 부처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과 경상북도 간의 동반자적 역할 수행을 위한 보다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거시적이고도 장기 대응적인 저출산 정책의 기틀을 강구하고, 더불어 예산확보 및 배분, 법·제도 운영의 현실화, 일원적이고도 통일적인 정책구현의 방향성 등을 정립하는 역할에 치중하고, 반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 대상 정책 수요를 반영한 정책집행 성과의 극대화, 지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지역 특성에 부합한 탄력적인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는 집행적 역할에 치중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를 위한 저출산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수적임
 - 특히 공통 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는 정책 방향 및 기획 과정, 집행계획의 설정 등에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고, 정책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역 실정에 부합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자유재량 및 자율성 등을 어느 정도 지자체에 부여하여 지자체 상황 및 여건에 맞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고찰해 보면, 중앙정부 중심의

확일적이고도 특정적이며 경직화된 추진 형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구현할 수 있도록 재량권 부여를 장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유기적인 정책실행 협력체계를 구성 및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음

2. 단기 성과평가 후 조직재정립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재설계(안)에 따라 구성된 가칭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을 2~3년 운영 이후, 조직운영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체계적인 성과(K-보듬 효과, 출산을 증가, 고객만족 등) 평가를 도모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의 실효성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의 조직역량 강화 차원에서의 재편과 더불어 수행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 조직재편(안)

- FGI를 통한 전문가 다수의 제안 내용으로 1단계 조직재설계에 따른 실행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이후, 명확한 성과에 따라 기관의 역량 강화 차원에서 2단계 조직재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2단계 조직재편(안)으로는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연구부’, ‘여성가족사업부’, ‘경영혁신부’, ‘시설운영부’의 1실 4부 체제를 ‘기획조정실’, ‘여성가족연구실’, ‘여성가족사업실’, ‘경영혁신실(경영혁신부+시설운영부, ESG팀 신설)’의 3실 체제로 재편하고, 조직운영 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부원장 지원 체제를 새로이 마련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조직운영 틀을 강구하는 방안을 제시함

2) 외국인 취업 및 정주 활성화 관련 지원 역할 및 기능 신설

- 최근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경제활동인구를 충분히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외국인 취업(고용) 그리고 정주 및 귀화 활성화 등과 같은 능동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역 인구증대 정책 방안이 적극 모색되고 있음

- 취업비자 체류 기간 및 대상 업종 확대, 취업비자 총량제 도입 검토, 숙련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 기반의 비자 제도 활성화 등과 같은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 및 노력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용인력에 대한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책까지 고려·확대하고 있음
- 이에 외국인 취업(고용) 및 정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교육, 언어교육, 주거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정책연구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을 주도적이고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 기관 내에 새로운 담당 부서의 신설 및 인력 확충이 요구됨

3. 경상북도 돌봄서비스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1) 저출생 위기 극복 민간전문위원회 및 기초단위 일선 보듬지원기관의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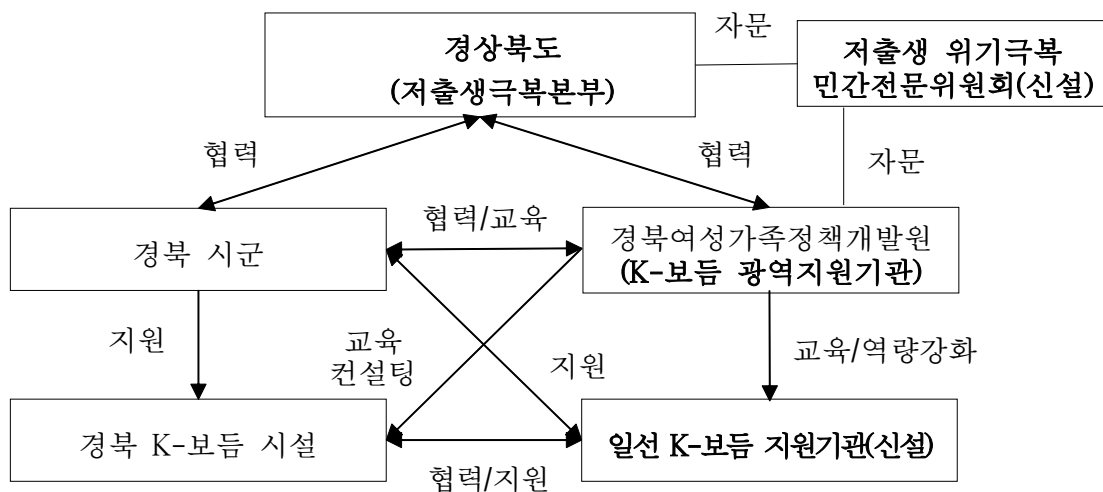
-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혼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관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 경제, 문화적 모든 요인과 인구학적 요인이 상호 작용으로 나타난 복잡하고도 다양한 영향 요인의 결과로 판단됨
- 따라서 전문지식이 없이는 각급 행정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저출산 위기 극복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 등의 사업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자문기관으로서 “저출생 위기 극복 민간전문위원회”의 신설이 긴요함
- 한편 시·군 단위 K-보듬 시설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합리적인 지원 등과 같은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시·군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가칭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을 K-보듬 광역지원기관으로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일선 K-보듬 지원기관을 새로이 신설하여 시·군 담당 공무원과 협조를 통한 운영 및 관리 실

행 업무를 수행하게 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자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과 관련하여 광역도 산하에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의 설치 그리고 시·군의 농촌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공간중간지원기관(일선 기관) 운영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방안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활용하는 것도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2) 돌봄서비스 유관기관 간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 가칭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경상북도 아이돌봄 광역지원기관으로서 돌봄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 현장점검, 콘텐츠 개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그리고 컨설팅 등을 도모하며, 아동의 보호 및 양육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경북여성가족정책개발원’과 더불어 신설된 민간전문위원회 및 기초단위 일선 K-보듬지원기관 그리고 시·군 지자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 및 지원 체제의 구축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임([그림 58] 참조)



[그림 65] 경북 돌봄분야의 조직운영 체계

[참고문헌]

- 류연규. (2024). 저출생 정책에서 인간 중심 패러다임 전환은 가능한가? - 자녀돌봄정책의 다차원적 평가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6(1), 7-37, 10.20970/kasw.2024.76.1.001
- 남빛하늘, 정서영. (2023). 스웨덴 스톡홀름대 인구통계학과 교수가 말하는 저출생 문제 해법_ “저출생은 돈이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 문제” . 인사이트코리아,(313), 28-29.
- 정서린. (2020). 경상북도 여성의 노동실태 및 저출생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김수현. (2018). 저출생 극복, 아이 키우기 좋아 아이 더 낳고 싶은 경북 구현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되어야. 경북여성정책개발원.
- 신효진. (2022-11-04).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돌봄과 사회적 경제: 가사돌봄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미. 비판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 김수영. (2024). 초저출생 사회, 여성은 왜 비혼과 비출산을 선택하는가 - 돌봄 재분배를 위한 법의 역할: 통계청 생활시간조사로 본 구조적 불평등을 중심으로. 젠더법학, 16(1), 1-63.
- 조명덕. (2010).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26(1), 1-31.
- 조명덕. (2010).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사회보장연구, 26(1), 1-31.
- 박준우, 여찬구. (2021).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해외 주요사례를 중심으로. 기업과혁신연구, 44(4), 261-280.
- 변수정 외. (2022).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김원규, 황원식. (2017).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진혜민. (2020). 돌봄공백 No!, 함께돌봄 Yes! 아이 키우기 좋은 경북 조성을 위한 경북형 종합 돌봄체계 구축. 경북여성정책개발원.=

EBN산업경제. (2022.10.19).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7037>, (검색일: 2024.09.10.).

전윤정. (2023).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NARS 입법과 정책 147호.

머니투데이. (2022.09.1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1613513675378>. (검색일: 2024.09.10.).

김형구. (2023).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

서정아, et al. (202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이혜영. (2011).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정서린. (2021). 경상북도 여성의 노동실태 및 저출생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신윤정. (2012). 프랑스 영유아 보육 정책 현황과 시사점.